

---

충 남 경 제 상 생  
**협력방안마련**  
**기본계획수립**

---





# 제 출 문

충청남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충남 경제상생 협력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월

충남연구원장 윤 황



---

# 충남경제상생 협력방안마련 기본계획수립

---

## Contents

<b>제1장 계획의 개요</b>	<b>1</b>
1. 추진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성격	5
3. 연구흐름 및 추진체계	7
 <b>제2장 경제상생협력 환경 및 여건검토</b>	 <b>11</b>
1. 법·제도적 환경	13
2. 정책 환경	23
3. 사업 여건	38
4. 세계 및 지역경제 여건	42
 <b>제3장 상생협력 사례 및 모델검토</b>	 <b>51</b>
1. 상생협력 사례	53
2. 기업 생태계 관점의 상생협력 모델	75
 <b>제4장 상생협력 의식조사</b>	 <b>79</b>
1. 조사개요	81
2. 조사결과	83
 <b>제5장 충남 경제상생협력 방안</b>	 <b>87</b>
1. SWOT분석 및 경제상생협력 기본방향	89
2. 핵심과제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91

3. 충남 경제상생협력 비전체계	93
4. 부문별 핵심과제 기본구상	95
5. 추진체계 및 실행 로드맵	131
6. 투자계획	134

<b>참고문헌</b>	<b>136</b>
-------------	------------

<b>부록</b>	<b>137</b>
-----------	------------

---

# 제1장

## 계획의 개요

---

1. 추진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성격
3. 연구흐름 및 추진체계



# 제1장 계획의 개요

## 1. 추진배경 및 목적

###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저성장을 넘어 코로나 19로 인한 역(-)성장 시대 도래 및 소득 양극화 심화

- 공급과잉 및 소비시장 감소에 기인한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우리 국민경제 및 충남 지역경제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추세임
  - 더욱이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로 역성장 하는 가운데 충남경제 성장률도 과거에 비해 둔화될 전망이다

#### ■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코로나 19로 인해 계층간 양극화 수준이 확대

- 충남의 소득 10분위 배율은 2008년 9.46에서 2018년 12.26으로 소득 양극화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10분위 소득계층과 1분위 소득계층의 격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sup>1)</sup>

#### ■ 이처럼 악화되는 대내외적 경제여건 변화 속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지역경제 구성주체 상호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특히, 포용성장의 관점에서 지역 내 주요 경제주체인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공공부문(도, 시군, 공공기관 등) 상호간 상생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할 전망이다

#### ■ 최근 들어 정부는 '상생과 공존'을 목적으로 관련법령을 제정 준비(발의) 중임

#### ■ 상생과 협력이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경제·사회 구현을 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을 2020년 9월 10일 발의

- 동 법령은 공공기관의 정책수행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우리 경제·사회 내 구성원간 호혜협력과 상생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

#### ■ 지역 공동체 당사자간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2020년 7.15일 발의

- 동 법령은 지역 상권 내 임대인, 임차인, 사업자간 공존과 상생을 기반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및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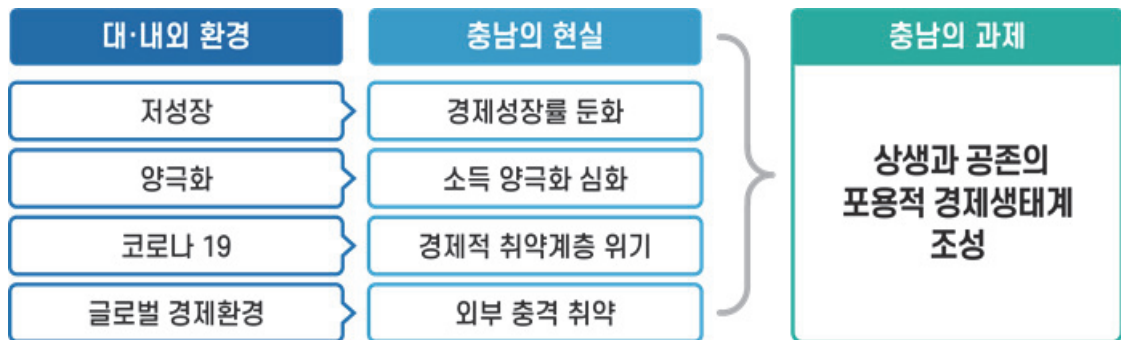
1) 소득 10분위 배율 = 상위 10%계층의 소득/하위 10%계층의 소득

- 상생협력과 관련한 일련의 법령발의로 상생협력의 참여주체 및 관련분야의 외연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과거의 상생협력정책은 주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경제 주체 상호간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전 분야로 상생협력의 외연이 확대되는 추세임
- 향후 관련법 제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충남형 상생협력 모델을 적극 발굴할 필요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과 연계한 충남형 상생협력 모델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필요

## 2) 연구의 목적

### ■ ‘상생과 공존’의 충남형 포용적 경제생태계 조성

- 상생과 공존의 포용적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충남형 상생협력 모델’ 발굴
  - 대·중소 기업생태계 및 지역상권 등 지역경제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충남형 상생협력의 정책방향성 설정 및 세부 실행방안 수립



[그림 1-1] 연구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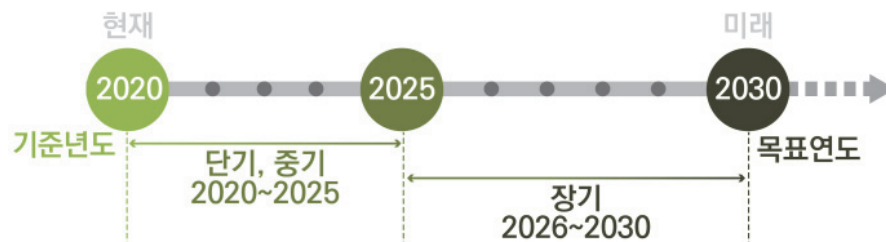


## 2. 연구범위 및 성격

### 1) 연구범위

#### ■ 시간적 범위

- 2021년 ~ 2030년 / 목표연도 2030년
  - 단기, 중기 : 2021년 ~ 2025년
  - 장기 : 2026년 ~ 2030년



[그림 1-2] 연구의 시간적 범위

#### ■ 내용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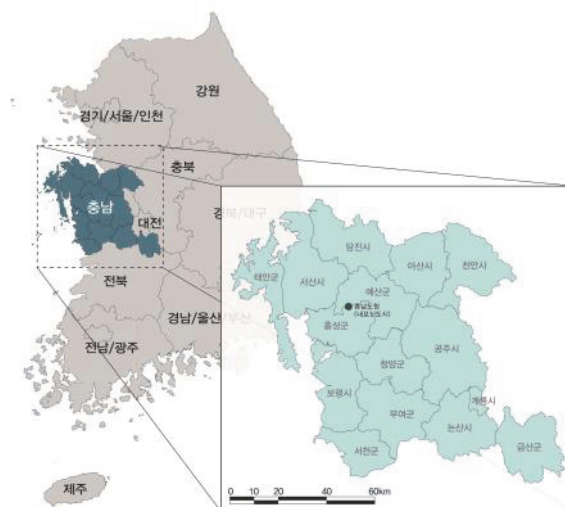
- 상생협력의 정의
  - 사전적 정의 :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서로 힘을 합쳐 돕는 일
  - 법률적 정의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 간 혹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受託企業)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분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 (상생협력법 제2조 제3항)
    - ▶ 기업 생태계 내 생산요소의 효율적 조달 및 공정거래 관점에서의 정의
- 상생협력의 조작적 정의를 토대로 상생협력 참여대상 및 분야의 범위 설정
  - 조작적 정의 : 충남 지역 경제생태계 내 다양한 경제주체 상호간에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동의 활동
  - 상생협력 참여대상 : 기업(대·중소기업, 공기업), 민간 취약계층(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정부(도, 시·군, 공공기관 등)
  - 상생협력 분야 : 사회·경제적 가치창출 전 분야(사회적 경제 및 지역공동체 등 기존 관련분야 제외)
- 발굴된 상생협력사업의 현실 작동 가능성 및 실효성 제고와 관련한 내용 중심
  - 공공이 지원하되, 민간의 자율적 참여기제를 반영한 사업 중심



[그림 1-3] 연구의 내용적 범위

## ■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전역
- 15개 시·군



[그림 1-4] 연구의 공간적 범위

## 2) 계획의 성격

■ 지역 내 다양한 경제주체를 아우르는 ‘상생과 공존’의 포용적 계획



[그림 1-5] 계획의 성격

## 3. 연구흐름 및 추진체계

### 1) 연구의 흐름

■ 연구 수립내용 및 흐름

- 미션인터뷰를 통한 연구목적 및 연구 범위 설정
  - 과업착수 전, 총 3차에 걸친 ‘충남 경제상생협력 방안 모색회의’를 통해 과업내용 및 과업방향 설정
  - 충남 경제상생협력 조정자문단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
- 도내 상생협력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방안 마련
  - 도내 다수의 경제주체(기업, 지방정부, 가게, 경제적 취약계층 등) 전반을 아우르는 ‘상생과 공존’의 ‘충남형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애로사항과 정책방향 및 지원수요(needs)파악
- 다수의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포럼을 통한 실질적 요구사항 분석 및 실천방안 도출
  - 기업, 전문가, 도민이 참여하는 포럼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각계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적용 가능한 핵심과제 발굴
  - 그간 추진정책과 요구사항 등이 반영되지 못한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사업모델에 반영

• 광의의 충남 도민 상생협력 사업 모델 제시

- 기존의 충남도 추진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실현가능성 높은 상생협력 사업 모색
- 기존 기업 중심의 상생협력에서 경제주체 전반을 아우르는 상생협력방안 추진



[그림 1-6] 연구의 흐름

## 2) 연구의 추진체계

### ■ 연구의 추진체계 및 연구진 구성

#### • 민·관·연 협력적 시스템을 갖춘 연구 수행

- 민(民) : 도민 상생협력 자문단을 통해 충남도내 경제상생협력관련 현장의견 수렴, 상생협력 방향성 설정 및 세부사업 선정 등
- 관(官) : 충남도 경제실 내 정책실무자 및 경제실 소관 경제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사업 검토 및 추진
- 연(研) : 충남연구원 외 연구자문단을 꾸려 연구지원 및 관리, 실무적 연구사항 검토, 경제상생 협력 포럼 및 세미나 지원 등



[그림 1-7] 연구 추진체계 및 연구진 구성



---

## 제2장

# 경제상생협력 환경 및 여건검토

---

1. 법·제도적 환경
2. 정책 환경
3. 사업 여건
4. 세계 및 지역경제 여건





## 제2장 경제상생협력 환경 및 여건검토

### 1. 법·제도적 환경

#### 1) 기존 법률 및 제도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상생협력법)

- 현행 국가법령 상 상생협력을 명시적으로 기술한 유일한 법
  - 상생협력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경쟁력 향상 및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 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자율성을 보장하고, 상생협력을 촉진 또한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 ▶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자본 참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환경경력협력 촉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등
- 상생협력법의 변화
  - 초기)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질서 확립,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 확산,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동반성장 지원점검체계 구축 등에 초점을 둠
    - ▶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설립 및 출범(2005년), 동반성장위원회 출범(2010년)
  - 현재) 대·중소기업·농어업 상생협력으로 정책대상과 사업 범위 확대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기관명 변경 및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 출범(2017년)



[그림 2-1] 상생협력법의 변화

## ■ 소상공인기본법

### •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 촉진

- 소상공인의 사회 및 경제적 지위 향상, 고용안정 도모, 지속가능한 경영안정 촉진을 위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
  - ▶ 창업촉진 및 성장, 인력확보 및 직무능력 향상 지원, 판로확보, 디지털화 지원, 사업장 환경 개선,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한 성장·발전 및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는 다양한 시책 실시(정부는 소상공인 사이의 협업사업에 필요한 시책 실시)
- 소상공인 보호시책
  - ▶ 경영안정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공제제도의 확립, 공정 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 등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소상공인법)

### •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활동 촉진 및 경영안정 도모

-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 촉진, 경영안정 및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함
-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협력단체 결성
  - ▶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상표 및 디자인 공동개발, 공동 판로 확보 등
  - ▶ 소상공인은 공동이익의 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개선,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중앙 및 지방자치 단체 장에게 의견 제시
-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 운영
  - ▶ 불공정 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은 운영하는 센터 설치 및 운영
-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역할
  - ▶ 소상공인의 공동구매 및 유통물류센터 구축 등 소상공인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 ▶ 전통시장 등의 상인 자조(自助) 조직 육성 지원
- 소상공인 기술개발 및 업종 간 교류, 소상공인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한 소상공인시장기금 활용
- 협업 등에 있어서 소상공인 연합회의 역할
  - ▶ 구매 및 판매 등에 대한 공동사업, 소상공인 조직화 지원 사업 등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 하도급법)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균형 있게 발전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여 균형있게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원사업자와 수급자 간 협약체결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 ▶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지원 및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토록 권장
    - ▶ 상호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 독려를 위해 포상 등 지원시책 마련
  - 부당한 하도급계약 체결 금지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나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등

## ■ 유통산업 발전법

-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
  - 유통산업의 효율적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워 소비자를 보호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축
    - ▶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 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발전협의회 구축
  -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 ▶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

## ■ 협동조합 기본법

-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에 기여
  -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대한 기본사항 규정,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 촉진
  - 협동조합의 목적 및 책무
    -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등은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고, 조합원의 경제·사회·문화적 수요에 부응
    -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등은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적극 수행
    - ▶ 다른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등과의 상호협력 및 공동사업 개발을 위해 노력
  - 국가 및 공공단체의 역할
    - ▶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사업에 적극 협조(자금 지원 등)

- ▶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국제지구, 외부 및 정부 기관과 교류 협력 사업 실시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 전통시장법)

### •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와 균형 있는 성장 도모

-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시장정비 촉진을 통한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목적으로 함
- 다양한 협력 방안 마련 및 지원
  - ▶ 지자체 장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에게 주변 시장과의 협력을 요청하고, 관련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 지원
  - ▶ 정부와 지자체는 대학 및 비영리법인, 단체가 시장 상권화에 대한 자문 및 지도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산학협력지원)
  - ▶ 상인회를 통한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규정

-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경제생활의 안정 도모
-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상가 임차인 보호
  - ▶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제한
  - ▶ 상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가짐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도시의 자생적 기반 확충으로 도시 경쟁력 제고

-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
- 국가시범지구 지정
  - ▶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고용재난 지역, 연구개발특구 등
- 상생협약
  - ▶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의 주민 및 상가건물 임차인 임대인 등은 상생협력을 체결하여 차임과 차임 인상률 안정화, 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상생협약 이행 시 우대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협약 당사자는 상생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

[표 2-1] 경제상생협력 직·간접 관련 법제 정리

법 명	목 적	협력 대상	상생 분야 및 기본방향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책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공공기관과 중소기업간의 협력 등	공공기관은 매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 작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제출
소상공인 기본법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 촉진,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및 고용안정도모를 위한 기본사항을 지정함으로써 국민경제 지속성장	소상공인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해 사업성장, 협업조직의 구성 및 운영	정부는 소상공인 사이의 협업사업에 필요한 시책 실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법)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 촉진,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 지위 향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조직화 및 협업화, 공동활용 및 공동개발 등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소상공인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 상호지원 및 협약 권장
유통산업 발전법	유통산업의 효율적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 발전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및 일수) 제한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 협동조합 활동 촉진	협동조합, 관련국제기구 등	상호협력 및 공동사업 개발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관련 사업에 적극 지원 및 협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경영 현대화, 시장정비 촉진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 균형성장	상인(회), 지역주민, 대학 및 비영리법인, 대규모 점포 등	대규모점포와 주변시장간의 협력, 상인회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	대규모 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요청, 및 관련 사업 추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경제생활의 안정 도모	임차인과 임대인	임대차 계약, 상가환경 개선, 공공인프라 조성, 자금유자 등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설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	임차인과 임대인	상생협력 체결을 통해 임대차 계약 안정화	국토부장관은 상생협약에 관한 표준내용을 정하여 고시

## 2) 발의법령

###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법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법’은 양극화 해소의 대안 중 하나로 2020년 9월 10일 발의됨
  - (제정목적)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사회에 공동체적 가치가 회복되고 호혜협력과 상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안 제1조)
  - (사회적 가치의 정의)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제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안 제2조)
- 사회적 가치의 구성요소와 관련한 동 법령상의 주요 내용
  - (구성요소) 인권, 안전, 보건·복지, 노동권, 사회적 약자, 상생협력, 일자리, 지역사회, 지역경제, 사회적 책임, 환경보전, 의사결정참여, 기타 공공성
  - (주요 내용) 사회적 가치의 주요 내용
    - 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 ②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 ③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 ④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 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의 증진
    - ⑥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 ⑦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⑧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 ⑨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 ⑩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 ⑪ 환경의 지속 가능성 보전
    - ⑫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 ⑬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 동 법령상의 공공기관 범위 및 책무(권고사항)
  - (공공기관 범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관, 지방직영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책무)

- ① 시도 지역별 추진계획 수립(5년)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매년)
- ②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 사회적 가치위원회에 제출
- ③ 사회적 가치 실현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지역 사회적 가치위원회구성·운영
- ④ 사회적 가치의 실현성과에 대한 매년 평가
- ⑤ 조달 및 계약 등 업무 수행 시 행·재정적 지원
- ⑥ 민간참여지원, 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등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지역 공동체 당사자간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2020년 7.15일 발의됨
  - (제정목적) 동 법률은 지역상권 구성원간의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자생적·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활성화 구역 정의)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말함
  - (지역상생구역 정의)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함(안 제2조)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른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이상 포함된 곳
    - ②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③ 제12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 곳이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
  - (자율상권구역 정의)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함(안 제2조)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른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이상 포함된 곳
    - ②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③ 제15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사업체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곳
  - (지역상생협의체 정의) 지역상생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
  - (자율상권조합 정의)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

- 동 법령상의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①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시행(안 제6조)
    - ② 활성화 구역 내 상인, 임대인 등은 상생협약 체결(안 제10조)
    - ③ 지역상권위원회 설치(안 제11조)
    - ④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제14조)
    - ⑤ 지역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제26조)
    - ⑥ 활성화 구역에 관한 특례 규정(안 제2조~제31조)
    - ⑦ 활성화 구역의 사업지원 업무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근거 규정(안 제32조)

- 동 법령상의 자치단체의 책무

- (자치단체 책무)

- ①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 ②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 ③ 활성화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 ④ 활성화 구역의 운영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제정
    - ⑤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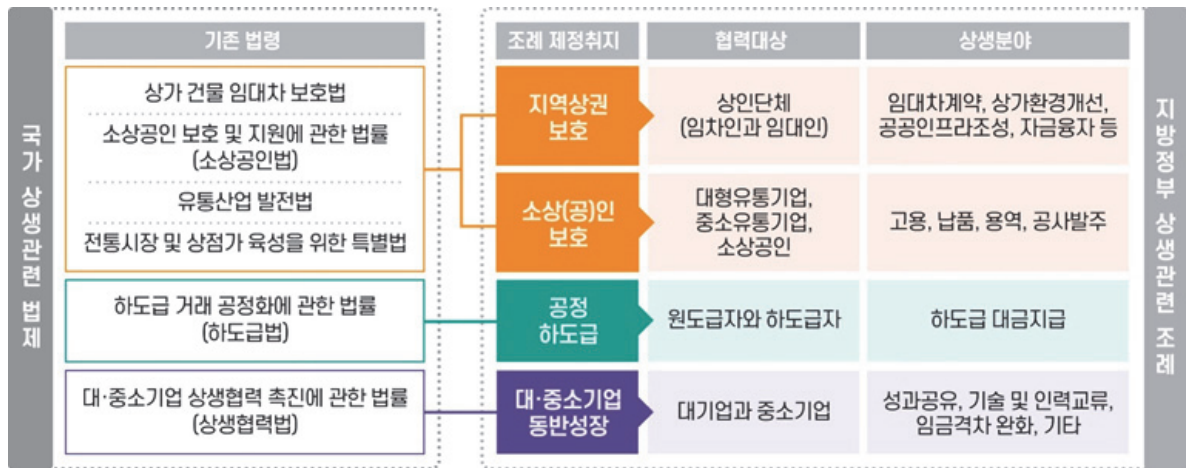
### 3) 지방정부 단위

#### ■ 자치법규정보 시스템 내 총 108개 조례 게시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는 단 1건(경기도가 유일)

- 총 108개의 조례 및 규칙 대부분은 지역상권 보호, 소상공(공)인 보호, 공동 하도급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 간 협력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조례는 각 1개에 불과
  - 지방정부 차원의 상생협력 관련 조례는 지역상권 보호, 지역 간 협력, 소상공(공)인 보호, 공정한도급,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음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그림 2-2] 경제상생협력 법·제도적 환경

#### 4) 충남도 차원

##### ■ 충청남도 경제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2020.12.30.)

- 동 조례는 도내 경제주체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사회·경제적 가치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함
  - 동 조례상에서 경제주체는 ①대기업, ②중소기업, ③소상공인, ④공공기관, ⑤대학, ⑥사회적 경제조직, ⑦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으로 정의됨
  - (상생협력 촉진사업)
    - ① 상생협력 환경조성 및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 ② 경제주체간 협업·교류 등을 위한 상생포럼
    - ③ 상생협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 ④ 상생협력 우수기업(기관)발굴 및 인센티브 지원
    - ⑤ 상생협력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상생협력 위원회 기능\_심의사항)
    - ①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 ② 상생협력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③ 상생협력 성공모델의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④ 상생협력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 ⑤ 상생협력 관련 도지사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충남 상생협력 종합지원센터 기능)
    - ① 상생협력사업 기획, 발굴, 모니터링 및 홍보

- ② 상생협력 실태조사 및 DB구축
- ③ 상생협력에 대한 제도, 정책 등 개선방안 의견수렴
- ④ 상생협력 관련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 ■ 도내 상생협력 관련 시·군 조례 및 규칙 총 8개 제정

- 지역상권 내 소상공인 보호 및 인근지역 간 연계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주목적으로 함
- 아산 2건, 예산 1건, 천안 4건, 홍성 1건 등 총 8개의 조례와 규칙을 제정·운용 중임

[표 2-2] 경제상생협력 분야별 주요 지자체 조례 및 규칙 특성

조례명	목 적	협력 대상	상생 분야
천안시 지역상생협력에 관한 기본조례	지역의 지속발전 및 지역상권 보호	임대인과 임차인	입점상인 보호대책, 관계법에 따른 지원 및 지역개발 사업,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
천안 아산 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지역주의 극복	천안시와 아산시	도서관 설치
천안 아산 상생협력 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두 지역 간 상생과 협력 도모	천안시와 아산시	공공 서비스
홍성군 유통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조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유통업 균형발전	대형마트, 기업 형 슈퍼마켓, 지역 소상공인	구매 및 판로, 소상공인 경쟁력 지원 주민채용, 상권, 지역업체 위탁 등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조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유통업 균형발전	대형마트, 기업 형 슈퍼마켓, 지역 소상공인	구매 및 판로, 소상공인 경쟁력 지원 주민채용, 상권, 지역업체 위탁 등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 2. 정책 환경

### 1) 기존계획 검토

#### (1) 제 1차 동반성장 기본계획(2008~2010)

##### ■ 협력형 기술개발 및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초점

- 공정한 거래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
  - 거래관행 및 결제조건 개선 등 하도급 제도 개선 위주
  - 공정거래와 관련하여 불공정 거래 조사 강화, 유통 및 건설 등 취약 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 감시, 사업조정제도 기능 활성화 등 추진
  - 수탁 및 위탁거래 실태조사 확대 및 실효성 확보 :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진 불공정 거래 적발기업에 대한 벌점제도 및 교육명령, 공공입찰 참가 제한 등

##### ■ 상생협력 분야별 추진계획

- 상생협력 파트너십 강화
  - 기술협력 부문
    - ▶ 상생협력형 공동 R&D확대, 환경에너지 파트너십 강화, 신뢰성·품질혁신지원, IT를 활용한 대중소 기업 네트워크 생산성 혁신, 대기업 특허기술 중소기업 이전 활성화
  - 자금·금융 지원부문
    - ▶ 기술협력네트워크론 도입, 생산운영자금 지원형 네트워크론 활성화, R&D사업화 자금지원
  - 인력개발부문
    - ▶ 대기업을 활용한 중소기업 경영지원 강화, 대기업의 전문직업훈련기관 및 전문교육과정 개방확대, 상생경영 최고경영자과정, 상생경영학교 운영 내실화, 중소기업 비정규직 직업능력 개발 및 근무여건 개선, 대기업 건강인프라 공유추진
  - 성과공유제 정착확산
    - ▶ 민간기업 성과공유제 확산 및 고도화, 공기업에 대한 성과공유제 확산
- 산업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원 사업 추진
  - 부품·소재,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플라스틱, 유통, 정보통신, 지식서비스업, 건설 등 9개 분야에서 기술 지원 및 자금 지원 등과 같은 전략사업 추진

• 공정거래문화 정착 추진

- 불공정거래 조사강화
  - ▶ 기업간 불공정 거래 관행개선,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확대 및 실효성 확보
- 자율적 공정거래 인프라 확충
  - ▶ 대중소기업간 사업조정제도 활성화, 원자재가격-납품단가 연동제도 확산유도, 자율적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 유도, 부처간 공정거래 협력네트워크 운영내실화, 공공부문 중소기업 공사발주제도 확산

• 상생협력의 지평확대

-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모델 확산
  - ▶ 1차 중심의 상생협력 모델 확산, 중소기업간 협업 파트너십 강화
- 글로벌 시장 지향형 상생협력 촉진
  - ▶ 패키지형 해외진출 지원강화, 대중소기업 공동마케팅 활성화, 대중소기업 해외 건설플랜트 공동수주지원
- 지역발전 기여형 상생협력 활성화
  - ▶ 대기업 지방이전 및 투자촉진, 대기업의 지역혁신클러스터 선도역할 제고
- 상생협력 기업문화 확산
  - ▶ 상생협력 주간제정, 상생협력 추진기업 인센티브 확대, 상생협력 지식커뮤니티 활성화

정책목표	「존경받는 대기업-역량있는 중견·중소기업」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 생태계 조성	
정책방향	시장중심의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인프라 확충	
① 상생협력 파트너십 강화		② 산업발전전략과 연계한 상생협력 추진
○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기술·인력·자금협력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보강		○ 산업별 여건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프로그램 발굴·추진
③ 신뢰에 기반한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		④ 상생협력의 지평 확대
○ 공정거래 분위기 조성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 확산		○ 대기업-1차협력업체 ⇒ 1차-2차 협력업체(중소기업)간 상생협력 ○ 국내시장 중심의 상생협력 ⇒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상생협력

자료 : 제1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그림 2-3] 제1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 (2) 제 2차 동반성장 기본계획(2011~2013)

### ■ 상생협력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 민간주도 방식의 동반성장 문화 정착

- 기존 상생협력의 한계 지적
  - 기업간 양극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하기 보다 대기업의 시혜적 입장 강조를 통한 즉각적·단기적 처방 선호
  - 네트워크의 경쟁력 강화보다 강자의 약자배려가 우선시 되어 중소기업의 역할 제한
  - 제도적 규제의 광범위한 적용 및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관여로 정부-산업계간 소모적 논쟁 유발
-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 정부주도의 정책은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프로그램만 조장한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민간주도의 자발적 동반성장 문화정착에 초점을 둠

	상생협력		동반성장
정책지향	납품단가, 결제조건 등 현안해결에 중점		중소기업의 근본적 자생력 강화 등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산업생태계 조성
경제효과	대기업 일방적 시혜 강조 및 성과배분에 초점이 맞춰져 대·중소기업간 갈등구조 지속(Zero Sum)	→	대·중소기업 각자의 인식전환 및 자발적 노력 촉진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Positive Sum)
추진방식	정부주도		민간 중심
기업범위	대기업 ↔ 1차 협력기업		대기업 ↔ 1차 및 2, 3차 협력기업

자료 : 제2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그림 2-4] 상생에서 동반성장으로의 전환

### ■ 불공정 거래관행 및 중소기업 자생력 관련 문제 인식

-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동반성장 추진체계 확립 및 거래 질서 개선
  - 납품단가 인하 요구, 중소기업 기술 탈취, 중소기업 간 과잉경쟁 및 높은 대기업 의존도 등 불공정 거래와 중소기업 자생력과 관련된 문제 파악
  - 민간합의제인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 중소기업 적합업종(품종) 선정 등 공정거래를 위한 거래질서 개선에 초점을 둠
  -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성장 경로를 파악한 지원정책 개편, 정부 R&D 지적재산권의 소유 및 배부 기준 정비 등과 같은 사업 추진



자료 : 제2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그림 2-5] 제2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

### (3) 제 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2014~2016)

#### ■ 공정과 상생을 넘어 성장사다리로 진화하는 동반성장 정착

##### • (기본방향)

- 협력파트너 관계실현을 통한 협력사의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 강화
- 참여주체 및 적용영역 확장을 통해 동반성장을 고도화
- 공정거래 활동을 내실화하고 불공정 관행개선을 지속
- 정부·공공기관은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전념

##### • (3대 전략)

- 성장사다리 구축
- 동반성장 문화 확산
- 공정거래 정착

##### • (6대 이행과제)

- 대기업의 중소기업 성장지원 강화
  - ▶ 대기업별 동반성장 자원을 연결하여 개방적으로 통합운영하는 민간주도형 협력플랫폼 구축 및 정부 사업 연계로 협력플랫폼의 시너지 제고
  - ▶ 대기업 직접투자 활성화 및 투자재원 확대
- 2, 3차 기업의 경쟁력 강화지원
  - ▶ 스마트 공장 보급 등 산업혁신 3.0확산·발전
  - ▶ 다자간 성과공유제 확산 및 상생결제시스템 확산
- 국내외 판로개척 및 인력지원
  - ▶ 해외시장 공동개척·진출, 국내시장 판로확대를 위한 기업간 연계협력
  - ▶ 대기업 브랜드와 역량을 활용한 중소기업 인력확보 및 역량강화 지원
- 동반성장 생태계 확장
  - ▶ 7대 서비스업 분야의 자발적 동반성장 강화, 중견기업 및 2,3차 협력사의 동반성장 참여확대
- 동반성장 인프라 강화
  - ▶ 성과공유제를 동반성장 모델로 정착확산, 공유가치 창출형 동반성장사다리 조성, 협력중소기업의 안전경영 확산지원
- 공정거래 제도 내실화
  - ▶ 기술탈취·유출방지 및 분쟁해결 기반 확성, 거래상 지위남용·부당행위 감시강화
  - ▶ 법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강화, 중소기업으로 비용전가 해소 등 거래관행 개선조치 적극 시행



자료 :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그림 2-6]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과제



#### (4) 제 4차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2018~2020)

##### ■ 대·중소기업간 신뢰기반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 저성장,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성장 기반조성을 위해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속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정책 추진
  - 공정경제에 기반한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하고 상생의 온기를 경제전반으로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환
- 상생협력정책 패러다임 전환
  - 문재인 정부는 저성장,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성장 기반조성을 위해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정책은 공정경제에 기반한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하고 상생의 온기를 경제전반으로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환



자료 : 제4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

[그림 2-7] 제4차 상생협력 추진기본계획 추진방향

- 계획의 주요내용

-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②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 및 기술인력교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 ③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④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⑤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및 적합업종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더 건고한 신뢰를 구축하는 상생협력의 세부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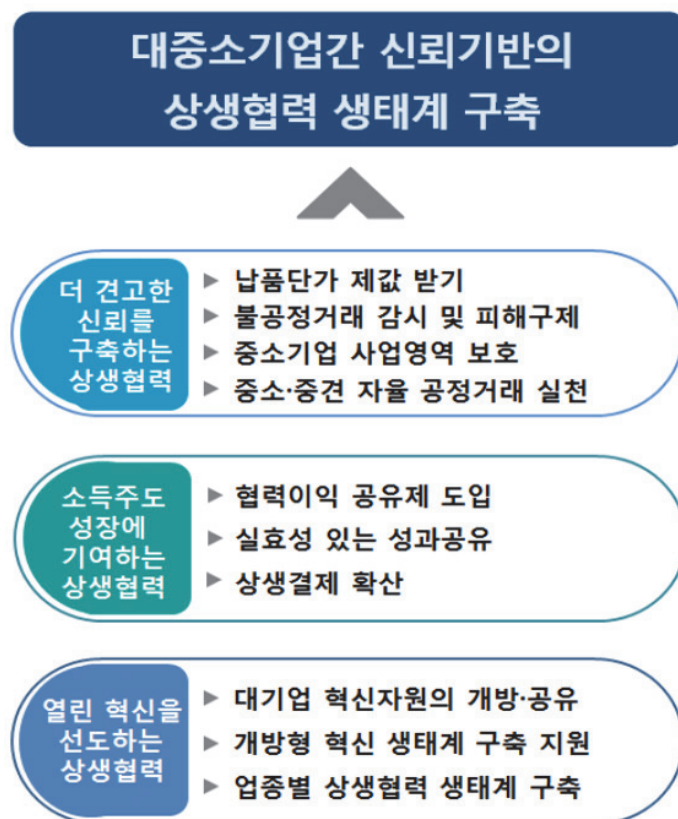
- 납품단가 제값 받기, 불공정 거래 감시 및 피해구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중소·중견 자율공정 거래 실천

-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는 상생협력 세부 정책과제

-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 실효성 있는 성과공유, 상생결제 확산

- 열린 혁신을 선도하는 상생협력 세부 정책과제

- 대기업 혁신자원의 개방공유, 개방형 혁신생태계 구축지원, 업종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그림 2-8] 제4차 상생협력 추진기본계획 세부 정책과제

## 2) 대·중소기업 관련 상생협력 정책 변화<sup>2)</sup>

### ■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로 인해, 상생협력 필요성 증대

- 2005년 5월 이후, 정부차원에서 상생협력 관련 법령 및 정책 추진체계 정비
  - 대·중소기업간 기술 및 인력을 비롯한 혁신역량 격차로 양극화 심화
  -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차이는 기업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필요성 증대
  - 2005년 5월부터 관련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08년 ~ 2014년 총 3차례에 걸쳐 관련 기본계획 수립

### ■ 정부 상생협력 정책 추진 내용

-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 1~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에서 매년 추진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은 납품단가 조정, 중소기업 기술 보호, 서면 계약, 결제수단(현금) 결제기간 등 주로 협력사와의 거래 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에 초점을 둔 정책 발굴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정책
  - 대기업 상생펀드 조성을 통한 협력사 금융지원, 공동 기술개발, 기술인력 파견 및 기술 협력, 동반 해외진출을 통한 판로개척, 협력사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 동반성장 문화 확산 정책
  - 동반성장 관련 법률 제정, 혁신클러스터 지정,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성과공유제 도입 등

### ■ 정부 주도 동반성장 기본계획 특징

- 2차 동반성장 기본계획 까지는 제조업 중심이었으나, 이후 분야 확대
  - 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 부터는 2,3차 협력사로 동반성장의 범위 확대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 구축에 초점을 둔 정책 발굴
  - 2,3차 협력사 성과공유제도 도입
  - 7대 분야(금융, 의료, 디자인, 물류, 유통, 문화 및 미디어, IT·SW 등)로 동반성장 확대
- 1~3차까지의 동반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평가
  - 첫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 부재

---

2) 경기연구원(2015), 경기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와 정책과제, 참고 재정리.

- 둘째, 상생협력이 1차 기업에 집중되는 등 중소기업 소득증대 효과 부족
- 셋째, 생색내기식 상생으로 대중소기업 혁신성장 유도 미흡
- 넷째, 개방형 혁신 등을 통한 상생생태계 구축에 대한 인식 부족

• 4차 상생협력 추진기본계획에서는 중소기업 역할 중요성 강조

- 동반성장 패러다임을 대기업 일방적 지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협업으로 전환할 필요성 강조
- 중견·대기업 중심의 Middle-up-down<sup>3)</sup>협력구조 강조, 장기 전속고래 기업 간 개방형 생태계 전환
- 동반성장의 효과가 생태계 구성원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 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으로 확대

[표 2-3] 상생협력 관련 정책 추진 경과 및 내용

일 자	추진 경과	주요 내용
'05. 05	1차 상생협력 대책회의	정부 및 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
'05. 07	2차 상생협력 점검회의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05. 12	3차 상생협력 간담회	상생협력 확산방안 마련
'06. 05	4차 상생협력 보고회의	상생협력 이론적 토대 구축
'06. 12	5차 상생협력 성과보고회	국가 산업발전전략과 연계한 상생협력
'07. 09	6차 상생협력 성과보고회	상생협력 성과평가 및 향후과제 도출
'08. 0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1차 기본계획 수립('08~'10)	존경받는 대기업과 역량 있는 중견·중소기업이 조화로운 상생생태계 조성
'10. 09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발표	공정한 동반성장의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11. 05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2차 기본계획 수립('11~'13)	대·중소기업 간 동반자 관계 정립을 통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14. 1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3차 기본계획 수립('14~'16)	공정과 상생을 넘어 성장사다리로 진화하는 동반성장 정착
'17. 0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4차 기본계획 수립('17~'19)	동반성장 생태계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

3) Middle-up-down협력구조란 1차 협력업체가 위탁 대기업을 밀어주면서 2차 협력업체를 끌어주는 형태를 의미함

### 3) 중앙부처 정책 방향

#### (1) 2020년 중앙부처 경제정책

##### ■ 상생부문 2019년 정책평가

- ‘혁신적 포용국가’ 성과창출 및 경제활력 제고
  - 경제 활력 제고에 방점을 두면서 포용강화 미래대비 등의 정책방향에 집중
  - 특히 미래대비를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사례를 창출한 것은 큰 의의
    - ▶ 지역 노사민정 간 타협에 기반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  
(상생협력 6곳 체결 : 광주, 밀양, 대구, 구미, 황성, 군산 → 5,500명 고용창출 추정)

##### ■ 2020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 경제사회 전반에 ‘공정·상생·포용’의 가치 확산

-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기반 강화
  -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시리즈로 발굴 및 홍보
  - 동반성장 평가 공공기관 확대, 대기업의 자율적 일감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공정거래 협약 및 동반성장 지수 평가기준 개선 (‘19년 58개 → ’20년 133개)
  - 모범사례가 될 공공기관 추가선정, 공공기관의 거래 관행 개선을 촉진하고 이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지방 공기업도 공정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반영, 파급력이 큰 주요 지자체의 공기업 모범사례 발굴
  - 내부거래가 많은 분야(물류, 광고대행, MRO 등)에서 대기업의 자율적 일감나누기 유도
    - ▶ 일감나누기 실적을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반영
  - 동반성장위원회의 ‘혁신형 임금격차 해소운동’,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컨설팅’연계를 통해, 임금 격차 해소운동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상생형 일터혁신 컨설팅 제공
  - 대기업이 다수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할 경우 지원 확대
- 지역 및 업종 등의 단위에서 노사협력 지원
  -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선정 시, ‘기업 간 상생협력’ 가점 부여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내 복지 서비스 종류 및 제휴기업을 확대하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도록 유도
  -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공동근로복지제도 도입, 원하청 상생협력 방안 마련 등 노사협력을 중점 지원

-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의 안착**

- '20년 중,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추가창출하고, 단계별 심층컨설팅 제공 등을 통한 지역별 맞춤 모델 개발
  - ▶ (초기) 지역별 일자리 모델 개발이 가능한 사업 분석  
(모델 구축) 사업기획 지원  
(수립단계) 전문분야(금융, 법률, 회계, 노사, 타당성, 입지 등) 컨설팅 지원 등
- 균특법 통과 이후 상생형 일자리 심의회 구성 및 선정 등 후속조치 진행
  - ▶ 이미 체결된 상생협약 모델들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회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상생형 일자리'로 선정
  - ▶ 선정 모델에 대해서 기업·근로자에게 재정, 세제, 금융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한 신속한 투자·고용 촉진

## (2)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 **자발적 상생협력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 기업 간 상생을 위하여 매입금액이 전년대비 증가하거나, 매입금액 중 일부를 이미 지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유예
- 중소기업사 자금 선지급 등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생협력기업이 법인세 납부연장을 신청할 시, 납부유예 적극 검토
- 착한 프랜차이즈운동 지속(가맹본부 - 가맹점 점주 간 상생 확산)
- 비대면, 온라인 경제 등 스마트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상생협력 하는 "자상한 기업" 발굴 및 우대
- 선사와 화주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우수선회주 기업'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혜택 제공

-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

- 민간 전문가 주로의 자율상생 유도를 위하여 사업조정 권고에 앞선 '자율 사업조정 협의회' 도입 및 운영
-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압류방지통장으로 지정, 현금(예금) 잔액 기반 상생결제 시스템 신규 구축
-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업종 단위 코로나19 위기극복, 고용유지 상생협력 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 가맹본부, 점주 등의 애로·분쟁 등을 현장에서 밀착지원하고, 상생촉진을 위한 가맹종합지원센터 위탁 지정 추진

- 공공기관 상생문화 선도

-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대상 확대,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 노력 등을 평가에 반영

▶ (현재) 58개 기관 → (향후) 135개 기관 확대 (전체 공기업 및 준정부 공공기관 대상)

-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도 대상을 중소기업 우선조달제품으로 확대하여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확산

## ■ 상생형 일자리 지원 추진

- 상생협약체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추진

- 대상지역 : 광주('19.1), 밀양('19.6), 구미('19.7), 황성('19.8), 군산('19.10), 부산('20.6), 대구('19.6)
- 기업 및 근로자에게 재정·세제·금융·인프라 등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여 신속한 고용·투자 촉진
- 신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발굴 위한 컨설팅 등의 노력 지속



[그림 2-9] 상생형 지역일자리 현황

### (3) 상생협력부문 내 중소기업 양극화 완화 정책

#### ■ 경제 및 사회의 양극화 해소, 국가 및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요건

- 동반성장은 양극화 해소, 기업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기업 양극화는 기업 간 경제적 격차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삶의 질·복지 등의 양극화로 까지 이어져 경제 및 사회 전반의 통합과 활력을 저해함
  - 지속적인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반성장은 중요한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기업 생태계 내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중소기업-중소기업, 대기업-중소기업)간 역량강화 및 신뢰 구축이 필요
  - 동반성장은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위한 생존전략으로 작용

#### ■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완화 추진

- 포용적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기업 간 양극화 완화 추진
  - ‘상생과 공존’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철학(박영선 장관)
-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 확충(2020년 하반기 경제 정책)
  - 고용 분야 :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
  - 상생 분야 : 공정경제 및 자발적 상생협력 확산방안 추진
- 공정경제 및 자발적 상생협력의 확산 방안
  - 자발적 상생협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 기업간 상생을 위해 매입금액이 전년대비 증가하거나 매입금액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중소기업 대상 정기세무조사 유예
    - ▶ 중소협력사 자금 선지급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생협력기업이 법인세 납부연장 신청 시 납부 유예 검토·지원
    - ▶ 가맹주-점주간 상생확산을 위한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지속
    - ▶ 비대면·온라인 경제 등 스마트 분야 자살한 기업 발굴 및 우대조치 추진
    - ▶ 우수선 화주기업 선정 및 혜택 제공
  -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 기반 확충
    - ▶ 민간주도의 자율사업조정협의회 도입·운영
    - ▶ 상생결제 예치계좌의 압류방지통장 지정 및 현금 잔액 기반 상생결제 시스템 구축
    - ▶ 코로나 19위기 극복 및 고용유지 상생협력 사례 발굴·확산
    - ▶ 가맹본부-점주간 상생촉진을 위한 가맹종합지원센터 위탁지정 및 현장 밀착지원



- 공공기관의 상생문화 확산 선도
  - ▶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대상 확대 및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상생노력 평가반영<sup>4)</sup>
  - ▶ 공공조달 상생협력제도 대상을 중소기업 우선조달제품으로 확대<sup>5)</sup>
-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
  - ▶ 기부금 투명성 제고
  - ▶ 민간역량강화 등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 사회적 경제기업의 책임성 제고 및 활성화 촉진
  - ▶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내실화 및 관리·감독 강화
  - ▶ 주요 사회서비스 분야별 사회적 경제조직의 참여·연계 확대방안 마련
  - ▶ 사회적 경제기업 연합체 설립지원, 재정·금융지원 강화를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생존과 스케일업 뒷받침



[그림 2-10] 상생협력 확산방안

4) 2007년 이후, 상생협력법 제 19조 의거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수행 강화를 위해 매년 1회 동반성장 평가를 실시하며, 현행 58개 기관에서 135개 기관(전 공기업·준정부 공공기관)으로 확대

5) (현행)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334개 제품 → (개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품

### 3. 사업 여건

#### 1) 중앙정부

##### ■ 상생협력을 위한 중앙부처 사업 개요

- ('13~'18) 중소기업 지원포털 기업마당(Bizinfo)에 게시된 상생협력 관련사업 개요
  - 총 사업 수 : 311건(중소·중견기업 대상 150건)
  - 지원 분야 : 동반성장, 경영, 금융, 기술, 수출, 창업, 인력, 내수 등
  - 관련 부처 : 중기부, 환경부, 행안부, 과기부, 방통위, 해수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용부, 기재부, 문체부, 산업부, 국토부, 방위사업청, 국세청 등
  - 정책전달 체계 및 수요자  
(정책 공급자) 각 부처 및 산하 출자·출연 기관 → (정책수요자)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 1인 기업, 예비 창업자, 생산자 단체, 농촌공동체 회사 등

#### 2) 지방정부

##### ■ 지방정부는 각 부처의 상생협력 사업과 연계 하거나, 별도의 자체사업 추진

- 2010년대에 들어 지방정부는 정부 각 부처의 상생협력 사업과 연계 하거나 별도의 자체사업 추진
  - 다만, 최근에 들어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소수의 지원 사업만을 추진하는 추세임<sup>6)</sup>
- ('13~'18) 17개 광역시도(세종시 포함)의 상생협력 관련사업 개요
  - 총 사업 수 : 336건(중소·중견기업 대상 131건)
  - 지원 분야 : 동반성장, 경영, 금융, 기술, 수출, 창업, 인력, 내수 등
  - 정책 전달체계  
(정책 공급자) 광역 시·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 → (정책 수요자)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1인 기업, 예비 창업자, 생산자 단체, 농촌 공동체 회사, 법인, 영농조합, 식품 경영체, 두레기업 등

---

6) 기업마당(Bizinfo)에서 확인한 결과, 과거에 비해 등록된 사업수는 급감하는 추세이긴 하나 실제로 사업 자체의 감소인지 지자체에서의 미등록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3) 충남도

#### ■ 충남도는 여타 광역 지자체와 대동소이

##### • ('13~'20) 충남도 상생협력 관련 사업 개요

- 총 사업 수 : 27건
- 지원 분야 : 동반성장, 경영, 내수, 금융, 창업(5개 분야)
- 정책 전달체계  
(정책 공급자) 충남도 및 산하 출자·출연 기관 → (정책 수요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 체결 기업, 소상공인, 생산자 단체, 농촌공동체 회사,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식품경영체, 두레기업, 전통 시장 및 상점가 등
- 도 출연·출자기관 :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테크노파크

##### • 상생협력사업은 각 부처 사업과 연계하거나, 별도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경향

- 최근 5년('16~'20) 기간 중 추진된 사업은 4개 분야 총 18건이나, 2017년 이후 신규로 추진된 사업은 3건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그림 2-1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충남도 사업여건 비교

[표 2-4] 충남도 상생협력 사업

분야	지원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사업년도	주관기관
동반성장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구축	스마트 제조 · R&D, 자동화 구축, 인력육성을 위한 컨설팅 교육	중소기업	2020	충남테크노파크
동반성장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구축	스마트 제조 · R&D, 자동화 구축, 인력육성을 위한 컨설팅 교육	중소기업	2019	충남테크노파크
동반성장	생산성혁신파트너십지원사업	생산 · 품질 · 원가 · 설비관리및생산시스템구축 등	대 · 중소기업동반성장협약체결기업	2018	충남경제진흥원
동반성장	대 · 중소기업동반성장협력사업	생산성혁신파트너십(현장진단, 역량강화, 사후관리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2017	충남경제진흥원
동반성장	대 · 중소기업동반성장협력사업	생산성혁신, 해외동반진출, 기업맞춤형협력프로그램지원	대 · 중소기업동반성장협약체결기업	2016	충남경제진흥원
동반성장	산림소득공모사업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40%, 지방비20%, 자부담40%)	생산지단체, 전문임업인	2015	충청남도
동반성장	농촌공동체회사우수사업지원	사업기획 · 개발 · 마케팅 · 홍보	농촌공동체회사	2015	충청남도
동반성장	소상공인기업승계기업지원사업	경영지원금 및 기업승계기업현판제작	소상공인기업	2015	충남경제진흥원
창업	마을기업추가육성	사업비 및 인건비, 단체운영관련 교육 및 컨설팅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2015	충청남도
경영	전통주및전통 · 발효식품육성사업	전통주, 전통발효식품 제조업체 시설현대화 및 공장신개축	전통주 및 전통발효식품 경영체	2015	충청남도
창업	두레기업창업및육성지원사업	연구개발비, 홍보마케팅, 제품개발비, 공동브랜드개발비, 설계비, 시설비 등	충남 소재 두레기업, 우량기업	2015	충청남도
동반성장	소상공인택배비지원사업	업체당, 사업기간내 최대 2백만원 내 택배비지원	택배판매 소상공인	2015	충남경제진흥원
동반성장	소상공인프랜차이즈가맹본부설립지원사업	가맹계약서등록및개발, 가맹점모집 · 계약, BI, CI, 네이밍, 브랜드캐릭터개발 등	소상공인	2015	충남경제진흥원
내수	지역컨소시엄구성지원사업	홍보및마케팅, 사업추진역량강화, 디자인개발 소요되는 비용 등	농업생산자단체 컨소시엄	2015	충청남도
금융	메르스영향소상공인 · 중소기업경영안정보증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자금지원 (기업당 5천만원 이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2015	충남신용보증재단
창업	두레기업창업및육성지원사업	창업및육성을 위해 연구개발비, 홍보마케팅, 제품개발비 등 지원	두레기업, 우량기업	2015	충청남도

(계 속)

분야	지원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사업년도	주관기관
동반성장	소상공인지급지원사업	창업비용, 경영개선자금 등 자금융자지원	소상공인	2015	충남신용보증재단
창업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사업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지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015	충청남도
동반성장	소상공인프랜차이즈기맹본부설립지원	프랜차이즈시스템개발 및 디자인개발	소상공인	2014	충남경제진흥원
동반성장	소상공인협업마케팅지원사업	500만원한도내로 공동 마케팅비용 지원	소상공인	2014	충남경제진흥원
동반성장	전통시장·상점가활성화경영혁신지원	공동마케팅, 구조개선공동사업, 상인대학운영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2014	충청남도
동반성장	소상공인지급지원사업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 자금 융자지원	소상공인	2014	충남신용보증재단
금융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사업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경영안정자금, 혁신형중소기업자금 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2014	충청남도
내수	소상공인QR코드 및 웹페이지제작지원	디자인QR코드 및 모바일 웹페이지, 디자인QR코드 활용제품 지원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2013	충남경제진흥원
동반성장	전통시장·상점가활성화경영혁신사업	마케팅, 상인교육 및 상인협동화, 시장활성화 지원	전통시장및상점가	2013	충청남도
동반성장	마을기업육성	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비 및 인건비, 단체운영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2013	충청남도
금융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경영안정자금, 혁신형중소기업자금 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2013	충청남도

자료 : 기업마당(<https://www.bizinfo.go.kr/>) 및 충남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 각 년도.

## 4. 세계 및 지역경제 여건

### 1) 최근 세계경기 특징과 향후 전망<sup>7)</sup>

#### ■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기 회복과정의 특징

- 선진국 중심의 상품소비 회복이 글로벌 경기개선을 견인
  - 주요국 정책지원이 강화된 데다 자산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비대면 소비가 활성화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침
  -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심리 완화, 확장적 정책기조 유지 등에 힘입어 상품소비가 상대적으로 견실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서비스 소비의 전 세계적 부진 지속
  - 서비스 소비는 여행, 외식, 문화 등 대면접촉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감염상황 및 이동제한 조치 등에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 소비부진이 지속
  - 백신과 치료제 개발 및 보급 여부에 따라 서비스 소비의 증감이 결정될 전망
- 기업투자 회복 지연
  - 기업투자 부진은 산업생산 부진, 코로나 19 관련 높은 불확실성 등에 기인
  - 코로나19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BIT부문 등 기업투자 부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
-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출 개선 조짐
  - 수출은 중국, 아세안 등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개선 조짐을 보이나 상품수입은 선진국이 신흥국보다 빠르게 개선
  - 신흥국의 수출은 주요국의 소비회복과 함께 소비재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선진국의 수출은 기업투자 부진으로 회복이 지연

#### ■ 향후 전망

- 향후 글로벌 경기개선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
  - 최근 세계 경제는 선진국 소비회복과 중국 투자확대 등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부진이 완화되고 있음
  - 하지만,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서비스소비 부진 지속 등으로 인하여 고용과 소득 개선이 미진
  - 글로벌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투자와 교역회복도 지연되고 있어 본격적인 회복세에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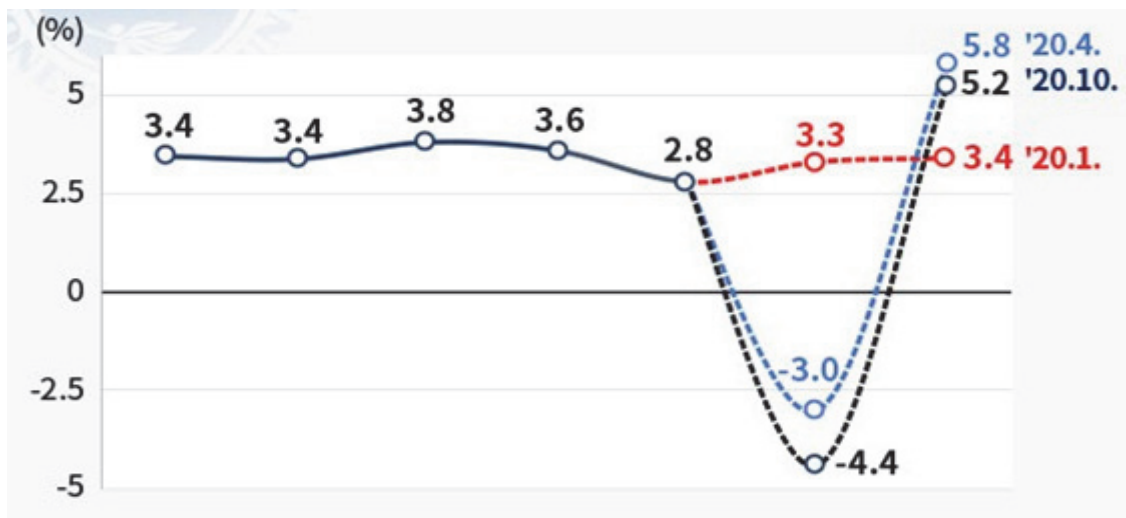
---

7) 한국은행(2020),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의 주요 특징과 향후 전망, 국제경제리뷰 참고 재정리.

- 국가 내 혹은 국가 간 상생협력으로 인한 위기 극복의 필요성 증대
  - 백신 및 치료제 상용화 전까지는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교역상황 개선을 위해 전 세계적 차원에서 국가간 상생협력 혹은 수출 관련기업 투자를 위한 국가 내 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

## ■ 2021년 세계경제 전망

- IMF는 2021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5.4%로 전망
  - 세계은행, OECD, BIS 등 세계 주요 경제기구는 2021년의 전망에 대해 같은 기초를 유지
  - 유의할 점은 기저효과(base effect)에 따른 반등으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취업자 증가 등과 같은 거시지표들이 수치상으로 좋게 보여 지는데 체감경기와는 상당한 괴리 전망
- 2021년 세계경제는 구조적 이탈 전망
  - 기존의 경제구조, 경제규칙, 경영방식에서 이탈해 전혀 달라진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전망(뉴노멀)
  - 글로벌 벨류체인 붕괴, 리쇼어링 확대, 탈세계화 진전, 초장기-초저금리 시대 전환
  - 비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전개되는 언택트 시대 및 데이터 경제로의 진화



자료 : 김광석 외, 미래시나리오 2021.

[그림 2-12] IMF의 2021년 세계경제 전망

## ■ 2021년 국내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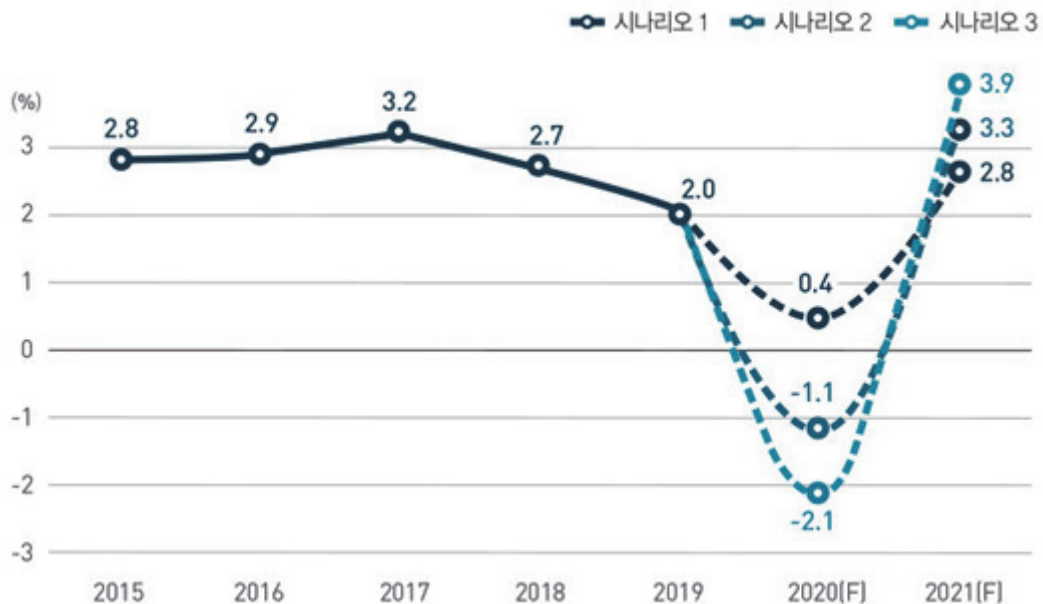
- 시나리오 #1 :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
  -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코로나 19가 5월 이후 안정화 될 경우를 가정할 경우의 전망치임
  - 코로나 19의 잠재 위험이 사라지면 2021년에는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

• 시나리오 #2 : 보복투자과 보복소비

- 코로나 19사태가 하반기 내에 안정을 찾는 것을 전제한 시나리오로 이 경우, 글로벌 소비와 투자의 침체기조가 지속되면서 기업실적에 상당한 조정이 가해짐
- 경기부양책 효과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보복적 투자와 보복적 소비가 발현될 전망
- 2020년에 겪은 경제적 충격만큼 기저효과가 나타나면서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경제회복

• 시나리오 #3 : 경제활동위축 및 대규모 구조조정 불가피

- 코로나 19가 2020년 하반기 내 종식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로 이 경우, 세계 전역에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기업은 고용을 유지하지 못해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감
-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외거래와 내수경기가 동반 침체되어 1998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위기상황에 처할 전망



자료 : 김광석 외, 미래시나리오 2021.

[그림 2-13] 2021년 한국경제 전망



## 2) 지역경제 여건

### (1) 충남 대·중소기업 현황

#### ■ 전국과 충남 규모별 기업 비중은 비슷한 양상

-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비중을 살펴보면, 피라미드 구조
  - 충남도 전국과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음

[표 2-5] 전국 충남의 기업규모별 비중

구분	중소기업 (1~299명)		중견기업 (300~999명)		대기업 (1,000명 이상)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국	4,099,109 (99.90)	18,960,497 (85.27)	3,367 (0.08)	1,675,283 (7.53)	696 (0.02)	1,598,996 (7.19)
충남	172,099 (99.92)	804,905 (86.71)	122 (0.07)	60,406 (6.51)	21 (0.01)	62,948 (6.78)

#### • 업종별, 기업규모별 현황

- 충남의 경우 (사업체수 기준) 도매 및 소매업 비중이 36.34%, (종사자수 기준) 제조업이 31.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2-6] 충남 업종별 · 기업규모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구분	중소기업 (1~299명)		중견기업 (300~999명)		대기업 (1,000명 이상)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체산업	172,099	804,905	122	60,406	21	62,948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474	4,227	0	0	0	0
광업(05~08)	91	727	0	0	0	0
제조업(10~34)	18,356	217,788	53	24,281	13	51,46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35)	140	2,646	4	-	1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36~39)	543	6,659	0	0	0	0
건설업(41~42)	6,931	51,253	8	2,451	0	0
도매및소매업(45~47)	42,449	109,494	0	0	0	0
운수 및 창고업(49~52)	14,684	35,864	4	-	0	0
숙박및음식점업(55~56)	36,803	97,060	1	-	0	0
정보통신업(58~63)	839	6,279	0	0	0	0

구분	중소기업 (1~299명)		중견기업 (300~999명)		대기업 (1,000명 이상)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금융 및 보험업(64~66)	1,670	19,076	0	0	0	0
부동산업(68)	5,196	13,283	1	-	0	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73)	3,212	19,483	3	1,301	0	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74~76)	2,958	27,352	7	3,752	0	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4)	749	19,334	18	10,464	2	
교육서비스업(85)	6,853	54,274	15	9,096	3	4,30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6~87)	6,398	69,294	8	2,170	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91)	5,114	14,920	0	0	0	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94~96)	18,639	35,574	0	0	0	0

## ■ 동반성장 산업 분야별 비중

- 동반성장 기본계획상의 7대 서비스업과 제조업 비중 비교
  - 동반성장 기본계획상의 7대 서비스업과 제조업 비중 비교
  - 제조업의 경우 아산, 천안, 당진 지역에 종사자의 약 70%이상이 종사하고 있음
  - 특히 천안, 아산지역의 경우 종사자 기준 대부분의 산업에서 특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 / 지역별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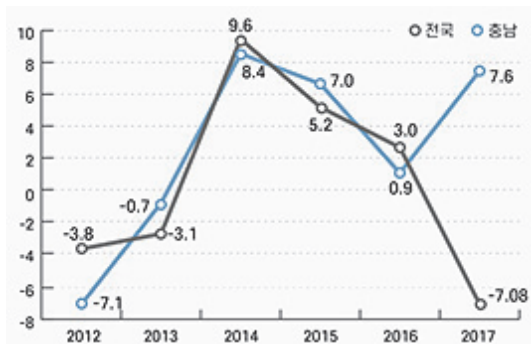
[표 2-7] 동반성장 분야별 산업비중

동반성장 분야		종사자 수	산업 비중이 높은 시·군(%)
제조업		293,530	아산(31.12), 천안(28.45), 당진(10.99)
금융		8,762	천안(28.02), 아산(11.96%)
의료	의료 분야 합계	39,789	천안(41.26), 아산(12.24)
	의료용 기기 제조업	2,394	천안(67.54), 공주(14.0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4,146	천안(38.81), 아산(19.22), 예산(10.42)
	보건업	33,249	천안(39.67), 아산(11.95)
디자인	전문 디자인업	205	천안(54.63), 아산(12.20), 공주(12.20)
물류	운수업	37,604	천안(33.48), 아산(14.00), 당진(10.34)
유통	도매 및 소매업	109,494	천안(33.06), 아산(12.70)
문화·미디어		2,482	천안(30.02), 아산(12.45)
IT/SW	IT·SW 합계	1,366	천안(53.51), 아산(31.92)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248	천안(48.39), 아산(12.50)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1,118	천안(54.65), 아산(36.23)

## (2) 신규 창업률 및 생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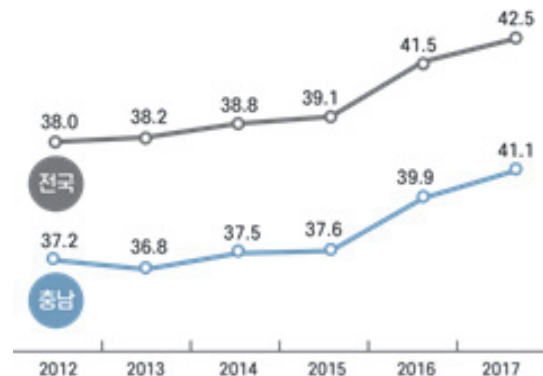
### ■ 자영업자 신규 창업률 및 신생기업 생존율

- 자영업 부문 신규 창업자수는 증가추세
  - 충남은 '12~'17년 기간 중 자영업 부문 신규 창업자 수는 증가추세이긴 하나, 창업 증가율은 매년 변동성이 큰 것이 특징
  - '17년의 경우 전국의 자영업자 신규 창업률은 -7.08%였으나, 충남은 이와 반대로 증가(+7.6%)
- 신생기업 생존율은 지속증가하나, 전국 평균보다는 하회
  - 도내 신생기업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긴 하지만, 전국 평균을 하회 하는 수준임
  - '17년 기준 신생기업 생존율 : 전국평균 42.5% vs. 충남 41.1%



자료 :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그림 2-14] 자영업자 신규창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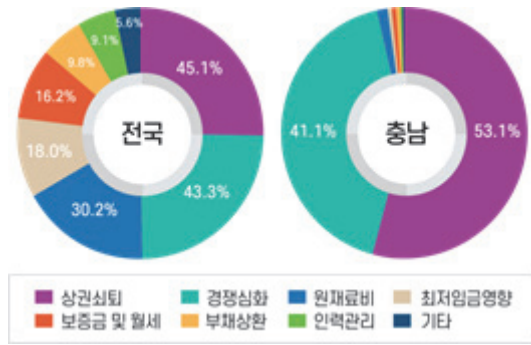
자료 : 기업생멸행정통계, 각년도

[그림 2-15] 신생기업 생존율(%)

## (2) 도내 사업체 애로사항 및 체감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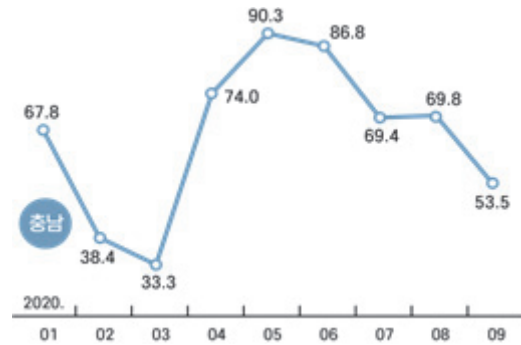
### ■ 사업체 운영 애로사항 및 소상공인 체감경기 실사지수

- 도내 사업체 운영에 있어 상권쇠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음
  - 충남 도내 사업체가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상권쇠퇴(53.1%)와 경쟁심화(41.1%)로 나타남
- 2020년 5월 이후 도내 체감지수는 지속적 악화
  - 충남 도 소상공인 BSI(체감 경기실사지수)는 '20.1~9월 중 100미만이었으며, 특히 5월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자료 : 국가통계포털

[그림 2-16] 사업체 운영애로 사항('18)



자료 : 국가통계포털

[그림 2-17] 충남 소상공인 BSI

### 3) 코로나 19의 영향

#### ■ 코로나 19로 인한 내수침체 및 수출 위축 심화

- 경제적 약자 계층의 생존 위협
  -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한계기업의 위기, 취약계층 고용위기 등 경제적 약자 계층의 타격이 큼
  -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은 고용충격 등 내수에 대한 충격으로 파급됨



자료 : 관계부처 합동 자료

[그림 2-18]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4) 대기업 중심의 충남기업 생태계

##### ■ 수직 계열화된 기업생태계

##### • 대기업 중심의 수직 계열화된 기업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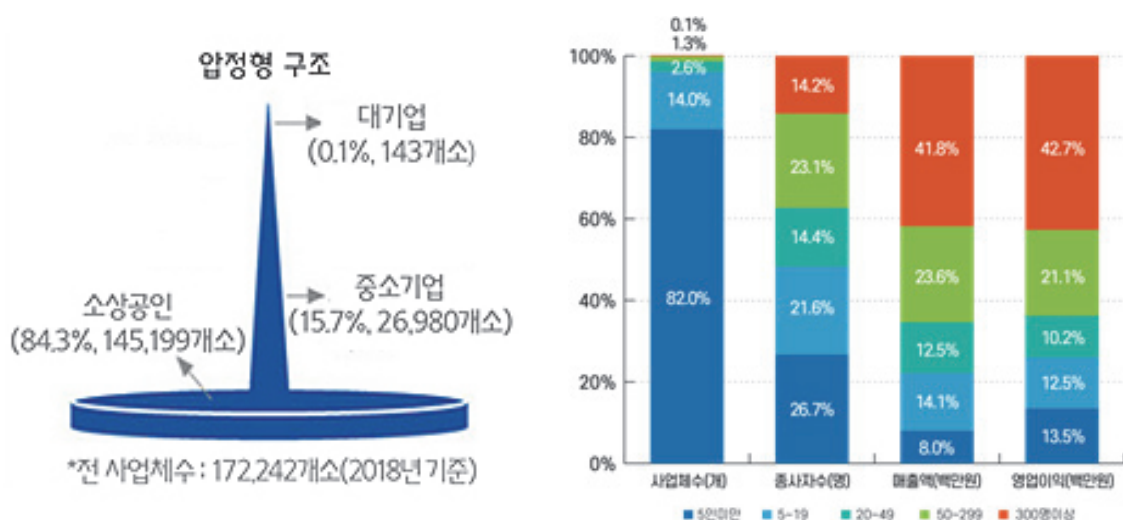
- 노동과 자본을 보유한 대기업 중심의 기업생태계 형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는 상당한 실정



[그림 2-19] 수직 계열화된 기업생태계

##### • 압정형 구조의 기업생태계

- 도내 전체 사업체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1%수준이나, 매출액 41.8%, 영업이익 42.7% 차지



[그림 2-20] 충남 기업생태계의 구조적 특성



---

## 제3장

# 상생협력 사례 및 모델검토

---

1. 상생협력 사례
2. 기업 생태계 관점의 상생협력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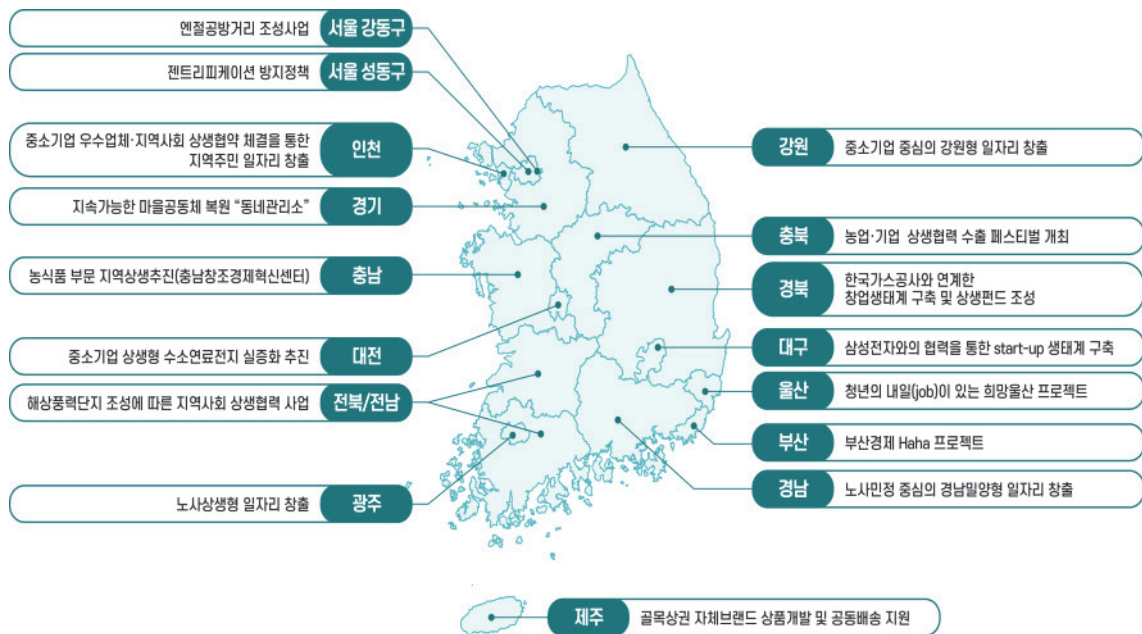
## 제3장 상생협력 사례 및 모델검토

### 1. 상생협력 사례

#### 1) 지자체 우수사례

##### ■ 지자체별 상생협력 우수사례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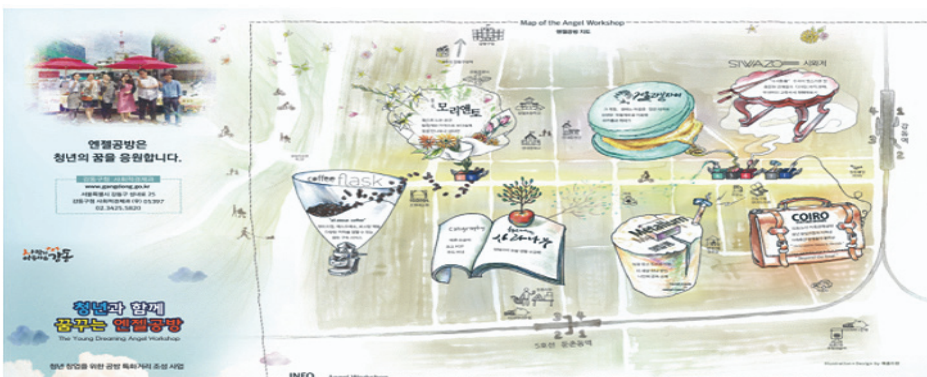
- 각 지자체 별 다양한 유형의 상생협력 사업 추진
  - 추진 주체 :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되 대기업, 공공기관, 지자체가 주도하는 양상
  - 사업 영역 : 일자리, 창업, 상권, 판로, 기술, 공동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생협력 사업추진
  - 상생 유형 : 사회적 가치 실현형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중심



[그림 3-1] 상생협력 지자체 우수사례

## (1) 사회적 가치 실현형 상생협력 사례8)

###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엔젤공방거리 조성사업





사업기간		2016년 1월~현재	사업유형	기존
사회적 가치 중심 전환	실적	• 성안로 변종업소가 한때 90여개에 달해, 2007년 변종업소 정비계획 수립, 변종업소 우선 정비 TF팀 구성('15.10). 주민대토론회 개최('16.1). 주민 의견수렴 및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강동형 혁신사례인 “엔젤공방거리 조성사업”발굴		
	성과	• 변종업소 37개소('16.4) → 18개소('18.4) • 변종업소 정비 19개소, 공방조성 10개소		
참여와 협력	실적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로 안정적인 공방 운영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도시재생 모델로 발굴 • 엔젤공방 창업지원 프로젝트 운영 - 변종업소 종사자와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공방 실무 교육과 현장 경험을 통한 공방 취·창업 지원 - 창업교육 192회, 사회적경제교육 5회(창업교육생 38명) / 인턴운영(8명)		
	성과	• 청년 일자리 창출과 상권 활성화로 도시재생 성공적 간접모델 발굴 • 공방을 주민 사랑방으로 제공, 지역중심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 공방 체험교육을 통해 주민에게 문화향유 기회 제공		
사회적 가치구현 성과	시행 전		시행 후	
	• 변종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으로는 거리 정비 한계에 이름(90여개소 → 40여개소) • 변종업소와 착척한 거리로 인해 유동인구 유입의 관계 및 골목상권 침해 •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 부족		• 변종업소 정비와 공방 조성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로 환경 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 • 공방 취·창업 교육과 인턴 운영으로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 공방을 지역주민에게 공유공간으로 제공하여 공동체 형성	
정책중요도	• 청엔젤공방 거리는 강동역과 올림픽공원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 인근 주거지역과 업무시설, 도서관이 입주해 있으나 거리가 어둡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유동인구가 적고 상권형성이 미약한 실정이었음 • 공방 거리의 가로등 교체, 가로수 수종 변경, 지중화 작업 등을 통한 지역기반시설 확충으로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실현하는 공간이자 지역주민이 함께 키워가는 거리로 육성 필요			
혁신아이디어	• 엔젤공방거리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통합 브랜딩 및 공공디자인, 지중화 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정적인 공방교육과 실무경험 제원 제도 및 예산 지원			
참고사진				

8) 사회적 가치 실현형 상생협력 사례는 행안부 지자체 경진대회 우수사례(2018)를 발췌하여 정리함

##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


사업기간		2015년 7월 ~ 계속	사업유형	신규
사회적 가치 중심 전환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최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최초 관련 조례 제정('15.9)</li> <li>- 전담부서 신설('16.1), 1단 3개부서</li> <li>-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및 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li> </ul> </li> <li>• 기업의 공공기여를 활용한 공공안심사가 조성 : 총 44개소</li> </ul>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사회적 이슈화</li> <li>• 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li> </ul>		
참여와 협력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과의 자율적 상생협력 체결(참여율 60% 이상)</li> <li>• 민·관 협치기구 운영('16.2 ~ )</li> <li>• 전국 지자체 및 업무 유관 기관 등과 협력관계 구축</li> </ul>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감대 확산 및 지역상권 안정화 기여</li> <li>•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의식 고취 구현</li> <li>• 전국적으로 확산, 국가 정책으로 채택 및 관련 법 제·개정의 촉매제 역할</li> </ul>		
사회적 가치구현 성과	시행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소한 용어와 개념으로 사회문제로 미인식</li> <li>• 법적·제도적 체계 부재</li> <li>• 건물주와 임차인의 상생협력 필요성 및 공감대 미형성</li> </ul>		
	시행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정부 국가 정책으로 도입</li> <li>• 관련 제·개정을 위한 촉매제</li> <li>• 지역상권 보호를 통한 상호협력 분위기 조성, 임대료 안정 효과</li> </ul>		
정책중요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해소</li> <li>• 건물주, 임차인 등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상생협력으로 극복</li> <li>• 기초 지자체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노력이 국가 정책으로 확산</li> </ul>			
혁신아이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상권 안정화를 위한 공공안심사가 조성('16.12 ~ , 공공자산화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세 임차인 보호, 지역의 임대료 가이드라인 제시로 임대료 안정 효과</li> <li>- 지방정부 재정의 한계, 기업의 공공기여를 통한 안심사가 확보</li> </ul> </li> <li>•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과 실효성 있는 방지 정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로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li> </ul> </li> <li>• 사회적 공간대 형성을 위해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자율협약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주, 임차인, 성동구 3자 간 상생협력체결로 자율적 상생 공간대 형성</li> </ul> </li> </ul>			
참고사진				

## ■ 서울특별시 성북구 - 행복 공동체 조성



사업기간		2015년 5월 ~ 계속	사업유형	신규										
사회적 가치 중심 전환	실적	• 대량해고 위기에 처한 경비원을 시민의 지혜로 고용을 안정시키고 갑을계약서를 동행계약서로 바꾸어 체결 - 경비원 고용안정을 위한 확약식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 도출												
	성과	• 전국 최초 공동주택활성화협의회 구성('15.3), 경비원 고용안정 확약식('15.3), 동행 계약서 민간 탄생('15.4) 및 모든 행정계약에 동행(同幸) 계약서 도입('15.11)												
참여와 협력	실적	• 동행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 • 동행 성북 열린토론회 개최 • 성북구 아파트입주자대표 연합회와 민관거버넌스 구성·운영												
	성과	• 공동주택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주민리더 양성 • 아파트 입주자대표연합회 윤리강령 선언 및 민관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사회적 가치구현 성과		시행 전	시행 후											
		• 경비원을 사람이 아닌 비용으로 인식 • 최저임금 전면적용 및 매년 인상으로 경비원 고용 불안 가중 • 공동주택 내 공동체 의식 부족	• 경비원을 비용의 문제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인식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주민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는 마을민주주의 • 민관거버넌스 협력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											
정책중요도		• 주민 스스로 시작된 동행의 사회적 자본 확충 및 가치 확산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속 가능한 상생과 협력 추진 필요성 • 동행의 확산으로 지역공동체 내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주민 스스로 갈등을 극복하는 등 참여와 협력을 통한 마을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원동력 확보												
혁신아이디어		• 합리적 이타주의, 사회혁신, 집단지성의 원리에 입각한 동행 추진 •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주민제안의 적극적 정책 실현 및 사례 창출												
참고사진		<div><h3>종이한 장이물고 온 변화의 바람, 동행</h3><div><div><h4>1 경비원의 눈물 감의 횡포</h4></div><div><h4>2 동행의 첫걸음 주민 스스로 경비원 고용에 나서</h4></div><div><h4>3 이제는 동행(同幸)계약서! 갑을계약서는 NO!</h4></div></div><div><h4>성북구 동행계약서 적용 과정</h4><table><tr><td>2015년 1월</td><td>2월</td><td>7월</td><td>9월</td><td>2016년 9월</td></tr><tr><td>석관 두산아파트 경비원 고용안정 선언</td><td>성북구 상영아파트 브랜드 '동행' 내아임 공모 확정</td><td>동아예코빌아파트 개별난방 공사 동행계약서 최초 적용</td><td>성북구청 동행계약서 도입</td><td>동행계약서 관련 조례 제정</td></tr></table></div></div>			2015년 1월	2월	7월	9월	2016년 9월	석관 두산아파트 경비원 고용안정 선언	성북구 상영아파트 브랜드 '동행' 내아임 공모 확정	동아예코빌아파트 개별난방 공사 동행계약서 최초 적용	성북구청 동행계약서 도입	동행계약서 관련 조례 제정
2015년 1월	2월	7월	9월	2016년 9월										
석관 두산아파트 경비원 고용안정 선언	성북구 상영아파트 브랜드 '동행' 내아임 공모 확정	동아예코빌아파트 개별난방 공사 동행계약서 최초 적용	성북구청 동행계약서 도입	동행계약서 관련 조례 제정										




## ■ 인천광역시 - 구민과 기업, 모두가 행복한 남동

사업기간		2015년 1월 ~ 현재	사업유형	기존
사회적 가치 중심 전환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장 위탁 운영 : 사회적 기업 JSM글로벌(주)<ul style="list-style-type: none"><li>취약계층 2명 채용 / 매출액 : 639,806천원 / 124개업체 / 3,988개 품목</li></ul></li><li>중소기업 우수업체 · 지역사회 상생협약 체결<ul style="list-style-type: none"><li>입점업체 매출 이익을 지역사회로 환원 : 8,644천 원 / 지역아동센터 등</li></ul></li></ul>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사회적기업 위탁운영을 통한 취약계층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li><li>매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상생협력체계 구축 기여</li></ul>		
참여와 협력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민선6기 일자리 창출 2만 개 달성 : 21,805명(알선 취업 8,223건)</li><li>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ul style="list-style-type: none"><li>남동공단 공동 무료 통근버스 운행(45인승 10대 / 845,757명 / 1일 1,633명 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통근버스 운영협의회 구성(노사민정 협력 거버넌스 모델)</li></ul></li><li>남동공단 근로자 기숙사 지원 : 25개사 / 79명 지원 / 71,527천 원 지원<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중앙부처 + 기초 · 광역자치단체 + 유관기관 협력 우수사례</li></ul></li><li>남동공단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개원 및 운영 : 총 4개 소</li></ul></li><li>남동구 일자리 매칭을 위한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 추진<ul style="list-style-type: none"><li>참여업체 444개 / 지원자수 689명 / 1,515백 만원 지원</li></ul></li><li>일자리 메카도시 구현을 위한 「1사 1인 구민채용운동」<ul style="list-style-type: none"><li>채용업체 2,881업체 / 4,698명 채용 (근로자 20인 이상)</li></ul></li><li>전국 최고 수준의 남동구 생활임금 제도 도입 : 9,370원(2018년)</li><li>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주도<ul style="list-style-type: none"><li>고령친화기업 보네베이커리(총 직원 27명 중 노인 인력 21명)</li><li>북한 이탈주민 일자리 연계(596명 알선 / 490명 취업)</li></ul></li></ul>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이행 및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li><li>이해관계자(기업, 근로자)가 소통 · 협의하는 협력체계 기반마련</li><li>생활임금 민간부문 확산으로 근로자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li><li>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근로하기 좋은 환경을 함께 조성함으로써 경제 분야 사회적 가치 실현</li></ul>		
사회적 가치구현 성과	시행 전		시행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기업 생산성 향상위주의 상향식 정책 추진</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구민, 기업 모두 만족하는 정책 추진으로 ‘성장 · 고용 · 복지’로 선순환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li></ul>	
정책중요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좋은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를 규정 기조로, 맞춤형 기업 지원 및 근로자 근로 환경 개선 지원으로 기업, 구민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민선6기 역점 과제임</li></ul>			
참고사진	<div><div>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및 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식</div><div><div>KOEN 한국남동발전</div><div>CS WIND CORP</div><div>일시 : 2019년 07월 04일(목)</div></div></div>			


## ■ 대구광역시 -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한 Start-up생태계 구축

사업기간		2014년 5월 ~ 계속	사업유형	기존
사회적 가치 중심 전환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대기업-지자체 공동펀드투자를 통한 스타트업 투자·지원<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조성) C-fund 200억 원(삼성 100, 대구시 100), 삼성전략펀드 100억 원(삼성)</li><li>- (투자) C-Lab기업(95개사 77억), 삼성전략펀드(34개사 101억)</li></ul></li><li>• 삼성창조캠퍼스 인프라와 공간(67실), 장비(26종 49개) 등 스타트업 입주·활용 지원</li><li>• 삼성(삼성전자, 삼성전기, 디스플레이, SDI) 등록 특허(3만 4천 건) 개방 및 특허 양도로 스타트업 기술 경쟁력 강화<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삼성 등록특허 개방(318건), 관련 설명회 개최(52회)</li></ul></li></ul>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스타트업 대상 창업 보육공간 제공, 기술 경영 교육, 자금 투자 지원으로 삼성과 Start-up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벤처 창업생태계 조성</li></ul>		
참여와 협력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삼성전자 전문인력 파견을 통해 스타트업 전반에 대한 멘토링, 컨설팅 실시(담임 멘토링 매칭 95건, 기술멘토링 매칭 54건)</li><li>• C-Fab 시제품 제작(57건), 컨설팅(35건), 시민 참여형 교육(8,476명)</li></ul>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스타트업 지원 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과 일반시민 대상 참여형 교육(월 200명 정도), 동호회 중심의 메이커문화 확산에 기여</li><li>• '17.9월 C-Lab 기업 망고슬라브 제품,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은품 선정<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갤럭시 노트8 공식 사전예약 사은품(50억 원 규모 공급계약)</li></ul></li></ul>		
사회적 가치구현 성과	시행 전		시행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체계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지역 기반 엑셀러레이팅 부재 등으로 지역의 창업 투자환경 열악</li><li>• 지역 메이커스페이스의 인프라, 공간 및 참여 프로그램 부족으로 창업활동 한계</li><li>• 기술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IP확보 여력 부족으로 창업 걸림돌로 작용</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창업 전반의 체계적 관리·지원과 대구기반의 AC, 엔젤클럽 등의 증가로 투자환경 개선(C-Lab 엑셀러레이팅)</li><li>• 삼성의 공간·장비 지원을 통해 특화공간 조성 및 메이커 플랫폼 구축(C-Fab)</li><li>• 삼성 보유 특허의 무상양도 및 컨설팅 지원으로 스타트업의 IP경쟁력 확보</li></ul>	
정책중요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창업 초기기업의 창업 인프라, 공간, 자금투자, IP, 컨설팅 지원 등 스타트업 기업의 자립·성장 지원</li><li>• 대기업의 적극적, 직접적, 선제적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창업·성장을 지원함에 따라 대기업 사회 공헌도 제고와 상생협력의 롤모델</li></ul>			
혁신아이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에서 시제품(Prototype) 제작까지 전단계 지원강화를 위해 기 구축된 C-Fab 기능(장비·시스템 등) 보강 필요</li><li>• 아이디어의 제품화에 있어 C-Fab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3공단 등 지역 소재 기술력 보유 중소기업과 연계한 협업형 마이크로팩토리(디자인·금형·전자·조립 등)시스템 구축 필요</li></ul>			
참고사진				

## ■ 울산광역시 - 청년의 내일(JOB)이 있는 희망울산 프로젝트


사업기간		2017년 6월 ~ 2018년 12월	사업유형	신규
사회적 가치 중심 전환	실적	• (상생협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나누기로 경제 양극화 해소, 중소기업의 자립적인 성장 지원으로 경제성장 기여 •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의 일자리 확충과 지원		
	성과	• 대규모 사업장에 지역 청년·퇴직자 취업 연계 - S-OIL 건설현장 8,407명 근무, 조선업 퇴직자 1,093명 -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현장에 125명 취업 연계		
참여와 협력	실적	• 민·관·단체 협력 체계 구축 • 중소기업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원 : 4개 사업		
	성과	• 일자리 연계 MOU체결 : 5회 / 4,482개 회사사 참여 • 전담 상담사 및 전담창고 지정 운영 : '18.3월 ~ - 울산조준업희망센터 내, 상담사 6명		
사회적 가치구현 성과		시행 전	시행 후	
		• 청년 미취업자, 조선업 퇴직자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 • 대규모 건설현장 자체 채용으로 지역 청년·근로자 참여율 저조	• 대규모 건설현장 지역 청년 MOU체결(2회) • 지역 단체·협의회 1사 1청년 채용하기 운동 참여(4,482개 회사사 참여)	
정책중요도		•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역할 중요 • 청년 실업문제가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고용상황 개선을 위한 전 시민적 노력 필요 • 중소기업 인력난 및 일자리 미스매치 계속 (중소기업 71.6% 구인난 호소)		
혁신아이디어		• 조선업 위기로 인한 대량실업 상황을 지역 내 대기업·사업장이 고충분담(상생·협력)을 통해 해결 • 관내 취업지원기관 및 경제관련 단체와 연대하여 지역 청년·퇴직자들의 대기업·대규모 상버장에 취업 연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참고사진				

## ■ 부산광역시 - 부산경제 HaHa 프로젝트

사업기간		2017년 9월 ~ 계속	사업유형	신규
사회적 가치 중심 전환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동·민간기관 내 지역활성화에 대한 공감과 자발적 참여로 '지역상생'의 사회적 가치 실현<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부산시) 지역업체 일감확대 TFT 활동 등으로 지역상생 의제발굴·추진</li><li>- (협약기관) 기관(기업)별 특성에 맞는 일감확대 시책 추진 중</li></ul></li></ul>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市) 부산사랑 범시민 운동 「Sell&amp;Buy Busan 2018」 선포식 개최('18.1)</li><li>• (市) 지역전문건설업체 역량강화를 위한 「scale-up 프로그램」 추진중('18.2 ~ )</li><li>• (市) 부산시 일자리소통관(900명) 기업 일감확대 애로사항 청취('18.3 ~ )</li><li>• (부산중기청)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 브로셔 제작 및 배포('18.1)</li><li>• (주택도시보증공사)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캠페인 추진('18, 800만 원)</li></ul>		
참여와 협력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부산경제HaHa 협약 체결」 및 「부산경제 HaHa 협의회」 운영</li><li>• 부서 간 경계 없는 협력을 위한 「지역업체 일감확대 TFT」 구성<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안건 발굴 및 유기적 업무 추진을 위한 TFT 구성(7개 부서, 15명)</li></ul></li></ul>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52개 기관(12개 공공기관, 9개 대학교, 31개 기업) 협약 체결</li><li>• 협약기관 간 소통 및 공감을 위한 제1회 「부산경제 HaHa협의회」개최, 50개 기관 참여</li><li>• 「지역업체 일감확대 TFT」회의 매월 1회 개최(총 3회) / 안건 11건 발굴·추진중</li></ul>		
사회적 가치구현 성과	시행 전		시행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역업체 활성화 견인 체계가 부족하고 전 방위적 협조 부족으로 일시적·단기적 효과 분장기적 파급효과 부족</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공감대 형성 및 지역상생의 구체화를 위한 민·관·대·중소기업 등 포괄적 소통·공감의 장 마련</li></ul>	
정책중요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역업체의 일감확대는 지역상생의 사회적 가치실현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의 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 방향임</li></ul>			
혁신아이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정부 공기업 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 제고 실적 평가항목 반영</li></ul>			
참고사진				



## ■ 제주특별자치도 - 골목상권 자체브랜드 상품 개발 및 공동배송 지원

사업기간		2012년 ~ 2018년 12월	사업유형	기존(계속사업)
사회적 가치 중심 전환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골목상권 상품 개발(PB) 및 유통<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골목상권 자체브랜드 「우리골목통(통)」 특허청 상표 등록</li><li>-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통한 공동배송 서비스 지원(546개소)</li></ul></li></ul>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골목상권 자체브랜드 상품 32종 개발, 50억 원 매출달성('17.12월 기준)</li><li>•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에서 전국 유일 비조합원을 포함, 공동배송 서비스를 지원</li></ul>		
참여와 협력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역 농산물 도내 생산농가와와의 협력 구축</li><li>• 도내 제조업체 및 사회적기업 등을 이용한 자체브랜드 제품생산으로 지역경제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도모</li></ul>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도내 생산농가 및 제조업체, 사회적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및 사회적 경제 상생 발전</li><li>• 공동구매, 공동물류, 공동판매를 통한 획기적인 원가 절감 골목슈퍼 매출액 증대에 기여</li></ul>		
사회적 가치구현 성과		시행 전	시행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대형할인마트, 기업형 슈퍼(SSM), 대기업 계열 편의점 등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잠식</li><li>• 지역자본 역외유출</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역생산품 위주의 상품개발로 가격경쟁력 확보 및 지역상권 상생방안 마련</li><li>•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li></ul>	
정책중요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대기업과 대형업체의 진출을 막고 영업을 제한하는 규제정책은 중소상인들을 사업영역 보호 차원에서 당장의 골목상권 영업을 얼마간 지속시키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나, 대기업과 소상공인 동반 성장 차원에서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골목상권의 성장 촉진 정책으로 골목상권 보호에 초점을 맞춰 추진</li></ul>		
혁신아이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역 생산품 상품개발 위주의 프로모션에서 매출트랜드, 소비패턴, 유통인구 등 분석을 통한 마케팅 전략 추진<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인가구 증가와 소비행태 변화 및 소비자의 가치추구·웰빙 구매성향을 반영하여 소포장, 친환경 유기농 상품 개발</li></ul></li></ul>		
참고사진				

## (2) 기타 상생협력 사례

### ■ 대전 - 중소기업 상생형 수소연료전지 실증화

#### • 추진배경

- 수소 연료전지 제품 개발이 완료 후, 대전시는 연료전지 개발 업체의 제품을 추가 구매하여 중소기업과 상생협력하여 수소산업 육성

#### • 사업의 내용

- 대전시 소재 연료전지 제조업체인 에이치엔파워(주)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자체 개발한 연료전지 실증화
- 실증화 이후에도 중소기업과 상생하여 수소산업 육성

### ■ 전북·전남 -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추진

#### • 추진배경

-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군, 한국전력공사, 한국해상풍력 및 고창·부안군 주민대표는 '전국 서남권 주민상생형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추진 업무협약서' 체결(20.07.17)



[그림 3-2]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조성 개요

#### • 사업의 내용

- 사업규모 및 사업비 : 2.4GW, 약 14조원(민자)
- 사업기간 : 2020년 ~ 2028년(400MW 22년 착공, 2GW 23년 착공 추진)
- 정부와 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타당성 조사, 인프라 조성, 공동설비 구축 및 인허가 과정의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 지원

- 연안어업구역의 실질적 확대를 통한 수산업 상생 노력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개정, 주민 및 지자체 참여형 사업 추진을 통해 주변지역 주민 지원 강화

## ■ 광주 -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 • 추진목적

- 지역사회가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해법을 사회적 대화로 모색하고, 사회통합 노사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적 공동체 조성

### • 사업의 추진배경

- 한국 자동차 산업 등 일부 고임금구조 산업에서는 임금의 상승과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국내에서 투자 기피 요인이 되어 해외 자본유출이 심각해짐(국내 일자리가 감소되는 악순환 지속)
- 특히 광주 지역 특성상 수도권에 비해 산업유치 여건이 불리하고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하여 자본과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전략과 방안 필요
- 기업의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불안정한 노사관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광주형 일자리 구상추진



[그림 3-3] 광주형 일자리 홍보자료

### • 사업의 내용(핵심요소)

- 사회적 합의 :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사관계의 사회적 합의 형성

- 노사 상생 :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을 지양하고 노사가 협력하여 상생적 노사관계 형성 추구
- (공공) 공동복지 지원 : 시장임금과 사회적 합의 임금 격차를 보완하고 노동자 복지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복지 특별지원 실시

## ■ 강원 - 중소기업 중심의 강원형 일자리 창출

### • 추진배경

- 횡성 전기차 클러스터를 모델로 한 ‘강원형 일자리’사업

### • 주요 사업 내용

- 완성차 제조기업과 협력부품 8개사 등 9개 기업과 강원도 노사민정 협의회가 강원형 일자리 상생협약
- 노측은 적정 수준의 임금, 탄력근로제, 단체협약 등 양보, 사측은 신규투자과 고용창출, 지역주민 우선 채용, 정규직 채용 및 정년보장 등 제시
- 산업기반이 열악하였던 강원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측면에서 중소기업 스스로 모델을 개발한점에서 의의가 있음



[그림 3-4] 강원형 일자리 홍보자료

## ■ 충북 - 농업·기업 상생협력 수출 페스티벌

### • 추진배경

- 지자체와 생산자, 협회 및 국내외 바이어 등이 연계된 상생협력 MOU체결로, 우수 농식품의 지속적 수출네트워크 확산

### • 주요 사업 내용

-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설립하여 농업과 기업계 간 상생협력 사례발굴 및 성과 창출 지원
- 오창농협과 SK그룹 협력사례로 2005년 '꾸러미 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 연매출 112억 규모의 사업으로 발전 : 충북지역의 대표적 우수 상생 모델 사례
- 상생협력 수출 페스티벌에서는 우수 유기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유통업체 및 해외 바이어 간 상생협력(MOU) 체결



[그림 3-5] 충북 농업·기업 상생협력 페스티벌

## ■ 경북 - 상생펀드 조성

### • 추진배경

- 경북도내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하여 공기업 예탁금을 활용한 상생펀드 출범

### • 주요 사업 내용

- 경북개발공사는 경상북도 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IBK기업은행과 20억 규모의 '경북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상생펀드' 조성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
-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조성한 예탁금 20억원을 기반으로 IBK기업은행이 대출한도를 조정하여 경상북도 소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저리 운영자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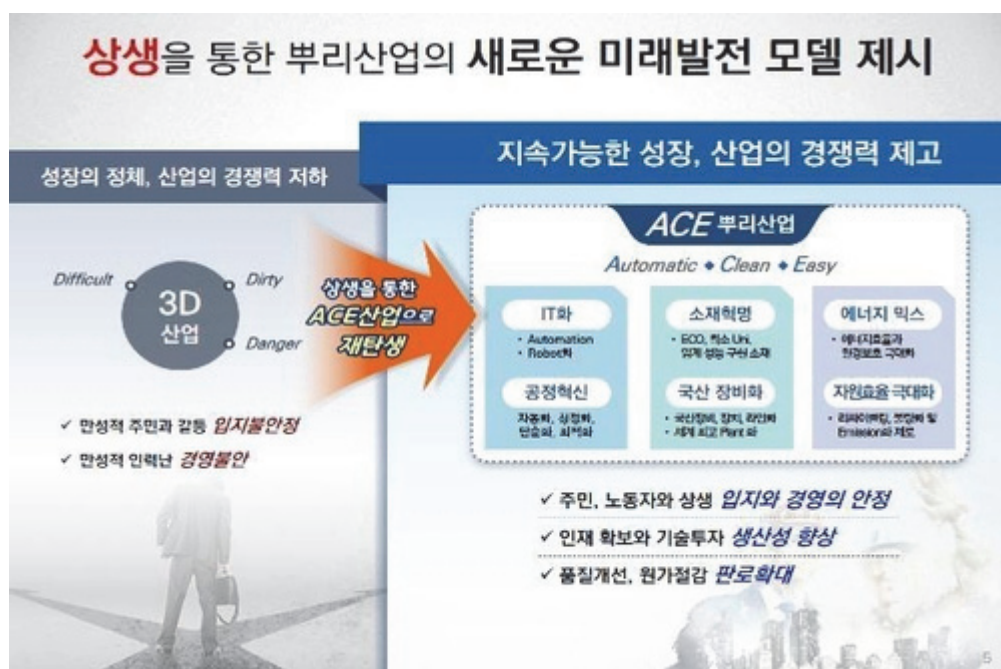
## ■ 경남 - 밀양형 일자리 모델

### • 추진배경

- 노·사·민·정이 상생의 가치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친환경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냉대 받던 뿌리산업의 새로운 발전모델 제시

### • 주요 사업 내용

- 산업생태계 조성 : 경상남도 고용우수지역 인증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
- 근로자 복지 : 밀양 지역상생 복합문화센터 건립,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등



[그림 3-6] 밀양형 일자리 상생모델

### • 밀양형 일자리 의의

-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주민들은 환경보전 위원회를 구성해 환경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동의
- 국내 최초로 중소기업들이 결성한 협동조합 중심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 ■ 경기도 - 우리마을 행복지수를 UP시키는 경기행복 마을관리소

### • 추진배경

- 지역 서비스 기반의 공익적 일자리 창출

### • 사업의 내용

-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
- 택배보관, 공구대여, 환경개선 등 주민불편사항 처리를 위한 거점으로 일종의 동네관리소를 조성하고, 동네주민대상의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행복마을지킴이가 공공서비스 제공

### • 추진내용

- 화재나 재해대비를 위한 안전 순찰
- 여성안심귀가, 아동 등·하교 서비스
- 취약주거지 대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
- 도로, 건물 등 위험요인 발굴, 시정요청
- 취약계층 복지 증진



[그림 3-7] 경기행복 마을관리소 홍보자료

### • 5개 지역 시범운영 중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신안길, 포천시 구철초로, 군포시 산본1동, 시흥시 정왕본동, 의정부 1동 등

## 2) 다양한 경제주체들 간 상생협력 사례

### ■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사례

#### • 두산중공업(주)과 두텍(주)의 협력사례

- 두산중공업(주)과 두텍(주)이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하에 '하동화력 1~4호기 옥외 저/상탄기(ST/RE) 개보수공자 엔지니어링 및 기자재 공급 계약 체결
- 두텍(주)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후 입주공간, 멘토링, 투자자 연결 등의 지원을 받음

#### • 철강업계 대중소기업 협력사례

- 현대제철은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자금지원 프로그램, 기술박람회 개최를 통한 상생협력 기반 강화 등 기술지원 프로그램, 특허출원 지원, 협력사 전용 온라인 채용관을 통한 채용지원 등 경영지원 프로그램 공유
- 철강생상협력펀드 협약 : 포스코, 현대제철, 한국철강협회, IBK기업은행
  - ▶ 업계 최초로 철강업계가 공동으로 조성한 펀드, 기존 동반성장펀드와는 다르게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거래하는 기업 뿐만 아니라 거래관계가 없는 철강기업도 한국철강협회를 통해 지원(저리 대출)

#### • 일본수출규제 대응 대중소기업 협력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력 등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지정하고 기업역량 강화 지원
  - ▶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동반성장 플랫폼'을 통하여 다양한 사업 수행
  - ▶ R&D 과제는 개방형 공모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함께 참여한 수요 대기업은 R&D 요구사항, 수행 적격요건 등 구체적 수요를 공개하여 기술협력 과제 제안
- 중소기업 오알캠은 LG이노텍과 함께 성과공유제를 도입하여, 도금에 필요한약품 국산화에 성공. 협력을 통해 소재 개발에 필요한 원가를 절감하고 나아가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대기업이 지원한 사례

#### • CJ ENM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글로벌 한류 콘텐츠 기업인 CJ ENM이 K-콘텐츠를 활용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및 마케팅 지원
-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은 한류 연계사업 참여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유통센터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우수 제품을 추천하고, 성공사례 홍보



- 삼성전자와 중소기업중앙회

- 소재·부품·장비 등 중소기업 중심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 중소기업은 전문 지식 및 경험 부족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삼성전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삼성과 거래가 없는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고도화와 자생력 확보를 위한 판로개척 및 인력양성 등과 관련된 체계적이고 종합적 지원책 마련
- 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위한 기술 노하우 전수
  - ▶ 삼성전자는 2015년 민간 최초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시작하여 2017년 까지 약 500억 원 투자 (1,086개 기업 지원)
  - ▶ 2018년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2,500여개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총 1,100억 원 조성), 혁신 전문가 200명의 전담조직 구성
  - ▶ 2020년 1월 ~ 전담인력 배치한 스마트 365센터 시설, 이미 지원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고도화 목표 수립

- 현대·기아 자동차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 미래 자동차 시대를 대비한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 : 현대·기아자동차는 미래자동차 시대를 맞아 자동차 부품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과 기업 업무 협약 체결
- 내연기관 부품업체 미래경쟁력 확보 지원, 미래차 포럼 신설 및 기술협력 지원 등

## ■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소상공인 상생협력

- 네이버와 소상공인 연합회 상생 :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을 통한 자생력 강화

- 맞춤형 인프라 제공으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확대
  - ▶ 네이버는 중소상공인과 창작자들을 위한 창작공간인 ‘네이버 파트너스퀘어’를 전국 6개소 운영
  - ▶ 포털에 ‘소상공인 라이프’ 전용 코너를 신설하고 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위한 1인 방송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위한 인프라 제공

- KB국민은행과 한국 외식업 중앙회

- KB국민은행은 2019년 8월부터 한국 외식업중앙회의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식업 자영업자의 사업경쟁력 강화 지원
- 외식업 경쟁력을 위한 특화상품 출시
  - ▶ KB국민은행은 외식업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9년 450억 원 규모의 외식업 자영업자 특화상품 출시
  - ▶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연간 12조원 규모의 기술금융 공급 및 지식재산(IP) 담보대출 활성화 등 금융 지원

- 이마트와 전국백년가게협의회

- 이마트는 소상공인 판로지원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국백년가게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음
- 이마트는 전국백년가게협의회가 추천하는 소상공인 상품을 대상으로 이마트 자체 브랜드(PL)의 제품화 지원 및 체계 마련(시장 트렌드 분석을 통한 제품 개발 가이드 정보 제공 및 패키지 디자인 컨설팅, 우수 제조공장 발굴 및 매칭 등 지원)

## ■ 공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례

- 대운계기산업과 한국동서발전

- 대운계기산업은 한국동서발전과 협력하여 기술자문을 받아 부품 국산화에 성공, 동서발전은 국산화 개발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현장 테스트베드, 성능 테스트 인증지원 등을 통하여 국산화 개발과 수입 대체에 협력

- 한국남부발전 중소기업 지원

- 한국남부발전은 중소기업 상행협약보증 지원사업으로 코로나 19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200억 원 규모로 우대보증 지원)

- 국가 철도공단과 한국여성벤처협회

- 여성 벤처기업 등 일·가정 양립 및 창업 촉진 지원
- 국가철도공단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인들의 일·가정 양립 및 창업 촉진을 위해 한국여성벤처협회와 자상한기업 업무 협약 체결
- 철도공단은 공유 사무공간인 'KR-스타트업라운지'를 전국 주요 철도역사에 구축하고, 후보 공간 확정. 창업·벤처기업인들의 자유로운 사무와 회의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며

### 3) 충남 상생협력 사례

#### (1) 기업 중심의 상생협력 사례

##### ■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협약

- 대·중소기업 온라인 구매상담회 등
  - 충남도와 삼성디스플레이, 한국 서부발전, 한화토탈 등 충남도 내 주요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 도와 각 기관은 도내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상생협력 활동을 공동 추진하고, 정보교류 등 협력을 위한 상호 노력
  - 기업은 충남상생협력위원회에 참여하고, 도내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상생협력 사업(활동)공동추진, 정보교류,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 ■ 유통대기업과 골목상권 상생협력

- 당진어시장 이마트 상생 스토어
  - 상생스토어는 이마트가 자체 브랜드(PB)인 노브랜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내 설치한 매장 운영
  - 전통시장에서 취급하지 않는 제품만을 판매하고 어린이 놀이터, 장난감 도서관 등 전통시장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으로 전통시장과의 상생 도모



출처 : 식품외식경제

[그림 3-8] 당진 어시장 내 상생스토어

## ■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상생협력 지원사업(충남산학융합원)

- 당진시 소재 중소기업 대상 동반성장 상생협력 지원사업
  - 한국동서발전(주)이 기업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
  - 유망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 내 중소기업 동반성장 도모
  - 당진형 star기업 육성사업 : 당진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바우처 지원(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차등지원)
  - 지역기업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 중소기업 홍보물, 홍보영상 등 지원
  -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 지역중소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 지원(에너지산업관련 교육 등)
  - 지역인재 우선채용 지원사업 : 지역인재 우선채용 기업 대상 소모품 및 인적성비 지원
  - 당진형 내일채움 공제 지원사업 : 당진소재 기업에 취업한 직원에 대한 장기 근속과 자산형성 유도
  - 중소기업 복지 바우처 지원사업 : 신규 채용입사자 대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바우처 제공

## ■ 도내 발전3사와 상생협력 추진

- 에너지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충남도-발전3사간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 2022년까지 도와 발전3사는 각각 5억원씩 연간 20억원을 기금을 충남테크노파크를 통해 조성(5년 동안 총 100억원)
- 충남도-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간 상생협력 내용
  - 도내 에너지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협력사업
  - 도내 에너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고용 및 사업화(창업)지원 등
- 에너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고용지원프로그램
  - 에너지 관련 R&D인력채용에 대한 인건비 일부지원
  - 에너지 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직업의식 고취를 통한 고용 안정화
  - 기업수요를 반영한 에너지 산업 선도형 인재 육성
  - 일과 가정 양립 및 균형을 통한 고용의 질 향상
  - 일하고 싶은 기업을 만들기 위한 근무환경 개선 등
- 사업화(창업)지원
  - 제품 신뢰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외 공인시험 인증지원
  -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 제품의 경쟁력 강화, 디자인 개발을 통한 브랜드 향상

- 전시 마케팅 및 해외시장 개척지원을 통한 국내외 시장진출 확대
- 발전3사 소재 지역 기업 대상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의 프로그램 추진

## (2) 기타 상생협력 사례

### ■ 농식품 부문 상생협력 추진사례

#### • 추진배경 및 목적

-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 행복한 농어업인 만들기
-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판로개척을 위한 자율적 상생협력 문화 확산
- 상생협력 우수 모델을 발굴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매출 증가 모색

#### • 충남 지역상생협력 추진 본부

-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의 충남 지역상생협력 추진본부는 농식품부의 공모에 선정되어 발족하였고, 총 1억 원을 들여 농업계와 기업의 상생협력 추진, 지역단위 자율 확산을 위한 상생협력 우수사례 홍보 등의 역할 담당



[그림 3-9] 충남 상생협력 추진본부 발족식 자료

#### • 추진내용

- 상생협력 문화 안착
- 지역단위 우수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별 벤치마킹
- 상생협력 MOU 및 상품개발 등 지원

- 우리미단 사례

- 쌀로 만든 국수를 세계적 먹거리화 차원에서 2005년 농업회사 법인 우리미단 설립
- 현재, 충남 서산 해미면에서 해미 친환경 특수미작목반과 손잡고 우리 쌀로 만든 쌀국수 ‘한면’을 생산 중에 있음
-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해 지역 내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 취업자를 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청년 농업인의 정주공간 활성화 노력 전개

## ■ 지역 특산물 유통활성화 협력사례

- 충남도와 GS리테일간 업무협약 체결

- GS리테일은 충남의 대표 브랜드인 ‘오감’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충남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됨

- 사업내용

- 충남 특산물 브랜드 ‘오감’ 산지 직송전 개최
- GS리테일 산지 체험단 ‘FRESH 원정대’는 청양의 표고버섯 따기 체험과 미곡종합처리장 견학을 바탕으로 온라인 홍보



[그림 3-10] 충남도-GS리테일 산지직송전 홍보자료

## 2. 기업 생태계 관점의 상생협력 모델

### ■ 공공주도형 상생협력 모델

- 정부주도의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추진
  - 중소기업 보호하고 적합업종 선정 및 성과공유 등을 핵심으로 함
  - 정부 및 충남도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연계하여 관련 과제 발굴 필요

### ■ 자율형 상생협력 모델

- 대기업의 인프라, 상생프로그램, 노하우 등 공유
  - 자성한 기업 발굴, 공유 활성화 등을 핵심으로 하여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
  - 충남형 자성한 기업 발굴 및 육성 등 필요
    - ▶ 자성한 기업 : 기업의 강점과 축적된 노하우 등을 협력사 뿐만 아니라 미거래 중소기업까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의미
  - 2020년 현재, 자성한 기업 25개사를 발굴하였으며, 2021년부터 자성한 기업 2.0 발굴 추진
- 자성한 기업의 주요성과
  - 상생과 공존의 지평 확대
    - ▶ 삼성전자, 포스코, 네이버 등 자성한 기업은 미거래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상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신들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하여 상호발전을 돕는 상생과 서로 같이 함께 살아 가는 공존을 실현
  - 일자리 창출
    - ▶ 시스템 반도체, 미래자동차, 소재·부품·장비 등 신산업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5.4조원 조성(외부매칭 포함)하여 약 2만 1,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
  - 대중소기업간 새로운 분업적 생상모델 구현
    - ▶ 삼성전자, 포스코, 하나은행 등은 소재·부품·장비의 기술독립을 위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R&D 전용 펀드 3,000억 원 대출\* 등 대·중소기업간 새로운 분업적 협력모델을 구축
  - 미래 지속가능성과 새로운 형태의 민관협력모델 제시
    - ▶ 소프트뱅크벤처스와 현대·기아자동차는 인공지능(AI), 미래자동차 등에서 우리 산업생태계가 미래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민·관 협력모델도 제시
- SK E&S 자성한 기업2.0 1호 기업 업무협약 내용
  - (환경) 온실가스 감축기술 분야 및 수소산업 벨류체인별 혁신기업 발굴하여 연구개발 등 지원
  - (뉴딜) 그린뉴딜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지원



- (사회) 지역사회 위기극복 및 사회문제 해결
  - ▶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코로나 19대응 등 지역사회 피해극복 지원
  - ▶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 향상, 온실가스, 오염물질 배출 절감 등을 위한 에너지 진단 및 설비개선 제공

## ■ CSR형 상생협력 모델

- 기업과 지역사회 간의 공생
  - 기업의 윤리적 경영과 이윤의 사회적 환원을 핵심으로 함
  -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포커스로 하는 정책 발굴 필요
    - ▶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 기업이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면서 환경경영, 윤리경영, 사회 공헌과 노동자를 비롯한 지역사회 등 사회 전체에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며, 그에 따라 의사 결정 및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함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예
  - 취약계층에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추구
  -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이익을 사업자체나 지역공동체에 투자,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ESG경영으로 발전
  - ESG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파생된 것으로 지속 가능경영 개념에 포함
  - 최근 산업부는 산업발전법에 근거한 K-ESG지표 표준화 착수
    - ▶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요소를 의미함
      - (환경)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배출 관련 이슈가 핵심
      - (사회)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 인권보장, 성별 및 다양성의 고려가 핵심
      - (지배구조)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투명성 및 신뢰도 확보가 핵심

## ■ CSV형 상생협력 모델

-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 조화
  - 기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창출로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공유가치 창출이 핵심
  -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상생협력 사업 발굴 필요
    - ▶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 : 경제/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비즈니스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기업 정책 및 경영활동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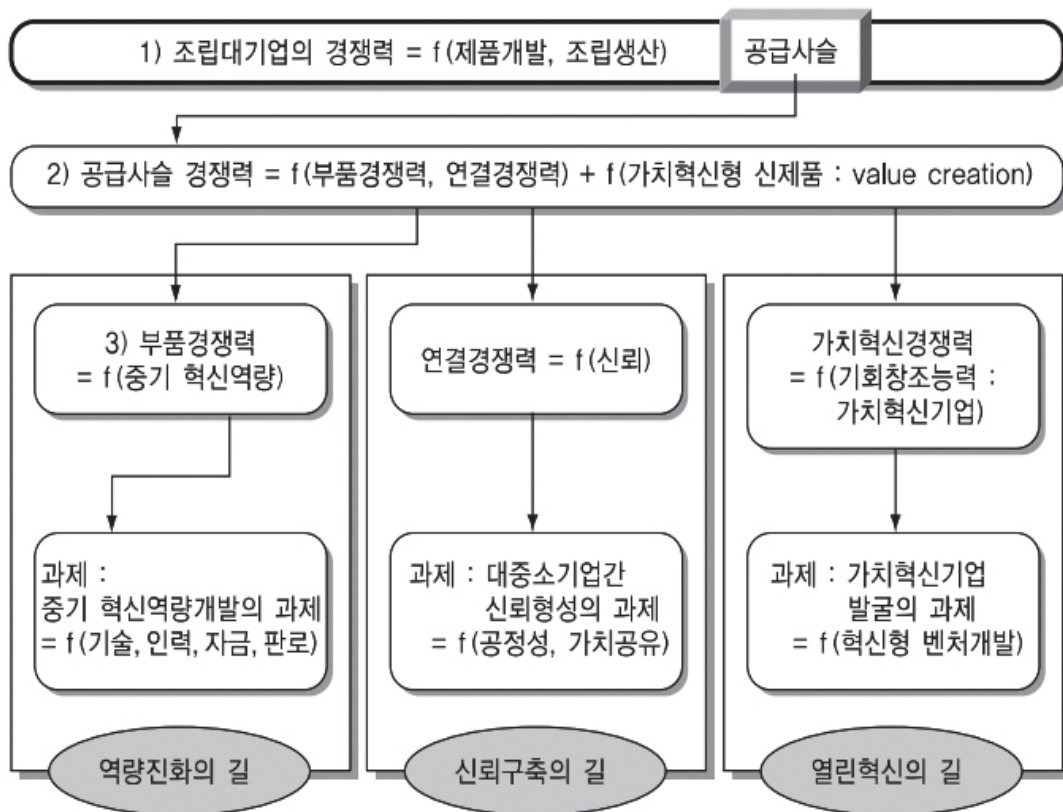
[표 3-1] CSR과 CSV차이점

구분	CSR	CSV
이념	사회적으로 선한행동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조화
핵심개념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기업, 지속가능성, 사회공헌	거업과 지역공동체의 상생가치 창출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	이익창출과 무관한 시혜적 활동(비용으로 인식)	이익 극대화를 위한 투자로 인식
사회공헌활동 선정과정	환경규제 등 외부압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설정	기업상황에 맞게 주체적으로 설정

## ■ 네트워크형 상생협력 모델

### • 기업 간 상호신뢰, 파트너십 기반의 협력관계

- 공급사슬(supply chain) 내 기업간 네트워크 상호작용이 핵심
- 이종의 기술 및 산업간 융합을 위하여 수직 계열화 된 기업생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사업발굴 필요



자료 : 한국중소기업학회(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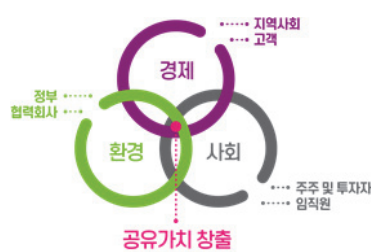
[그림 3-11] 공급사슬 중심의 상생협력 모델

[표 3-2] 상생협력 모델 특성 비교

구 분	주요 내용	핵심 키워드	정책 포커스	향후 과제
공공주도형	정부주도의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추진	적합업종 성과공유	중소기업 보호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과 연계
자율형	대기업 인프라 상생협력프로그램, 노하우 공유	자상한 기업, 공유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확산	충남형 자상한 기업 발굴 및 인증
CSR형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공생도모	윤리적 경영, 사회공헌(이윤환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지역사회 공헌사업 발굴
CSV형	기업의 경제적 가치 및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 조화	지역사회와 상생, 공유가치 창출	기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창출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상생협력 사업발굴
네트워크형	기업 간 상호신뢰와 파트너십 기반의 협력관계 유지	(느슨한 연결)네트워크, 상호작용	이종의 기술 및 산업 간 융합	수직적 계열화 된 기업생태계 보완사업 발굴



CSR형 상생협력 모델



CSV형 상생협력 모델



네트워크(Net-work)형 상생협력 모델

[그림 3-12] 상생협력 모델 비교

---

## 제4장

# 상생협력 의식조사

---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 제4장 상생협력 의식조사

### 1. 조사개요

#### 1) 조사목적 및 조사기간

##### ■ 조사목적

- 상생협력 인식수준 파악 및 정책방향 설정

##### ■ 조사기간

- 2020년 12월(약 2주간)

#### 2) 조사대상 및 방법

##### ■ 조사대상

- 충남도민(200부)
- 행정 및 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238부)
- 자기기입식 설문

#### 3) 설문 주요내용

##### ■ 설문 그룹별 난이도 조정

- 일반 도민과 행정 및 유관기관 종사자, 전문가 등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설문내용의 난이도 조정

구분	설문주요내용	
도민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등</li><li>• 동반성장 또는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li><li>• 동반성장 또는 상생협력 지원정책 및 참여주체별 역할</li></ul>	공동문항
행정 및 유관기관 종사자, 전문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등</li><li>• 동반성장 또는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li><li>• 동반성장 또는 상생협력 지원정책 및 참여주체별 역할</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동반 성장 또는 상생협력 정책 방향</li><li>• 5대 부문 18개 핵심과제의 현재 중요도 및 미래 지역사회 기여도(5점척도)</li></ul>	별도문항

#### 4) 조사대상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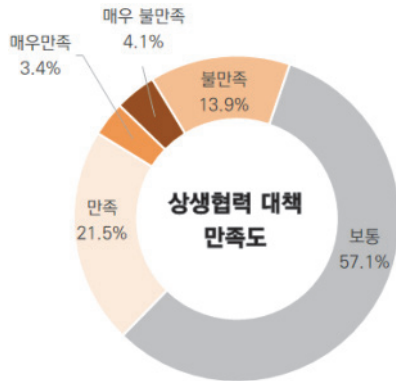
구분		충남 도민		행정 및 기관 관계자*	
		(명)	(%)	(명)	(%)
성별	남	100	50.0	143	60.1
	여	100	50.0	93	39.1
거주지 및 소재지	대전/세종/충북	-	-	70	29.4
	계룡	9	4.5	-	-
	공주	8	4	11	4.6
	금산	1	0.5	2	0.8
	논산	5	2.5	4	1.7
	당진	13	6.5	3	1.3
	보령	8	4	1	0.4
	부여	1	0.5	1	0.4
	서산	12	6	1	0.4
	서천	2	1	-	-
	아산	33	16.5	2	0.8
	예산	7	3.5	4	1.7
	천안	95	47.5	20	8.4
	청양	1	0.5	1	0.4
	태안	2	1	-	-
	홍성	3	1.5	107	45.0
연령	만 19세 ~ 29세	21	10.5	65	27.3
	만 30세 ~ 39세	34	17	86	36.1
	만 40세 ~ 49세	45	22.5	53	22.3
	만 50세 ~ 59세	73	36.5	30	12.6
	만 60세 이상	27	13.5	3	1.3
재직기관	행정기관	-	-	158	66.4
	연구기관	-	-	12	5.0
	유관기관	-	-	22	9.2
	단체	-	-	44	18.5
	기타	-	-	-	-

\* 행정 및 기관관계자 응답자 일부 개인 정보 기입하지 않음

## 2.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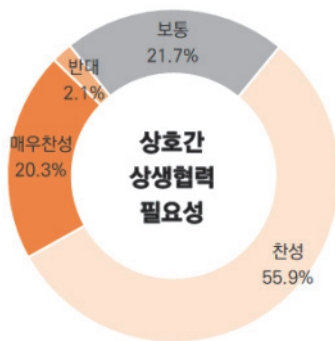
### 1) 공통문항

#### ■ 정부 및 지자체 상생협력 대책에 대한 만족도



- 정부 및 지자체 상생협력 대책에 대해 24.9%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음
  - 만족 24.9%(만족 21.5% + 매우 만족 3.4%)
  - 불만족 18.0%(불만족 13.9% + 매우 불만족 4.1%)
  - 57.1% 즉,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들은 상생협력에 대한 보통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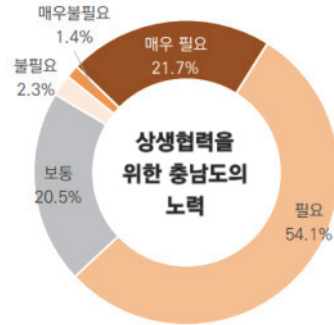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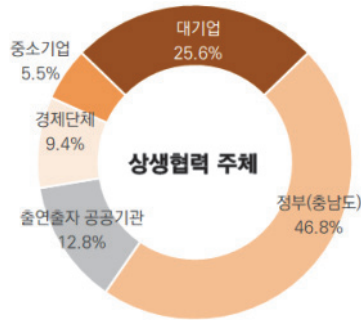
#### ■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공공기관 상호간 상생협력 필요성



-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공공기관 상호간 상생 협력은 76.2%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찬성 76.2%(찬성 55.9% + 매우찬성 20.3%)
  - 반대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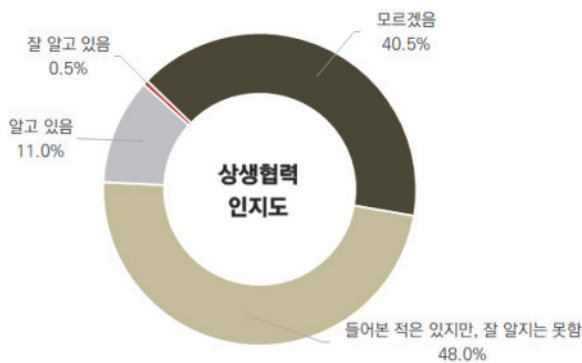
#### ■ 상생협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주체

- 상생협력을 위해 정부 및 충남도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46.8%)
  - 대기업(25.6%), 출연출자 공공기관(12.8%), 경제단체(9.4%), 중소기업(5.5%) 순으로 나타남
- 상생협력을 위해 충남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5.8%
  - 충남도의 상생협력 추진 노력이 불필요 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7%에 불과 (불필요 2.3% + 매우 불필요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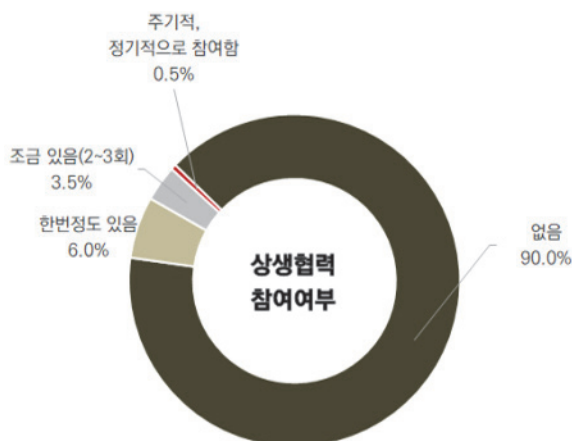
## 2) 일반시민대상

### ■ 충남도 내 상생 및 협력사업 인지도



- 지역사회 상생협력사업 인지도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11.5%에 불과함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0.5%,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도 48.0%로 상생협력사업에 대한 전반적 인지도는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 상생협력사업 참여 경험



- 상생협력 사업 및 활동 참여경험이 없다는 응답비중이 무려 90.0%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상생협력 사업에 한번정도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0%, 2~3회는 3.5% 수준임
  -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0.5%에 극히 소수에 불과함

- 상생협력 사업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 상생협력의 주최는 공공기관이었던 경우가 70.0%
  - 공공기관 외 일반 기업이 주최인 경우는 30.0%로 나타남

-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응답자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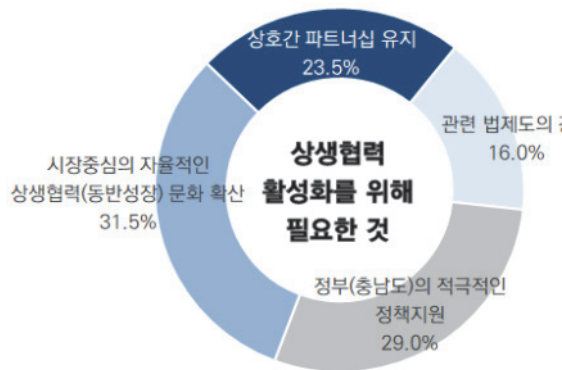


- 매우 도움이 되었으므로 응답한 비중은 10.0%이며, 다소 도움이 되었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90.0% 수준으로 나타남

-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 중 72.2%는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 참여가 어려웠다고 함
- 그 밖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음(15.6%), 소수(기관 및 업체)에게만 편중되는 혜택(8.3%), 참여에 따른 간접 우려(2.8%), 기타(1.1%)등의 순으로 나타남

### 3) 행정 및 유관기관 종사자, 전문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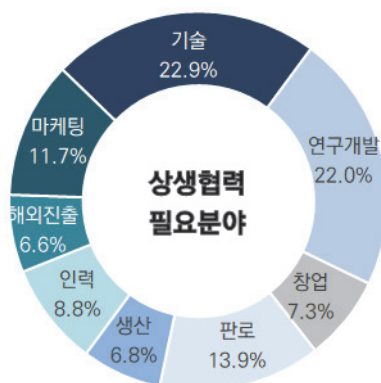
#### ■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응답자의 31.5%가 시장중심의 자율적 상생협력 문화 확산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 다음으로 정부 및 충남도의 적극적 정책지원 (29.0%), 상호 간 파트너십 유지(23.5%), 관련 법 제도 강화(16.0%)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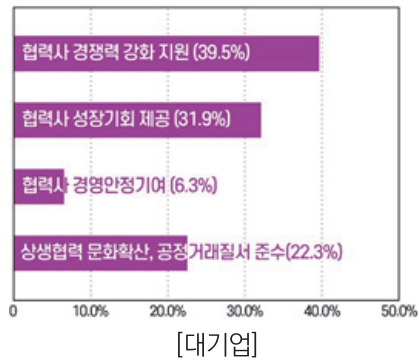
#### ■ 가장 필요한 상생협력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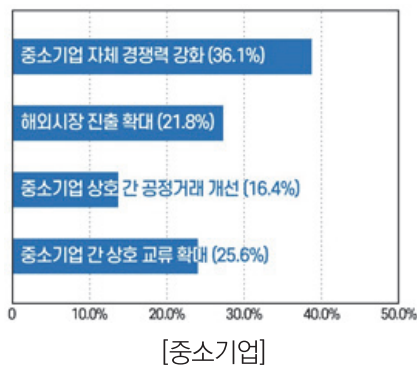
- 상생협력이 가장 필요한 분야는 기술(22.9%), 연구개발(22.0%) 순으로 나타남

- 그밖에, 판로(13.9%), 마케팅(11.7%) 분야에서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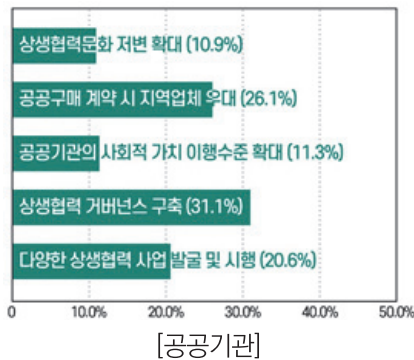
## ■ 상생협력을 위한 주체별 역할



- 상생협력을 위한 대기업의 역할로는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지원이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협력사의 성장기회 제공(31.9%), 상생협력 문화 확산 및 공정거래질서 준수(2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상생협력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로는 중소기업의 자체 경쟁력 강화가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중소기업간 상호교류 확대(25.6%), 해외시장 진출확대(21.8%), 중소기업 상호간 공정거래 개선(1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상생협력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로는 상생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공공구매 계약 시 지역업체 우대(26.1%), 다양한 상생협력사업 발굴 및 시행(20.6%),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이행수준 확대(11.3%), 상생협력 문화 저변확대(1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제5장

# 충남 경제상생협력 방안

---

1. SWOT분석 및 경제상생협력 기본방향
2. 핵심과제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3. 충남 경제상생협력 비전체계
4. 부문별 핵심과제 기본구상
5. 추진체계 및 실행 로드맵
6. 투자계획



## 제5장 충남 경제상생협력 방안

### 1. SWOT분석 및 경제상생협력 기본방향

#### 1) SWOT분석

##### ■ 충남 경제상생협력을 위한 SO, ST, WO, WT전략

- 도내 경제상생협력을 위한 SWOT분석 결과
  - (SO전략 : 강점의 극대화)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지역단위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도 출연·출자기관의 적극적 참여유도
  - (ST전략 : 기회의 확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장 마련, 지역상권 내 상생의 정책영역 확대, 수요 대응형 상생협력 정책 추진, CRS기업의 공공우대 및 CSV비즈니스 모델 발굴
  - (WO전략 : 약점의 개선) 지역경제 내 상생협력 문화저변 확대, 민간주도의 상향식 전달체계 도입, 중앙부처 사업연계로 실행 용이성 확보, 포용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 (WT전략 : 위협에 대응) 상생협력 정책의 체계적·통합적 운용, 민간부문의 이니셔티브 존중, 대기업의 다각적 참여유도



[그림 5-1] SWOT분석

## 2) 경제상생협력 기본방향

### ■ 경제상생협력 변화양상

#### • 비전

- 과거에는 경제의 선진화와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향후에는 '상생과 공존'의 경제 생태계 조성이 중요할 전망
- 포용적인 충남형 경제생태계 조성 및 국가비전을 보완하는 지역 주도의 상생협력 비전 설정

#### • 정책목표 및 정책영역

- 대·중소기업 중심의 동반성장에서 경제적 취약계층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목표로의 전환과 지역 경제 주체간의 다양한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정책영역의 확대

#### • 운용방식

- 과거 정책영역별 분절적 운영에서 향후 체계적·통합적 정책운용을 통해 정책효과의 극대화 모색

#### • 전달체계

- 민간부문의 창의성 및 자율성에 기반한 상향식(bottom-up) 정책전달체계(delivery system)구축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제고

과 거	VS	향 후	
동반성장	정책기조	포용성장	지역경제 구성원 간 소통·협력·참여에 기반한 상호호혜주의 지향
대중소 기업 동반성장	정책목표	포용적 상생협력	중소기업 중심에서 경제적 취약계층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목표로 전환
기업생태계 중심	정책영역	지역경제 생태계 전반	지역 경제주체간 다양한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정책영역의 확대
정책영역별 분절적 운용	운용방식	체계적·통합적 정책운용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체계적·통합적 운용
공공주도	전달체계	지역 및 주민주도	민간의 창의성 및 자율성 증진을 위한 상향식 정책전달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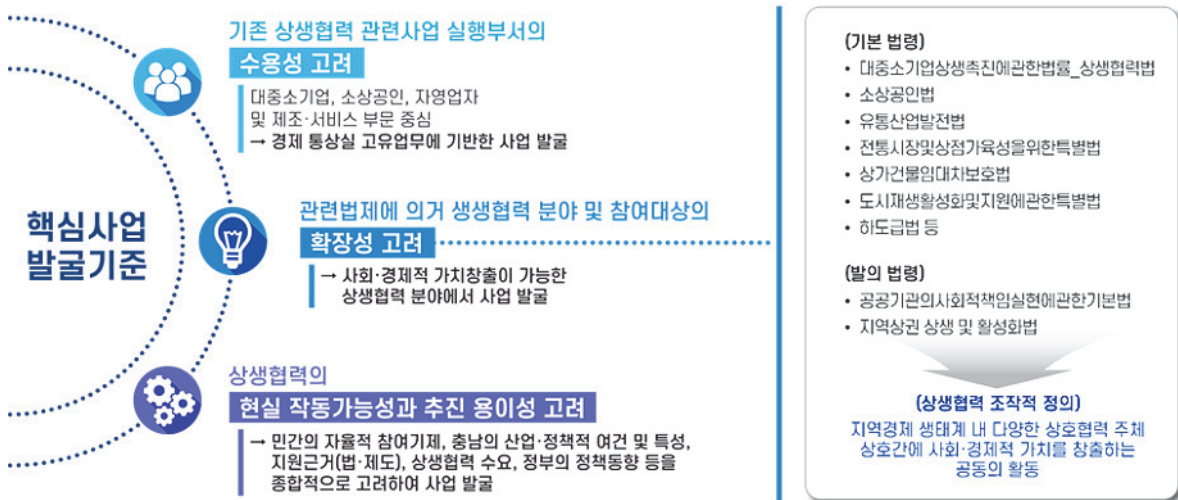
[그림 5-2] 충남 경제상생협력 정책방향

## 2. 핵심과제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1) 핵심과제 선정기준

#### ■ 사업 추진을 위한 3가지 고려(수용성, 확장성, 현실작동성)

- **수용성**
  - 기존 상생협력 관련사업 실행부서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경제통상실 고유 업무에 기반한 사업 발굴
  -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제조 서비스 부문 중심
- **확장성**
  - 관련법제에 의거하여 상생협력 분야 및 참여대상의 확장성 고려
  - 사회·경제적 가치창출이 가능한 상생협력 분야에서의 사업 발굴
- **현실 작동가능성**
  - 상생협력 참여주체의 현실 작동가능성과 정책추진의 용이성을 고려
  - 민간의 자율적 참여기제, 충남의 산업 및 정책적 여건과 특성, 지원근거(법·제도), 상생협력 수요, 정부의 정책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그림 5-3] 경제상생협력 핵심과제 발굴 기준

## 2) 핵심과제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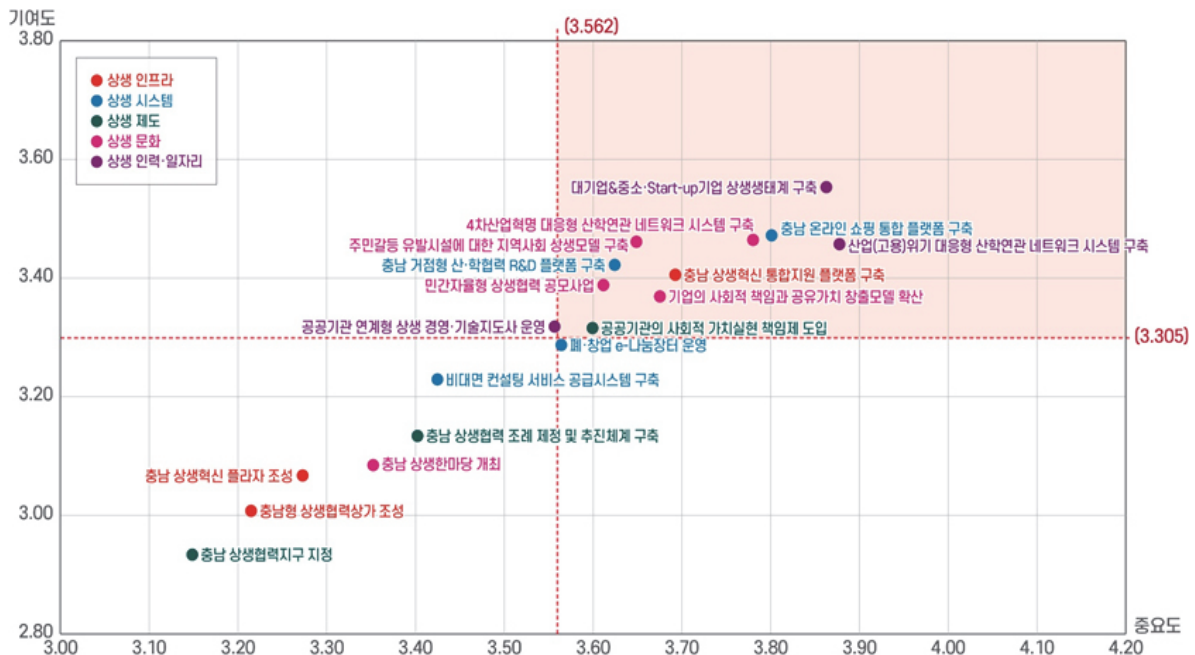
### ■ 5대 부문 18개 핵심과제의 중요도 및 지역사회 기여도

#### • 충남 경제상생협력 5대 부문별 18개 핵심과제

- 상생제도 부문(3개) : ① 충남 상생협력 조례 제정, ②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책임제 추진, ③ 충남 상생협력지구 지정
- 상생인프라 부문(3개) : ① 충남형 상생협력상가 조성, ② 충남 상생혁신 플라자(Plaza) 조성, ③ 충남 상생혁신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 상생시스템 부문(4개) : ① 충남 온라인 통합 상생몰(Mall) 구축·운영, ② 폐·창업 e-나눔(상생)장터 운영, ③ C-비대면 상생바우처 플랫폼 구축, ④ 충남 거점형 산·학 협력R&D 플랫폼 구축
- 상생문화 부문(5개) : 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 창출 문화 확산, ② 충남 상생 한마당 개최, ③ 4차 산업혁명 대응형 혁신·상생 네트워크 구축, ④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민간참여 확산(공모사업), ⑤ 갈등시설과 지역사회간 상생문화 선도
- 상생인력·일자리 부문(3개) : ① 공공기관 연계형 상생 경영·기술 지도사 운영, ② 산업 및 고용위기 상시 대응형 구인·구직 매칭 시스템 구축, ③ 대기업&중소·Start-up 기업 상생 생태계 구축

#### • 제 1사분면 : 정책적 중요도와 지역사회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핵심과제

- 정책적 중요도 평균 : 3.305, 지역사회 기여도 평균 : 3.5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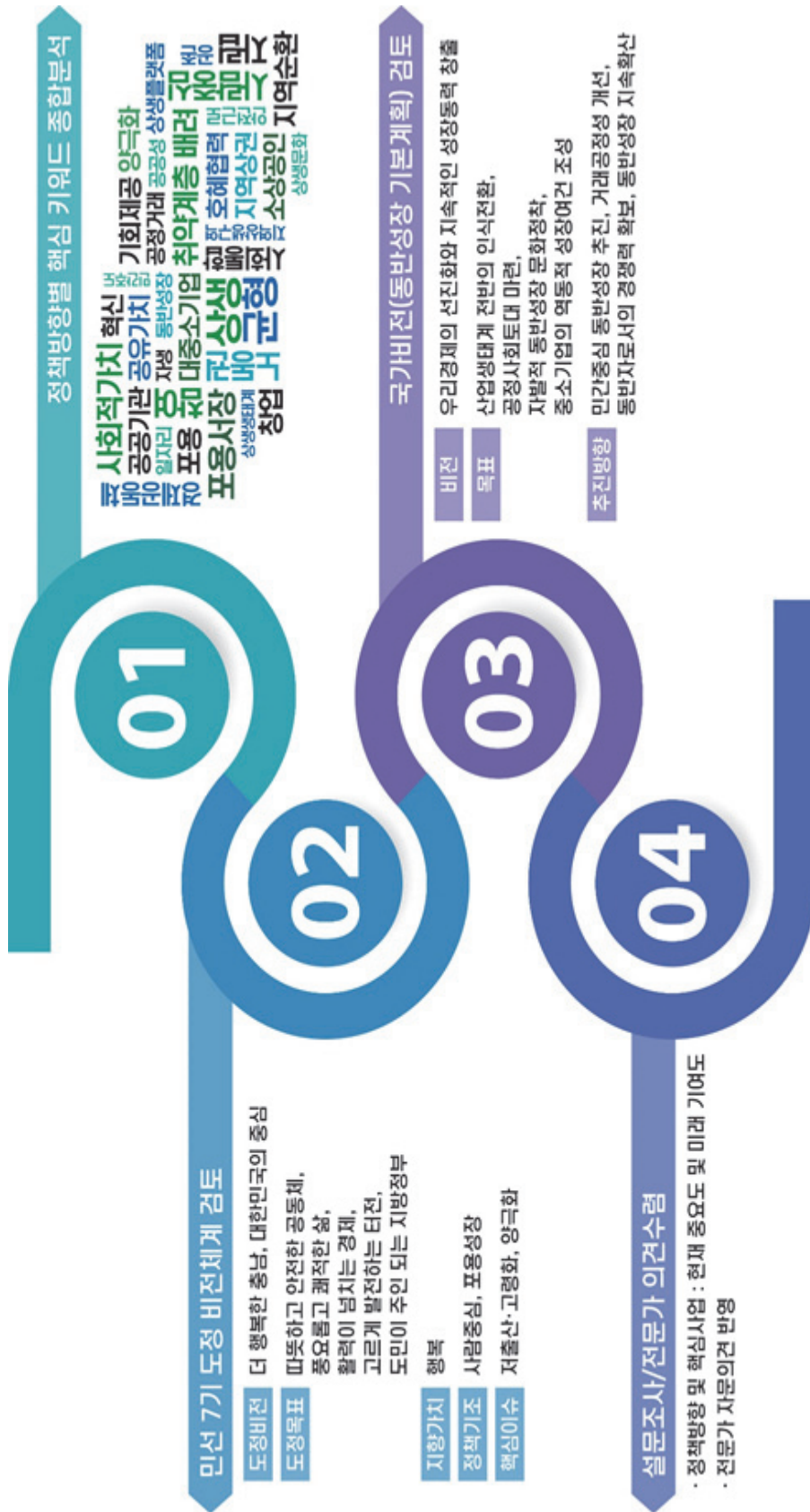


[그림 5-4] 핵심과제의 정책적 중요도 및 지역사회 기여도



### 3. 충남 경제상생협력 비전체계

#### ■ 비전 도출체계



[그림 5-5] 경제상생협력 비전도출 체계



[그림 5-6] 충남 경제상생협력 비전체계

## 4. 부문별 핵심과제 기본구상

### 상생 제도

#### 1. 충남 상생협력 조례 개정

##### ■ 중요도 및 지역사회 기여도

- 중요도 3.403, 지역사회 기여도 3.143
  - 전체부문 내 순위 : 14위
  - 상생제도부문 내 순위 : 2위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충남도는 지역경제 생태계 전반의 상생협력을 추진할 제도적 근거로 ‘충청남도 경제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2020.12.30.)
  - 동 조례상에는 참여(경제)주체의 외연이 대·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공공기관, 대학, 사회적 경제조직으로까지 확대됨
- 관련하여 정부는 ‘상생과 공존’을 목적으로 관련법을 제정 추진 중임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충남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상생협력 정책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

##### ■ 現 충청남도 경제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

- 현재, 충남도는 ‘상생과 공존’의 포용적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해 ‘충청남도 경제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동 조례의 주요내용
    - ▶ 경제주체 정의(제2조), 책무(제3조), 상생협력 실태조사(제5조), 기본계획 수립(제6조), 시행계획 수립(제7조), 위원회 설치·운영(제9조~제18조), 충남 상생협력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제19조~제2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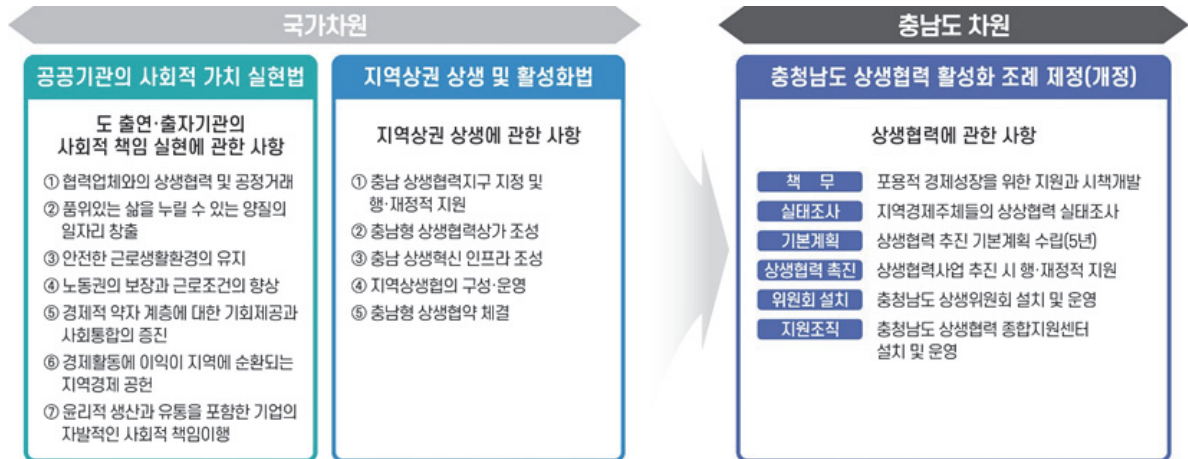
##### ■ 조례개정 사항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법 발의(‘20.9)
  - 도 출연·출자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7가지 사항
    - \* ①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②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③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④ 노동권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⑤ 경제적 약자계층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의 증진, ⑥ 경제활동의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⑦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이행 등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법 발의(20.7)

– 지역상권 상생에 관한 5가지 사항

- \* ① 충남 상생협력지구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 ② 충남형 상생협력상가 조성, ③ 충남 상생혁신 인프라 조성, ④ 지역상생협의체 구성운영, ⑤ 충남형 상생협약 체결 등



[그림 5-7] 충남 경제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개정 사항

■ 추진방안

- (1단계) 충청남도 경제실 내 관련실과의(일자리 노동정책과, 소상공 기업과 등) 사전 의견수렴
- (2단계) 충청남도 상생위원회를 통해 조례개정 사항검토 → 개정내용 최종결정 → 도의회 상정

■ 투자계획

- 비예산 사업

■ 기대효과

- 충남 경제상생협력의 실효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상생협력 관련법 제정에 따른 충청남도 관련 실국간 업무 중복성 사전예방
- 상생협력 관련 국가법 제정에 따른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수단 구비

### ■ 중요도 및 지역사회 기여도

- 중요도 3.601, 지역사회 기여도 3.319
  - 전체부문 내 순위 : 10위
  - 상생제도부문 내 순위 : 1위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은 양극화 해소의 대안 중 하나로 2020년 9월 10일 발의됨
  - 동 법령의 제정목적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 과정에서 ‘협력과 상생’이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경제·사회 추구임
  - 따라서 도내 공공기관의 원활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충남도 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 \* 동 법령상 포함된 주요내용

- 인권보호, 안전한 근로, 노동권 보장
- 경제적 취약계층(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 통합
-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경제활동의 지역순환
-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 환경의 지속가능성
-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 공동체 이익실현과 공공성

#### \* 공공기관의 범위 및 책무

- 공공기관 범위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관, 지방 직영기관, 지방공사, 지방 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책무 : 법령 및 조직정비, 필요시책 수립·추진(사회적 가치실현기본계획 수립, 5년 단위), 지역 사회적가치 위원회(가칭)구성 및 운영 등

## ■ 사업개요

• 사업명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책임제

• 사업내용 :

- ① 충남도 및 시·군, 도 출연·출자기관의 사회적 책임조달 시스템 구축
  - ▶ 공동구매 및 입찰·계약 등 공공조달의 통합적 관리시스템 구축
  - ▶ 공공조달 계약금액 탄력적 조정(물가변동 및 변경계약 사유 시)
- ② 도 및 15개 시·군 출연·출자기관 대상 경영평가 시 사회적 책임 이행수준 확대 반영
- ③ 공공구매 및 계약 시 책임조달(responsible procurement) 인센티브 제공
  - ▶ 고용취약계층 고용비중이 높은 사업체 우대
  - ▶ CSR 및 CSV 이행업체 인센티브 제공(지원사업 신청 및 계약 우대)
  - ▶ 원자재 및 중간재 지역조달 비중이 높은 사업체 우대 등
- ④ 충남 경제상생협력 활성화 조례 개정
  - ▶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한 내용을 충남 상생협력 활성화 조례에 반영
- ⑤ 충남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상생협력 기본계획 수립(5년)
- ⑥ 충남 사회적 가치 및 상생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⑦ 충남형 사회책임 투자채권 발행



[그림 5-8]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책임제

## ■ 투자계획

• 비예산 사업

## ■ 기대효과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실행기반 구축
-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도내 상생협력 문화의 확산 선도 및 저변 확대

### ■ 중요도 및 지역사회 기여도

- 중요도 3.147, 지역사회 기여도 2.950
  - 전체부문 내 순위 : 18위
  - 상생제도부문 내 순위 : 3위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및 제정을 추진 중임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 개편('20.6.25)
  -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지정·운영을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법 발의('20.7.15)
  - 따라서 충청남도 차원의 '상생협력지구'를 예비 지정하여 상기 제도와 연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위기상황 해소할 필요

### ■ 대상지역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의32)에 해당되는 밀집지역 중 15개 시군별 각1개 지구(시범지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제2의2호·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 도시형 소공인 자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소상공인 집적지구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제2조제6항·제2조제9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 충청남도 자체지정 상생산업단지

### ■ 지정기준 및 지원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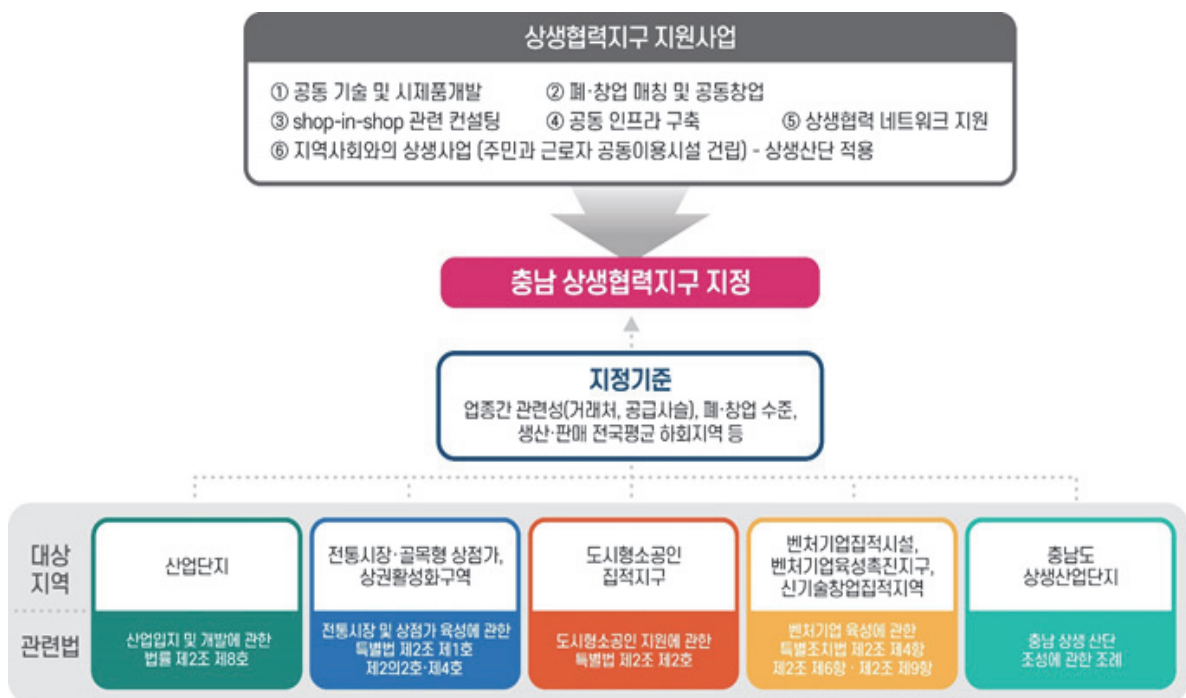
- 지정기준 및 지원근거
  - 지정기준 : 업종 간 관련성(거래처, 공급사슬), 폐·창업 수준, 생산·판매 전국 평균 하회지역 등
  - 지원근거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제도, 지역 상권상생 및 활성화법, 충남 경제상생협력 조례
- 상생협력지구 지원사업
  - ① 공동 기술 및 시제품 개발



- ② 페·창업 매칭 및 공동창업
- ③ shop-in-shop 관련 컨설팅
- ④ 공동인프라 구축
- ⑤ 상생협력 네트워크 지원
- ⑥ 지역사회와의 상생사업(주민과 근로자 공동이용시설 건립) : 충남 상생산단에 적용

• **운용 및 지원방안**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상생구역과 연계하여 운용
- 지원(유관)기관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대전충남세종지부와의 MOU체결



[그림 5-9] 충남 상생협력지구 지정 개요

■ **투자계획**

- 지구지정 자체는 비예산 사업
- 상생협력지구 대상 지원사업은 기존사업과 연계·추진

■ **기대효과**

- 상생협력지구 지정을 통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위기상황 완화
- 정부 각 부처별 관련사업과 연계함으로써 도 예산부담 최소화



### ■ 중요도 및 지역사회 기여도

- 중요도 3.214, 지역사회 기여도 3.021
  - 전체부문 내 순위 : 17위
  - 상생인프라부문 내 순위 : 3위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상권 쇠퇴지역 내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력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 조성
  - 충남 도내 북부권을 제외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 소비수요 부족 등에 기인한 빈집·빈점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해당 지역의 낙후도 개선 및 지역경제 내 활력 부여의 일환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충남형 상생협력상가 조성 필요

#### \* 상생협력 상가

- 도시재생지역 내 영세 상인들의 내몰림 현상(gentrification)을 최소화하고 빈 점포 등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청년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경제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상업용 건물(국토부 사업)

#### \* 충남형 상생협력상가

- 충남 균형발전 지원대상 8개 시·군 내 빈집, 빈 점포 등을 대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상호간 상생의 경제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조성한 상업용 공간
- 임대인 : 리모델링비 지원, 임차인 : 생활혁신형 창업교육 및 컨설팅, 창업비용 지원

###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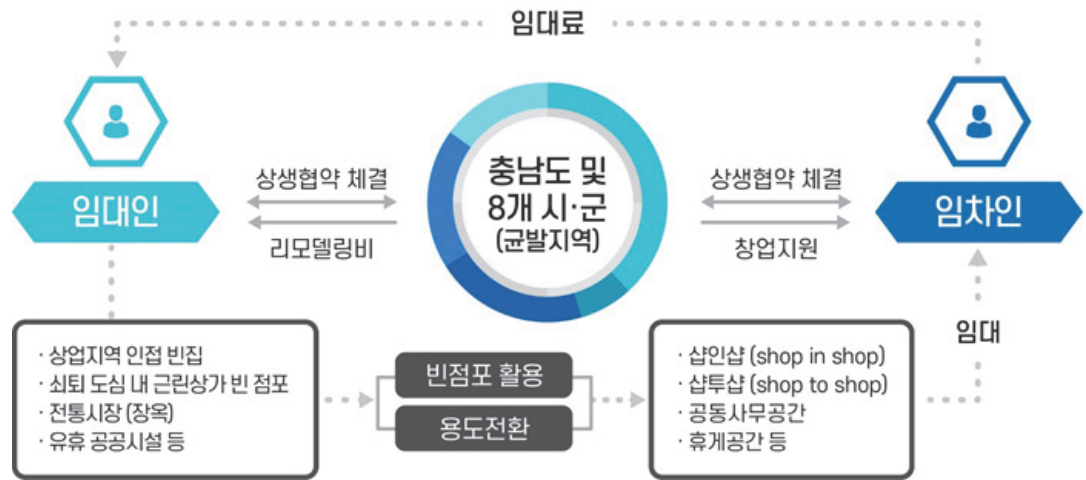
#### • 대상지역

- 대상지역 : 충남 균형발전 지원 대상 시·군(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 등 8개 시·군)의 상업지역 인접 빈집, 쇠퇴 도심 내 근린상가 빈 점포, 전통시장(장옥), 유희 공공시설 등

#### • 사업내용

- 도입시설 : 상가규모에 따라 유동적임(shop in shop, shop to shop 공간, 공동사무공간, 휴게공간 등)
- 지원내용 : (임대인)리모델링비 지원, (임차인)생활혁신형 창업교육 및 컨설팅, 창업비용 지원 등

- 운용방안 : ① 충남 균형발전사업 연계, ② 도시재생사업 및 농촌중심지 사업 연계(사업확대 시)
- 상생협약체결 내용 : 충남형 상생협약 표준안 적용 또는 국토부 상생협약 표준안 준용(도시재생특별법 제27조의 2)



[그림 5-10] 충남형 상생협력상가 조성 개요

## ■ 투자계획

[표 5-1] 단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재원	추진단계			
		합계	1단계('21~'23)	2단계('24~'26)	3단계('27~'30)
충남형 상생협력상가 조성	합 계	20,000			20,000
	국 비	10,000			10,000
	지방비	10,000			10,000
	민 자				

## ■ 자원조달방안

### • 지원근거 및 자원조달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자원조달 : 충남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활용 및 국토부 상생협력상가 조성 공모사업

## ■ 기대효과

- 도내 지역균형발전 대상 8개 시군의 낙후도 개선 및 균형발전 모색
- 임대인-임차인간 상호이익 증진 및 상권쇠퇴지역 활성화

## ■ 중요도 및 지역사회 기여도

- 중요도 3.273, 지역사회 기여도 3.080
  - 전체부문 내 순위 : 16위
  - 상생인프라부문 내 순위 : 2위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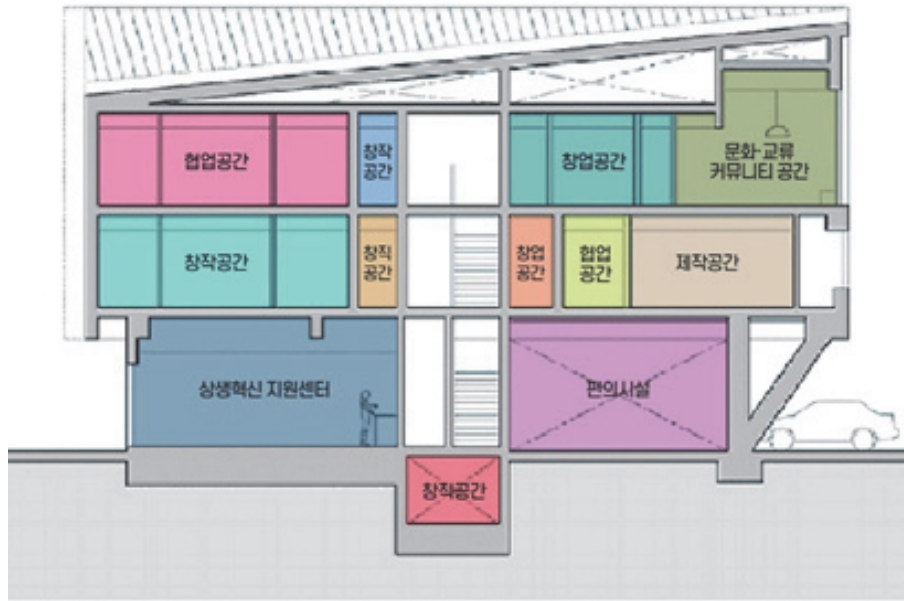
- 복합형 스타트업 파크와 연계한 생활혁신형 소상공 창업 인큐베이팅 거점 조성
  - 현재 조성예정 중인 천안 역세권 복합형 스타트업 파크는 주거와 창업타운을 연계한 사업으로 개방형 혁신벤처 창업거점 기능 담당(스타트업 및 혁신기업 중심)
  - 이와 연계한 시민, 대학생, 퇴직자, 예비 창업자 간 소통·교류·협력 기반의 상생혁신 활동을 통해 생활혁신형 소상공 창업 인큐베이팅 거점 기능을 담당할 창작·창직 인프라 조성 要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 20.6.11

## ■ 사업 개요

- 대상지역
  - 천안·아산 KTX역사 내 2,3층(16,000㎡) / 현재 공실
- 주요기능 및 활용 방안
  - 주요기능 : 상생협력 활동이 가능한 물리적 공간 및 플랫폼 기능(생활혁신형 창업·창작·창직 거점 공간), 인큐베이팅 기능
  - 도입시설 : 협업공간, 창작공간, 창직공간, 창업공간, 제작공간, 문화 및 교류 커뮤니티 공간, 상생혁신 지원센터, 편의시설 등
  - 연계방안 : 중기부 생활혁신형 소상공 창업소상공인 협업아카데미 지역거점 사업으로 추진
    - 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화 및 창업 아이디어 보유자는 복합형 스타트업 파크로 입주 추진
    - ② 일반 생활혁신형 소상공 창업의 경우에는 충남형 상생협력 상가로 입주 추진



[그림 5-11] 충남 상생혁신 플라자(Plaza) 구상도

## ■ 투자계획

[표 5-2] 단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재원	추진단계			
		합계	1단계('21~'23)	2단계('24~'26)	3단계('27~'30)
충남 상생혁신 플라자(Plaza) 조성	합 계	20,000			20,000
	국 비	10,000			10,000
	지방비	10,000			10,000
	민 자				

## ■ 자원조달방안

### • 지원근거 및 자원조달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공모사업(시설·공간·보육사업)

## ■ 기대효과

- 시민·대학생·퇴직자·예비 창업자 대상 생활혁신형 소상공 부문 창업 활성화
- 복합형 스타트업 파크 및 충남형 상생협력상가와 연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제고

## ■ 중요도 및 지역사회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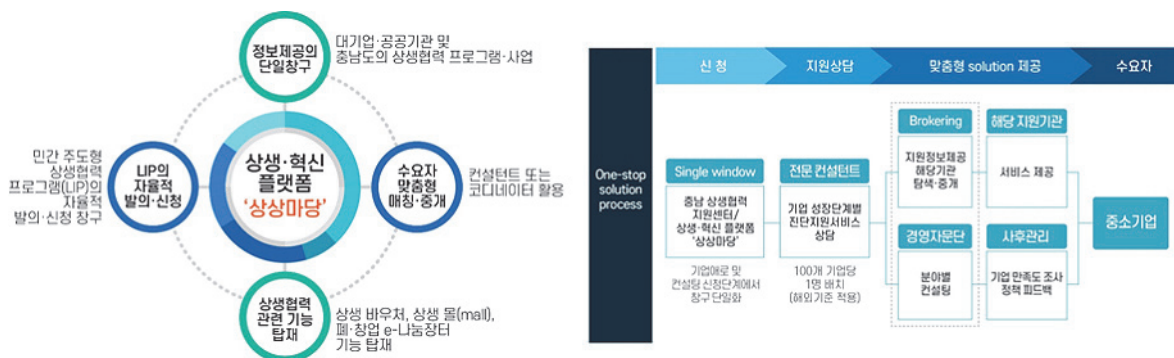
- 중요도 3.693, 지역사회 기여도 3.412
  - 전체부문 내 순위 : 6위
  - 상생인프라부문 내 순위 : 1위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원스탑 지원 서비스에 대한 현장수요가 상당함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중 하나로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구득 및 원스탑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상당함
    - ▶ 다양한 정보구득 채널과 다수의 지원기관은 오히려 정책수요자의 탐색비용 증가 및 혼란 가중
  -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원수요(needs)에 부합하는 사업이나 서비스를 탐색 및 알선하여 중개해 줄 수 있는 단일창구(single window) 마련 필요

## ■ 사업개요

- 사업명 : 상생마당
  - 상생혁신 플랫폼의 기능과 역할
    - ▶ 대기업·공공기관 및 충남도의 상생협력 프로그램과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의 단일창구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으로 정보제공 범위의 외연적 확대 : 이용률 제고 차원)
    - ▶ 컨설턴트 또는 코디네이터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매칭·중계(matching&brokering)
    - ▶ 민간 주도형 상생협력 프로그램(LIP)의 자율적 발의·신청 창구
    - ▶ 상생 바우처 플랫폼, 폐·창업 e-나눔장터, 상생 물(mall)기능 통합 탑재
  - 운영주체 : 충남 상생협력 종합지원센터



[그림 5-12] 상생혁신 플랫폼의 기능 및 역할

## ■ 투자계획

[표 5-3] 단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자원	추진단계			
		합계	1단계('21~'23)	2단계('24~'26)	3단계('27~'30)
충남 상생혁신 통합지원 플랫폼(상생마당) 구축·운영	합 계	500	500		
	국 비				
	지방비	500	500		
	민 자				

## ■ 세부 사업내역

구 분	세부사업 내역
1. 충남 공사랑 (온라인 통합 상생Mall)	1-1. 공산품 DB플랫폼 구축 1-2. 오픈 마켓형 종합 쇼핑몰 플랫폼 구축 1-3. 상생몰 탑재용 사진촬영 및 상세페이지 디자인 1-4. 공산품 연관검색 및 결제시스템 구축
2. 폐·창업 e-나눔장터	2-1. 오픈 마켓형 쇼핑몰 플랫폼 구축 2-2. 지리정보시스템 기반 검색시스템 구축 2-3. 전자거래 서비스 시스템 구축 2-4. 나눔장터 탑재용 사진촬영 및 상세페이지 디자인 2-5. 결제시스템 구축 등
3. C-비대면 상생바우처 플랫폼	3-1. 상생 바우처 운영체계 및 시스템 구축 3-2. 상생 바우처 정보시스템 구축 3-3. 결제 시스템 구축 등
4. 운영인력	4-1. 전문컨설턴트 채용 4-2. DB구축 및 유지관리
5. 공 통	5-1. 신규 서비스용 인프라 구축(WEB서버, DB서버, 방화벽 등) 5-2. 통합 플랫폼(서버사양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유지 및 보수 등)

\*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기능과 웹 호스팅 여부 등에 따라 사업비 규모는 유동적임

## ■ 자원조달방안

- 충남도 자체예산(충남 공사랑 및 폐·창업e-나눔장터는 기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

## ■ 기대효과

-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의 탐색비용 절감 및 이용 편의성 제고
- 상생협력 관련 On-line 기반의 지역단위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 중요도 및 지역사회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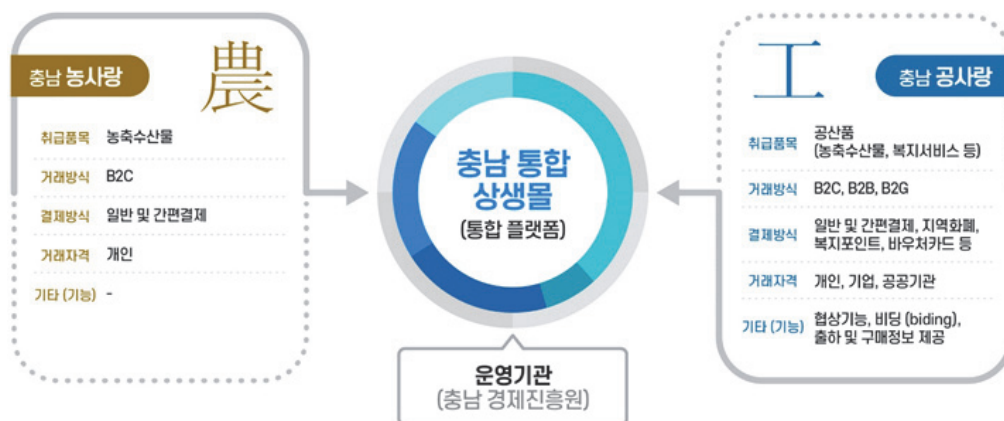
- 중요도 3.803, 지역사회 기여도 3.475
  - 전체부문 내 순위 : 3위
  - 상생시스템부문 내 순위 : 1위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도내 중소기업 및 소공인 제품을 전담 거래하는 지역단위 온라인 쇼핑몰 부재
  - 정부차원에서는 대기업 혹은 협력사 임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 등으로 중소기업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전국단위 온라인 쇼핑몰인 동반성장몰을 구축 및 운영 중임
    - ▶ 도입현황 : 민간기업(16), 공공기관(35), 지방자치단체(3)
  - 농특산물 온라인 직거래 장터인 '농사랑'이 운영 중이나 중소기업 및 소공인 제품은 미 취급
  - 농사랑의 기능적 한계를 넘어 취급품목 확대 및 결제방식의 다양화,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와 함께 공공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지역단위 온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要
    - ▶ 현재 발의중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법 중에서는 상생협력 및 지역경제 순환활동 조항이 포함되어 따라 청년 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소공인 등의 판로확대 필요

### ■ 사업개요

- 사업명 : 충남 통합 상생몰(mall) 구축·운영(농사랑+공사랑)



[그림 5-13] 충남 통합 상생몰 구축

- 사업내용 : 기업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소비자 수요 맞춤형 온라인 유통플랫폼 구축
- 추진방식 : 공공기관의 조달시스템과 충남 통합 상생몰 연계(향후 성과지표 반영)

- 운영기관 : 충남 경제진흥원
- 단계별 추진방안 :
  - ▶ 1단계) 도 출연·출자기관
  - ▶ 2단계) 유관기관 및 대기업(공기업 포함)으로 확대
- 공공기관 서비스 도입 유형 : 복지포인트 배정, 기관활동에 필요한 수요물품 조달 등

## ■ 추진방안

- 농사랑과 공사랑을 연계한 통합 상생몰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경제실 주도의 공사랑을 별도로 구축·운영

## ■ 투자계획

[표 5-4] 단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재원	추진단계			
		합계	1단계('21~'23)	2단계('24~'26)	3단계('27~'30)
충남 온라인 통합 상생몰(Mall) 구축·운영	합 계	500	500		
	국 비				
	지방비	500	500		
	민 자				
	세부사업 내역				
	1-1. 공산품 DB플랫폼 구축 1-2. 오픈 마켓형 종합 쇼핑몰 플랫폼 구축 1-3. 상생몰 탑재용 사진촬영 및 상세페이지 디자인 1-4. 공산품 연관검색 및 결제시스템 구축				

\*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기능과 웹 호스팅 여부 등에 따라 사업비 규모는 유동적임

## ■ 재원조달방안

- 충남도가 기 확보한 관련예산 활용
  - 정보화 담당관실 : 10억(국비 + 도비)확보

## ■ 기대효과

- 청년 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소공인 등의 판로확대
- 지역단위 온라인 통합 상생몰 구축을 통한 지역 유통경제 활성화



### ■ 중요도 및 지역사회 기여도

- 중요도 3.563, 지역사회 기여도 3.298
  - 전체부문 내 순위 : 12위
  - 상생시스템부문 내 순위 : 2위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경기침체 및 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폐·창업 비용 부담 증대
  - 적자 경영 등으로 인한 폐업 시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입주 및 영업시설 설치에 투입된 초기 비용은 매물비용으로 처리되거나 중고 물품업체에 헐값에 거래되는 실정임
    - ▶ 원상복구 비용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반면, 신규 창업 시 리모델링된 입주 및 영업시설을 활용하는 경우, 고정비용(초기 창업비용)을 절감시켜 창업비용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음
  - 따라서 폐업자와 창업자 간 필요물품 수급의 원활한 매칭은 경제적 측면의 상생뿐만 아니라 자원 순환 측면에서도 환경비용 유발을 최소화함
    - ▶ 환경부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입법 추진에 따라 재활용 정책 강화 전망

### ■ 사업 개요

- 사업명 : 폐·창업 e-나눔(상생)장터 구축



[그림 5-14] 폐·창업 e-나눔(상생)장터 구축

- 주요내용 : 중고자원 공급자와 수요자 간 상생 생태계 조성
  - ▶ 지리정보시스템 기반 검색 탑재(중고물품의 종류, 지역, 상태 등 사전 파악)
  - ▶ 전자입찰 시스템 탑재(입찰 수수료 없이 당사자 간 거래)
  - ▶ 스마트 앱을 통해 물품등록과 구매 진행
- 사업방식 : 재활용 업체 및 폐업자 중고물품 등록 → 신규 창업자 중고물품 거래 신청 → 거래 당사자 간 직거래(온라인 장터 운영)
  - ▶ 판매자(폐업자)에게는 수익창출, 구매자(창업자)에게는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옴

## ■ 투자계획

[표 5-5] 단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재원	추진단계			
		합계	1단계('21~'23)	2단계('24~'26)	3단계('27~'30)
폐·창업 e-나눔(상생)장터 운영	합 계	500		500	
	국 비				
	지방비	500		500	
	민 자				
	세부사업 내역				
	2-1. 오픈 마켓형 쇼핑물 플랫폼 구축 2-2. 지리정보시스템 기반 검색시스템 구축 2-3. 전자거래 서비스 시스템 구축 2-4. 나눔장터 탑재용 사진촬영 및 상세페이지 디자인 2-5. 결제시스템 구축 등				

\*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기능과 웹 호스팅 여부 등에 따라 사업비 규모는 유동적임

## ■ 자원조달방안

- 충남도가 기 확보한 관련예산 활용
  - 정보화 담당관실 : 10억(국비 + 도비)확보

## ■ 기대효과

- 폐업자와 창업자간 거래물품 수급시스템 구축으로 상호간 이익 증대
- 자원순환 측면에서 재활용에 따른 환경비용 유발 최소화

### ■ 중요도 및 지역사회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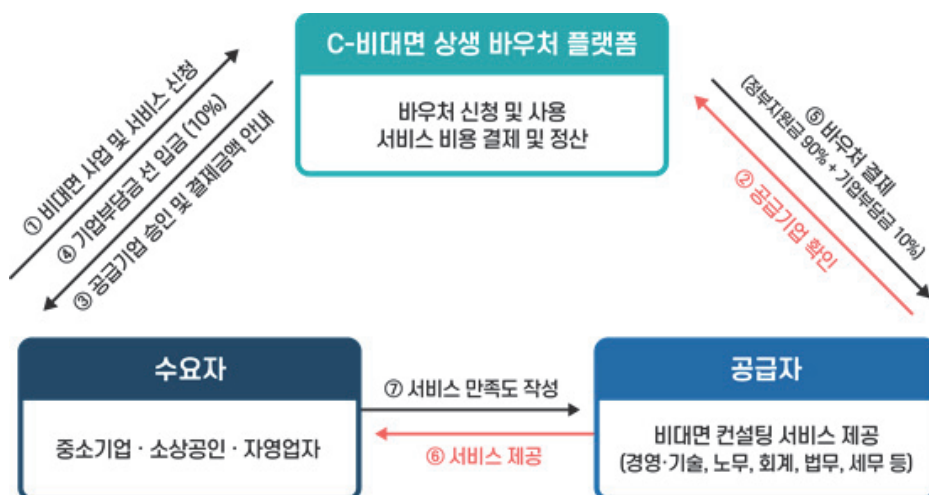
- 중요도 3.424, 지역사회 기여도 3.235
  - 전체부문 내 순위 : 13위
  - 상생시스템부문 내 순위 : 3위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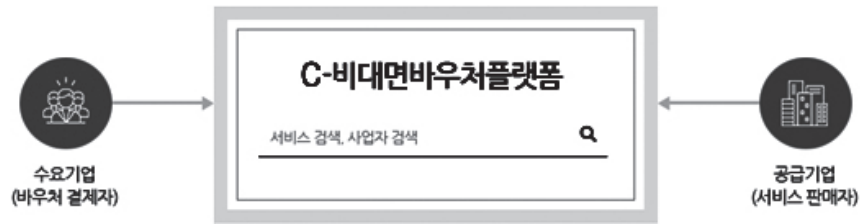
- 지역 서민경제 침체 및 코로나 19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악화 심화
  - 정부와 충남도 차원의 다양한 지원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전반에 걸친 다양한 대면 컨설팅 서비스는 잠정 중단된 상태
  - 기존 컨설팅 서비스의 공급자 서비스 영역 확대와 수요자 컨설팅 수요를 상호 충족시킬 수 있는 충남도 차원의 비대면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 요

### ■ 사업개요

- 사업명 : C-비대면 상생 바우처 플랫폼 구축
  - 사업내용 : 공급자(도내 재무, 회계, 인사, 노무, 수출입 상담업체 및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와 수요자(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연결하는 오픈 마켓 구축
  - 사업방식 : 비대면 컨설팅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온라인으로 연결 및 처리  
(참여신청 → 바우처 사용 → 결제 및 정산까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대면 처리)



[그림 5-15] C-비대면 상생바우처 플랫폼 구축



## ■ 추진방안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대전·충남·세종지부와 연계하여 비대면 컨설팅 서비스 제공 추진
- 향후 코로나 19 소멸 시 대면 컨설팅 서비스 체제로 전환

## ■ 투자계획

[표 5-6] 단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재원	추진단계			
		합계	1단계('21~'23)	2단계('24~'26)	3단계('27~'30)
C-비대면 상생 바우처 플랫폼 구축	합 계	1,000			1,000
	국 비				
	지방비	1,000			1,000
	민 자				
	세부사업 내역				
	3-1. 상생 바우처 운영체계 및 시스템 구축 3-2. 상생 바우처 정보시스템 구축 3-3. 결제 시스템 구축 등				

\*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기능과 웹 호스팅 여부 등에 따라 사업비 규모는 유동적임

## ■ 재원조달방안

-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및 충남도 자체예산

## ■ 기대효과

- 도내 노무, 재무, 회계, 법률, 경영·기술 등 다양한 컨설팅 업체의 서비스 영역 확대
- 코로나 19로 인한 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의 다양한 컨설팅 수요 충족

### ■ 중요도 및 지역사회 기여도

- 중요도 3.626, 지역사회 기여도 3.424
  - 전체부문 내 순위 : 8위
  - 상생시스템부문 내 순위 : 4위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중소기업벤처부는 대학에 구축된 기술개발 인프라를 역량이 부족한 지역중소기업에 산학협력 거점으로 개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역량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중부권에 속해 있는 충남의 경우, 산학협력 거점대학으로 대전에 소재한 한밭대학교가 선정되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표 5-7] 권역별 산학협력 거점대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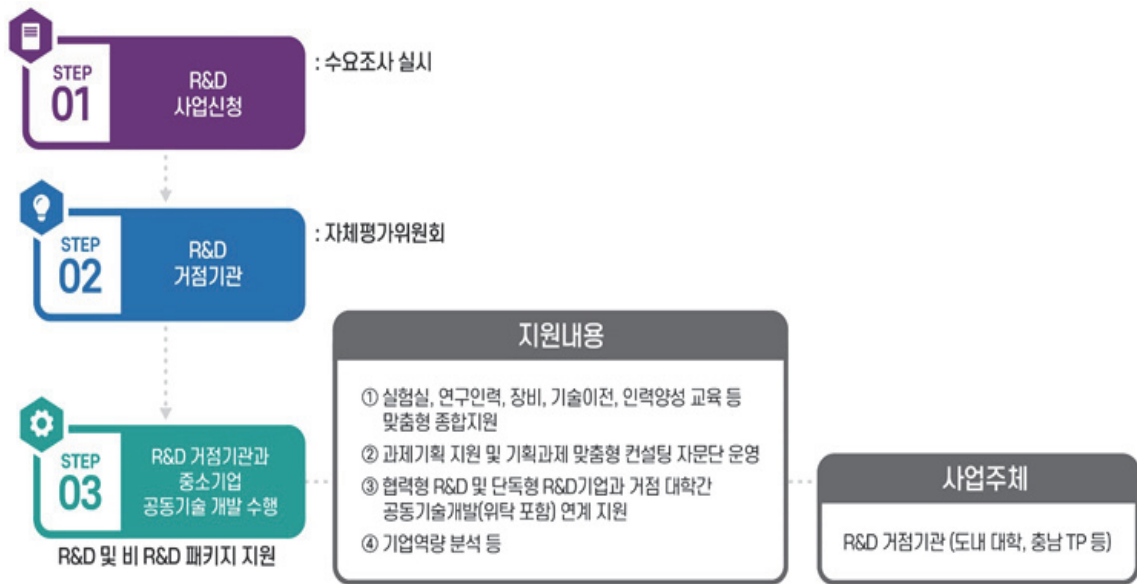
권역	해당지역	운영기관명	공고홈페이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sanhak.kpu.ac.kr
중부권	강원, 대전, 충북, 충남, 세종	한밭대학교	www.hanbat.ac.kr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전북대학교	rnbd.jbnu.ac.kr
대경권	대구, 경북	금오공과대학교	www.kumoh.ac.kr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창원대학교	www.changwon.ac.kr

- 충남도 차원의 산학협력 거점대학을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자체적 기술혁신 역량 지원 필요
  - 도내 중소기업은 POST 코로나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자체적 기술혁신 역량이 취약한 실정임
  - 대학 또는 충남 TP에 기 구축된 R&D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상·중위 기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수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지역 거점형 산·학협력 R&D 플랫폼 구축 요

### ■ 사업개요

- 사업명 : 충남 거점형 산학 협력 R&D플랫폼 구축
  - 사업내용 : 도내 R&D 거점기관 선정·운영
  - 지원내용 : ① 실험실, 연구인력, 장비, 기술이전, 인력양성 교육 등 맞춤형 종합지원, ② 과제기획 지원 및 기획과제 맞춤형 컨설팅 자문단 운영, ③ 협력형 R&D 및 단독형 R&D기업과 거점대학간 공동기술개발 연계 지원, ④ 기업역량 분석 등

- 사업방식 : 기술역량분석(1단계) → 맞춤형 R&D 및 비R&D 패키지 지원(2단계)



[그림 5-16] 충남 산학협력 R&D 플랫폼 구축사업 개요

## ■ 투자계획

[표 5-8] 단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재원	추진단계			
		합계	1단계('21~'23)	2단계('24~'26)	3단계('27~'30)
충남 거점형 산·학 협력 R&D 플랫폼 구축	합계	5,000		5,000	
	국비				
	지방비	5,000		5,000	
	민자				

## ■ 자원조달방안

### • 중앙부처 및 충남도

- 공모사업 : 중소기업벤처부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사업 및 혁신형 R&D-고도화 사업
- 충남도 자체예산 활용

## ■ 기대효과

- 지역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및 맞춤형 R&D인력의 기업체 취업 유도
- 고가 장비의 공동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의 연구역량강화 및 지역산업기술 향상

### ■ 중요도 및 지역사회 기여도

- 중요도 3.676, 지역사회 기여도 3.374
  - 전체부문 내 순위 : 7위
  - 상생문화부문 내 순위 : 3위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공유가치창출 등 사회적 가치실현 활동을 넘어 ESG경영이 확산되는 추세임
  - 고용노동부와 대기업 17개사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확산 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포용형 일자리 창출 추진(19.6.19)
  -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및 공유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등 사회적 가치실현 활동이 민간부문에도 확산되도록 적극 유도 要
  - 최근 들어, 기업이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투명하고 윤리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실천하는 ESG 경영이 기업경영의 핵심 키워드로 대두
    - ▶ 관련법제 :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법
    - ▶ 도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 수준 : 지역 농산물 구입, 협찬금 지원 등



### ■ 사업개요

- 사업명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 창출문화 확산

• 사업내용 :

- ① 충남 사회적 가치확산 공동선언문 발표
  - ▶ 도내 대기업 및 공공기관 참여
- ②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사회공헌프로그램 연계추진
  - ▶ 주거환경개선, 교육문화지원, 사회복지지원, 일자리 창출지원 프로그램 등을 기업과 연계추진
- ③ 공익 캠페인 합동추진
  - ▶ 자원순환 캠페인,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경영 캠페인 등



[그림 5-17] 충남 사회적 책임 및 공유가치 창출모델 확산

■ 투자계획

[표 5-9] 단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재원	추진단계			
		합계	1단계('21~'23)	2단계('24~'26)	3단계('27~'30)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창출 문화 확산	합 계	700		700	
	국 비				
	지방비	700		700	
	민 자				

■ 자원조달방안

- 대기업 자체추진사업 및 충청남도 사업연계
  - 사회공헌프로그램의 경우, 대기업 및 충청남도 기존사업(주거·교육·복지·일자리)과 연계추진

■ 기대효과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공유가치창출(CSV)문화의 선도 및 저변 확대
- 사회적 책임 기반의 충남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달성



### ■ 중요도 및 지역사회 기여도

- 중요도 3.353, 지역사회 기여도 3.097
  - 전체부문 순위 : 15위
  - 상생문화부문 내 순위 : 5위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상생협력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수행
  - 정부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현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국민경제 주체 전반에 걸친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모색 중임
  - 도내 포용적 경제 생태계 구축 및 다양한 경제주체 간 상생협력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선도적 퍼포먼스 행사추진 要

### ■ 사업 개요

- 사업명 : 충남 상생 한마당 개최
  - 개최시기 : 매년 말
  - 주요 프로그램
    - ▶ 충남 상생협력 비전 선포식(사업 초기년 限)
    - ▶ 충남 상생협력 MOU체결식(사업 초기년 限)

\* 상생협력 MOU 참여대상 : 충남도-중기부-동반성장위원회-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대기업(공기업 포함)-도 출연·출자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 TP,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일자리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등)-기타 정부 유관기관(중진공 등)-중견·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등

#### \* MOU체결 사항

- 상생협력 지역거점 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선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국가 동반성장평가 대상 도내 대기업 참여에 관한 사항
- 동반위 주도 상생협력포럼 공동 개최에 관한 사항
- 지역 상생모델 연계수행에 관한 사항
- 혁신성장 투어, 혁신기술구매 상담회, 스마트 공장 등 정부사업 참여에 관한 사항

- ▶ 충남형 자상한 기업(자율적 상생협력기업) 인증식 및 포상식
- ▶ 충남 상생협력기업 홍보부스 설치
- ▶ 충남 상생협력포럼 개최

- ▶ 대전 MBC, KBS, CMB등 공중파 언론 홍보
- ▶ 충남 상생한마당 공연 등



[그림 5-18] 충남 상생한마당

## ■ 투자계획

[표 5-10] 단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재원	추진단계			
		합계	1단계('21~'23)	2단계('24~'26)	3단계('27~'30)
충남 상생 한마당 개최	합 계	1,000	500	500	
	국 비				
	지방비	1,000	500	500	
	민 자				

## ■ 재원조달방안

- 중앙부처 및 충남도
  - 공모사업 : 중소기업벤처부 행사·네트워크 지원사업 및 충남도 자체예산 활용

## ■ 기대효과

- 도내 공공기관,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소상공단체 등을 아우르는 '만남의 場' 마련
- 도내 포용적 경제 생태계 구축 및 다양한 경제주체간 상생협력 문화의 저변 확산

### ■ 중요도 및 지역사회 기여도

- 중요도 3.782, 지역사회 기여도 3.470
  - 전체부문 내 순위 : 4위
  - 상생문화부문 내 순위 : 1위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공급사슬의 변화 등으로 주력 산업군이 산업·기술 전환기에 직면함
  - 충남도 주력산업 대부분은 이미 산업 및 기술 전환기와 맞물려 산업생태계 자체가 변화 중임
    - ▶ 도내 산업 및 기술전환기 업종 : 자동차 부품(내연기관),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철강 등
  - 이에 따라 기술변화 및 산업전환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방형 산업 융·복합 혁신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함
  - 환경 및 안전 규제 대응, 기술 및 시장변화 대응, 부품축소 및 생태계 변화 대응을 위한 이업종 및 동업종간 기술·정보·지식의 상호교류를 위한 '상생의 場' 마련 要

### ■ 사업 개요

- 사업명 : 혁신·상생 산학연관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Chungnam Network System, CNS)
  - 주요내용 : 기업단위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산·학·연·관 연계 및 교류 플랫폼 구축
    - ▶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상호 대등한 관계로 참여함으로써 네트워크의 경직화 및 형식화 방지
  - 추진방식 : CNS 운영 사무국 중심으로 도내 산학연 충남지역협회와 연계하여 추진
  - 세부사업 : ① CNS 공개강연회 및 교류회, ② CNS 기업강좌, ③ CNS 이브닝 포럼, ④ CNS 국제 심포지움, ⑤ CNS 연구회 활동, ⑥ CNS 기술상담회, ⑦ CNS 컨소시움 사업, ⑧ 중앙 부처 대형 프로젝트 공동 추진 등

#### \* 이와테 네트워크 시스템(Iwate Network System, INS)

- INS의 의미는 “맨날 술 마시고 떠든다(いつも飲んで騒ぐ[Itsumo Nonde Sawagu])”라는 일본어 표현의 머리글자 조합으로 술자리에서의 ‘격의 없음’이 상호간에 원활한 교류를 가능케 한다는 의미(자유롭고 개방적인 산학관 제휴 네트워크)
- 1992년에 정식으로 발족하였으며 이와테 대학 공학부에 사무국을 두고 있음
- INS의 총 회원수는 1,030명으로 産 530명, 學 200명, 官 300명으로 구성(40여 개의 연구회 조직)
- 통상적으로 산·학·관 연계조직은 기업단위로 가입하는데 반해 INS는 ‘개인 對 개인’의 자격으로 산·학·관 연계 및 이업종 교류 추진



[그림 5-19] 혁신·상생 산학연관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 ■ 투자계획

[표 5-11] 단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재원	추진단계			
		합계	1단계('21~'23)	2단계('24~'26)	3단계('27~'30)
4차 산업혁명 대응형 혁신·상생 네트워크 구축	합 계	1,000	1,000		
	국 비				
	지방비	1,000	1,000		
	민 자				

## ■ 재원조달방안

- 충남도 자체예산

## ■ 기대효과

- 4차 산업혁명 및 산업전환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학·연·관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 도내 기술·정보·지식의 상호교류를 위한 '상생의 場' 마련

### ■ 중요도 및 지역사회 기여도

- 중요도 3.613, 지역사회 기여도 3.395
  - 전체부문 내 순위 : 9위
  - 상생문화부문 내 순위 : 4위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공공주도의 지원대책이 민간부문의 상생협력수요에 정확히 부합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 노정
  - 민간의 현장수요 및 자율성·창의성에 기반하여 발굴·선정된 상향식(bottom-up) 상생협력 계획(LIP)에 지원함으로써 정책 효과성 제고 要
    - ▶ 민간 자율형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공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이 희망하는 경제상생협력 계획을 자율적으로 기획하는 지역발의 프로그램(Local Initiative Program, LIP)

### ■ 사업 개요

- 민간부문 주도의 상생협력 사업계획 및 지원, 지속적 모니터링
  - 지원대상 및 조건 : 중소·중견기업, 스타트업 기업(예비 창업자)
  - 제안분야 및 방식
    - ▶ 사업범위 : 사회·경제적 가치창출 전 분야
    - ▶ 제안방식 : 소정 양식에 의한 사업계획서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on-off 라인)
  - 선정방식
    -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효과성, 사업내용의 건전성, 사업계획의 지속성
    - ▶ 선정절차 : 서류심사 후 면접 및 현장확인
  - 지원내용
    - ▶ 재정지원 : 프로젝트 당 ○○원 또는 신규 일자리 임금의 일정비율(%)
    - ▶ 기타지원 : 회계, 법무, 세무, 마케팅, 경영분석 등 컨설팅 서비스 제공

#### \* 캐나다 패리사운드 지역의 LIP(Local Initiative Program) 개요

- 주요기능 : 지역 커뮤니티 전략계획에 대한 자금지원과 자문 서비스 제공
- 지원절차 : 지역주민 비즈니스 계획서 제출 → 계획서 심의선정 후 자금지원 → 자문서비스 제공
- 평가기준 : 경제성, 사회적 건전성, 지속성, 고용규모
- 자문 서비스 : 비즈니스 관리, 수익증대, 운영활성화 측면의 다양한 컨설팅
- 제안분야 : 커뮤니티 기반의 경제 및 지역발전, 관광, 온라인 비즈니스, 마케팅, 홍보, 조사 등



[그림 5-20] 민간주도의 상생협력 공모사업 절차

## ■ 투자계획

[표 5-12] 단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재원	추진단계			
		합계	1단계('21~'23)	2단계('24~'26)	3단계('27~'30)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민간참여 확산(공모사업)	합 계	3,000		3,000	
	국 비				
	지방비	3,000		3,000	
	민 자				

## ■ 재원조달방안

- 충남도
  - 공모사업 : 충남도 자체예산 활용

## ■ 기대효과

-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의 정책전달체계 전환을 통한 상생협력사업의 효과성 제고
- 민간부문의 상생협력수요에 기반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 ■ 중요도 및 지역사회 기여도

- 중요도 3.651, 지역사회 기여도 3.462
  - 전체부문 내 순위 : 5위
  - 상생문화부문 내 순위 : 2위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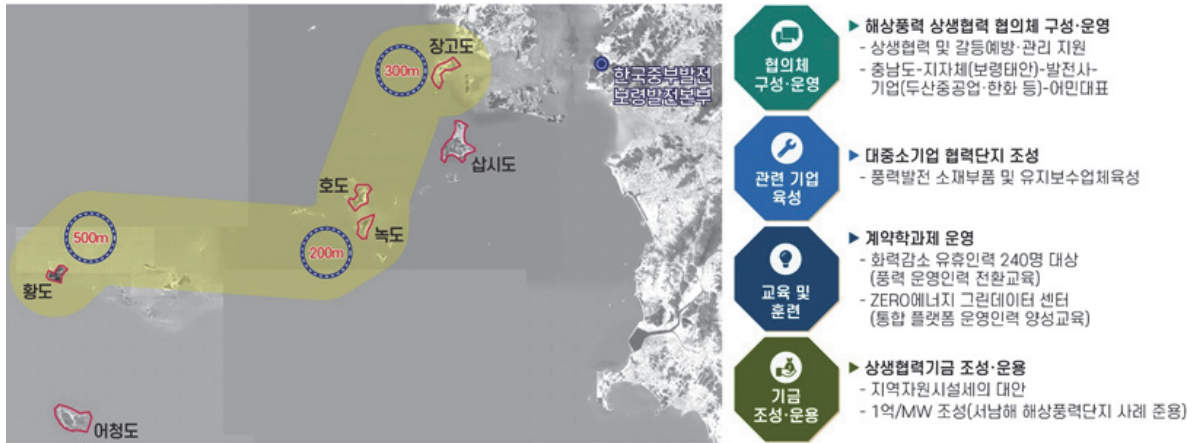
-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 추가폐쇄에 따른 태양광 및 해상풍력 단지 조성(그린 뉴딜의 일환)
  -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2034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20기 추가폐쇄(임기 내 10기)에 따른 태양광 및 해상풍력 단지 조성 추진
  -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은 보령과 태안의 섬 일원에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을 추진 중임
  - 향후 노후발전소 폐쇄 및 단지조성을 둘러싼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예상되는 바, 이해당사자 간 상생 방안이 지역 이슈로 대두될 전망

#### \* 서남해 해상풍력 갈등사례

- (조성규모) 실증단지(80MW) → 시범단지(420MW) → 확산단지(2,000MW)
- (갈등양상) 해상풍력 계획발표 후 주민반대 증폭 → 상생방안 마련 후 대화의 장 열림 → 피해보상에 대한 이견 발생에도 사업진행에 따른 갈등 지속
- (상생방안) 어업 피해보상 및 배상, 해상풍력단지 내 어장개발, 상생지원금 1억/MW, 바다양식 R&D 연구추진, 공존포럼 발족·운영
- (문제점) 사업자와 주민간 갈등해결 조정기구 및 자자체 역할 부재, 사업주의 미온적 대처로 갈등 잠재
- (시사점) 지역사회 수용성 조사, 법적 의무관계자와 직간접적 이해 당사자간 행정의 중재 및 조정역할, 공존협의체 운영 필요

### ■ 사업 개요

- ① 해상풍력 상생협력 협의체 구성 및 운영(상생협력 및 갈등예방·관리 지원)
  - ▶ 충남도-지자체(보령태안)-발전사-기업(두산중공업·한화 등)-어민대표
- ② 대중소기업 협력단지 조성
  - ▶ 풍력발전 소재·부품 및 유지·보수업체 육성
- ③ 교육·훈련(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제 운영
  - ▶ 풍력 운영인력 전환교육 및 zero에너지 그린데이터 센터(통합 플랫폼 운영인력 양성교육)
- ④ 상생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지역자원시설세의 대안)
  - ▶ 1억/MW 조성(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사례 준용)



\* 보령 : 설비용량 2GW, 총사업비 5조 2,000억원, 사업지역(장고도, 녹도, 황도 해상)

\* 태안 : 설비용량 400MW(72기), 발전량(98만 1,120MWh/년), 사업면적 78.5km<sup>2</sup>, 총 사업비 2조원, 사업지역(소원면 모항항 및 만리포 해상)

[그림 5-21] 해상풍력 발전단지 및 지역사회 상생모델 개요

## ■ 투자계획

[표 5-13] 단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재원	추진단계			
		합계	1단계('21~'23)	2단계('24~'26)	3단계('27~'30)
갈등시설과 지역사회간 상생문화 선도	합 계	51,000	51,000		
	국 비	40,000	40,000		
	지방비	11,000	11,000		
	민 자				

## ■ 재원조달방안

### • 중앙부처 및 기금

- 산업통상자원부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 및 인력양성사업(그린뉴딜 분야) 관련 예산
- 향후 해상풍력단지 조성·운영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활용

## ■ 기대효과

- 지역사회 내 갈등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갈등 요인을 상생협력방안으로 해소
- 도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조성의 원활한 추진 및 그린뉴딜 정책의 적극 수용



### ■ 중요도 및 지역사회 기여도

- 중요도 3.559, 지역사회 기여도 3.324
  - 전체부문 내 순위 : 11위
  - 상생인력·일자리부문 내 순위 : 3위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업체는 대부분 규모의 영세함으로 인해 자체 혁신역량을 강화시킬 전문지식을 갖춘 경영 및 기술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중소벤처기업부 산하단체)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선도하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회원조직으로 대전·충남·세종지회를 운영 중임
- 따라서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대전·충남·세종지회와 연계하여 현장 클리닉 성격의 기술·경영 애로에 대한 컨설팅 지원 제공 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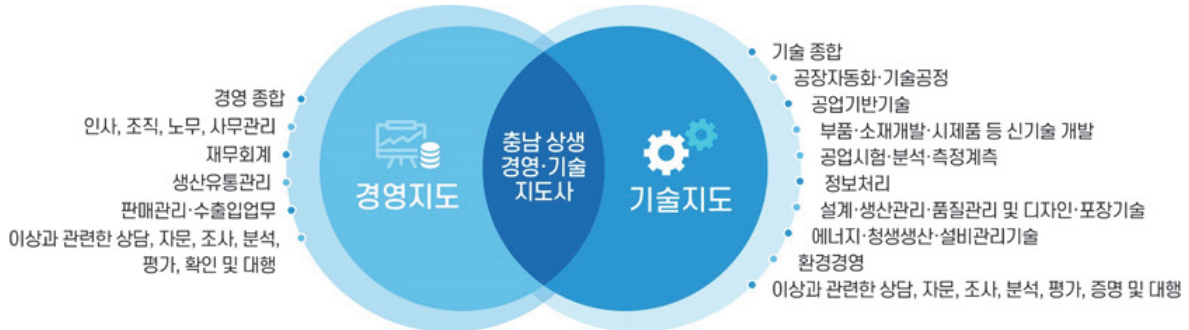
#### \* 대전 마을 경영지도사 사업 사례

- (사업목적) 대전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 맞춤형 경영·기술 지원
- (사업방향) 경영기술지도사 무료상담 서비스 및 심화컨설팅, 정부지원사업 연계지원, 사후관리
- (지원대상) 대전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 (상담분야) 창업·벤처, 경영전략, 마케팅, 수출입, 재무·금융, 인사·노무, 특허·기술, 정보화, 융합기술, 생산관리
- (운용방식) 전문가 POOL 구성 → 상담편성 → 상담 및 사후관리
- (추진일정) 시범운영(2019) → 확대운영(2020) → 확대 지속운영(2021년 이후)
  - ▶ 현재, 대면 컨설팅의 성격 상 코로나 19로 잠정 중단
- (등록현황) 경영지도사 278명, 기술지도사 138명

### ■ 사업개요

- 사업명 : 충남 상생 경영·기술 지도사 운영
  - 사업방향 : ① 컨설팅 전문역량을 갖춘 경영기술지도사가 재능기부로 무료상담 서비스 제공  
②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1:1로 전문가를 매칭하여 심화컨설팅 또는 정부지원 사업 연계지원 및 사후관리
  - 지원대상 : 충남도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 상담분야 :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 운용방식 : 전문가 POOL 구성 → 상담편성 → 상담 및 사후관리

- 추진일정 : 한국경영지도사회와 MOU체결(2021) → 시범운영(2021) → 확대운영(2021년 이후)
- 추진방식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대전·충남·세종지회와 연계하여 추진  
재능기부형태로 추진하되, 교통비 및 식사비 수준의 비용 지불



[그림 5-22] 충남 상생 경영·기술 지도사 상담분야

## ■ 투자계획

[표 5-14] 단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재원	추진단계			
		합계	1단계('21~'23)	2단계('24~'26)	3단계('27~'30)
공공기관 연계형 상생 경영·기술 지도사 운영	합 계	300	150	150	
	국 비				
	지방비	300	150	150	
	민 자				

## ■ 자원조달방안

- 비예산 사업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와 연계하여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
  - 최소한의 경비(식비, 교통비 등의 운영비용)는 충남도 자체예산 활용

##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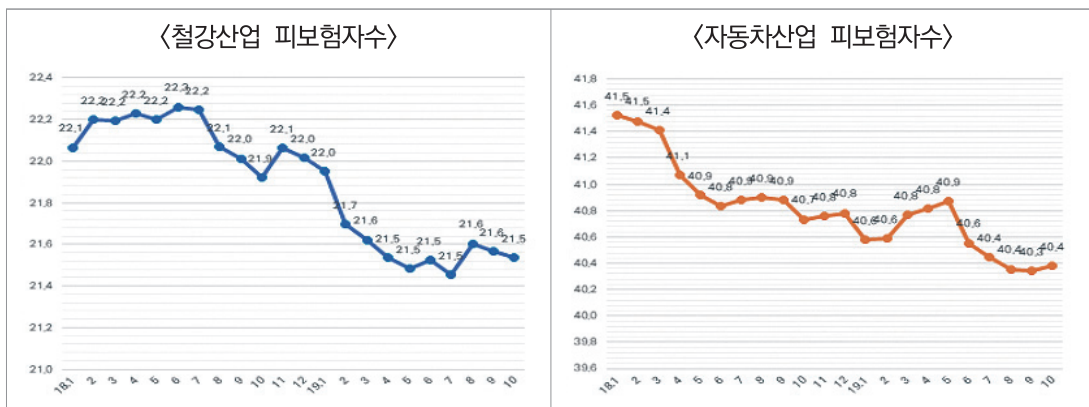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현장 기술·경영 애로 해소 및 역량강화
- 기존 기술·경영지도 인력 및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사업비 절감 및 시너지 효과 제고

### ■ 중요도 및 지역사회 기여도

- 중요도 3.878, 지역사회 기여도 3.462
  - 전체부문 내 순위 : 2위
  - 상생인력·일자리부문 내 순위 : 2위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충남 주력산업 중 일부는 고용위기 상황에 처한 실정
  - 현재, 충남의 주력산업 대부분은 글로벌 경기침체 및 코로나 19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전반적 침체 상태이자, 성숙단계 또는 산업 전환기에 접어들어 향후 노동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전망
    - ▶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지표 악화 업종 : 관광서비스업(숙박 및 음식점업)
  - 산업위기 및 고용위기 시 구인-구직 간 미스매칭이 발생하므로,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 기반의 구인-구직간 상생 매칭시스템 구축 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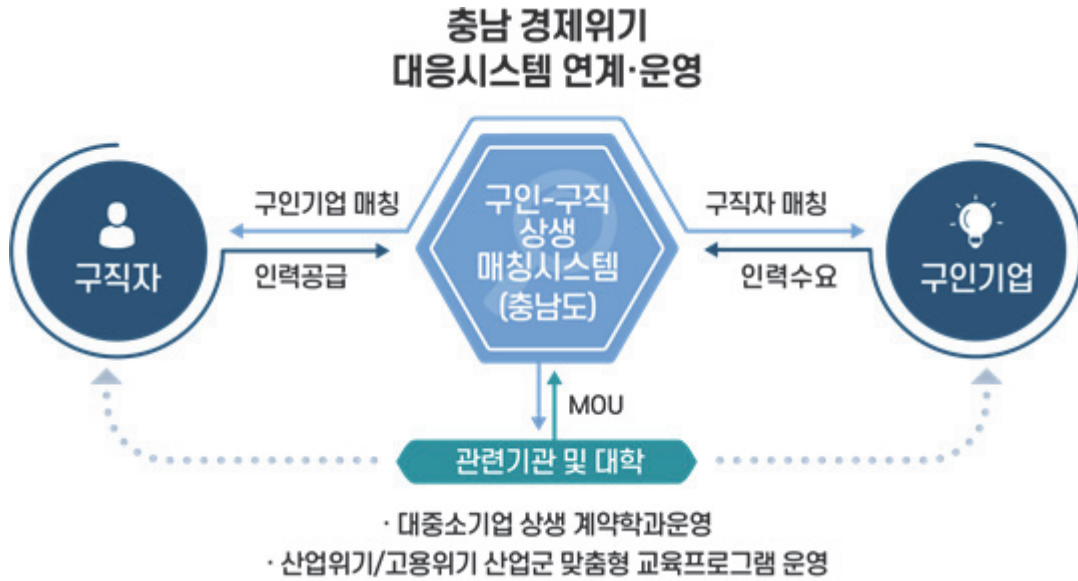


### ■ 사업개요

#### • 사업내용

- ① 분기별 인력수급 조사 실시(충남 일자리 진흥원\_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 산업위기 및 전환기에 직면한 업종 대상 교육·훈련수요 및 양성수요조사 실시
- ② 산업위기 및 전환기, 고용위기 산업군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비
  - ▶ 관련기관 MOU체결을 통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③ 교육기관 인력양성 프로그램 발굴
  - ▶ 대·중소기업 상생형 계약학과 운영

④ 충남 경제위기 대응시스템 연계·운영



[그림 5-23] 산업 및 고용위기 대응형 구인-구직 매칭시스템

■ 투자계획

[표 5-15] 단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재원	추진단계			
		합계	1단계('21~'23)	2단계('24~'26)	3단계('27~'30)
산업 및 고용위기 상시 대응형 구인·구직 매칭 시스템 구축	합 계	500	500		
	국 비				
	지방비	500	500		
	민 자				

■ 재원조달방안

- 중앙부처 및 기존사업 연계
  - 공모사업 :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산업통상자원부 인력양성사업\_채용연계형 계약학과)
  - 기존사업 : 충남 인자위 인력수급조사 연계 등

■ 기대효과

- 산업전환기 및 고용위기에 직면한 업종 대상 원활한 인력수급 시스템 구축
- 충남 주력산업군에 속한 업종 내 구인-구직간 미스매칭 해소

### ■ 중요도 및 지역사회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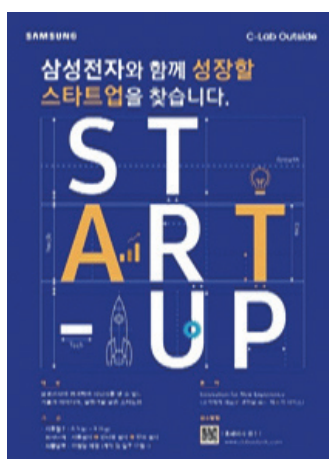
- 중요도 3.878, 지역사회 기여도 3.462
  - 전체부문 내 순위 : 1위
  - 상생인력·일자리부문 내 순위 : 1위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역기반 엑셀레이팅(Accelerating) 부재
  - 도내 체계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지역기반 엑셀레이팅 부재 등으로 창업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 도내 대기업 보유기술 및 특허, 기반시설 등을 협력사 및 새싹기업(Start-up)에 공유·개방·지원함으로써 협력사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미래 협력사를 발굴·육성하는 상생 생태계 구축 要
  - ▶ 삼성전자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 C-Lab(Creative Lab)을 통해 2년 동안 32개 새싹기업 창업(spin-off)

#### \*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한 Start-up생태계(창업 → 민간투자 → 성장) 구축사례

- 삼성 보유의 특허 무상양도 및 컨설팅 지원, 창업 보육공간 제공 및 장비지원, 기술경영 교육 (시행 전) ▶ 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지역기반 엑셀레이팅 부재로 창업투자환경 미흡
  - ▶ 지역 메이커 스페이스 인프라, 공간 및 참여프로그램 부족
  - ▶ 기술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IP확보여력 부족으로 창업 걸림돌로 작용
- (시행 후) ▶ 창업전반의 체계적인 관리지원과 지역기반 투자환경 개선(C-Lab엑셀레이팅)
  - ▶ 삼성의 공간·장비지원을 통해 특화공간 조성 및 메이커 플랫폼 구축
  - ▶ 삼성 보유 특허의 무상양도 및 컨설팅 지원으로 스타트업 IP 경쟁력 확보



## ■ 사업개요

### • 사업내용

- ① 도내 대기업 특허 개방·양도 추진
- ② 창업보육 공간 제공
- ③ 메이커 플랫폼 구축
- ④ 멘토링 및 컨설팅, 기술·경영교육 지원
- ⑤ 상생펀드 조성

### • 추진방안

- 창업보육 공간 및 메이커 플랫폼은 복합형 스타트업 파크와 연계 추진



[그림 5-24] 대기업 중소·Start-up기업 상생생태계 조성

## ■ 투자계획

[표 5-16] 단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재원	추진단계			
		합계	1단계('21~'23)	2단계('24~'26)	3단계('27~'30)
대기업&중소·Start-up 기업 상생생태계 구축	합 계	5,000	5,000		
	국 비				
	지방비	1,000	1,000		
	민 자	4,000	4,000		

## ■ 재원조달방안

### • 중앙부처 및 기존사업 연계

- 공모사업 : 중소기업벤처부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 지원사업(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 물리적 공간조성의 경우, 향후 복합형 스타트업 파크조성과 연계추진

## ■ 기대효과

-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및 새싹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대기업 협력사 발굴
- 조성 예정인 복합형 스타트업 파크의 성공률 제고 및 지역 창업투자환경 활성화

## 5. 추진체계 및 실행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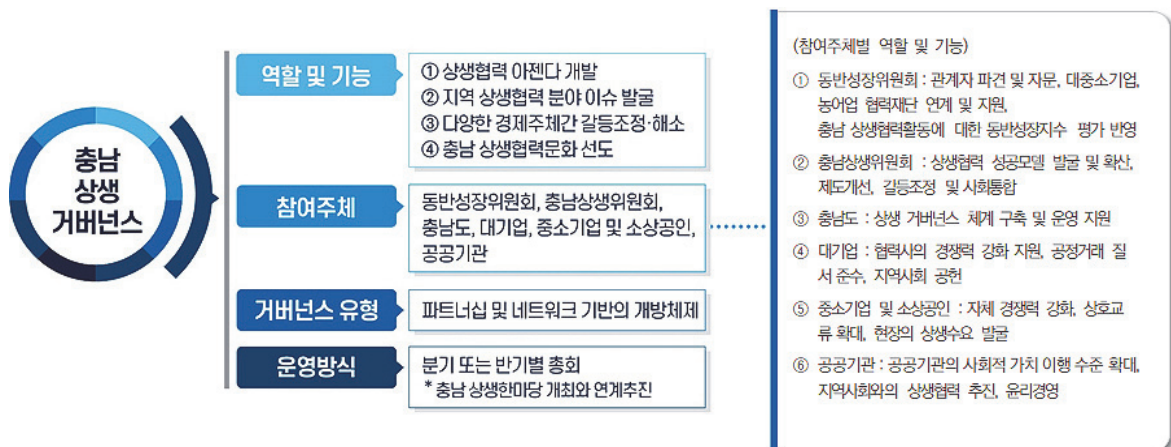
### 1) 충남 상생 거버넌스 체계 구축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상생협력 정책추진 및 독자적인 아젠다 개발에 필요한 지역차원의 이니셔티브(regional governance initiative)가 부족한 실정임
  - 포용적 상생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 행정, 공공기관, 민간부문 등을 총 망라한 충남 지역단위 상생 거버넌스체계 구축 要

#### ■ 충남 상생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

- 역할 및 기능
  - 상생협력 아젠다 개발, 지역 상생협력분야 이슈발굴, 다양한 경제주체간 갈등조정·해소
- 참여주체
  - 국가단위 : 동반성장위원회
  - 지역단위 : 충남상생위원회, 충남도, 대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공기관 등
- 거버넌스 유형
  -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 기반의 개방체계(open system)
- 운영방식
  - 분기 또는 반기별 총회(충남 상생한마당 개최와 연계추진)



[그림 5-25] 충남 상생 거버넌스 체계와 참여주체별 역할 및 기능



## 2) 충남 경제상생협력 실행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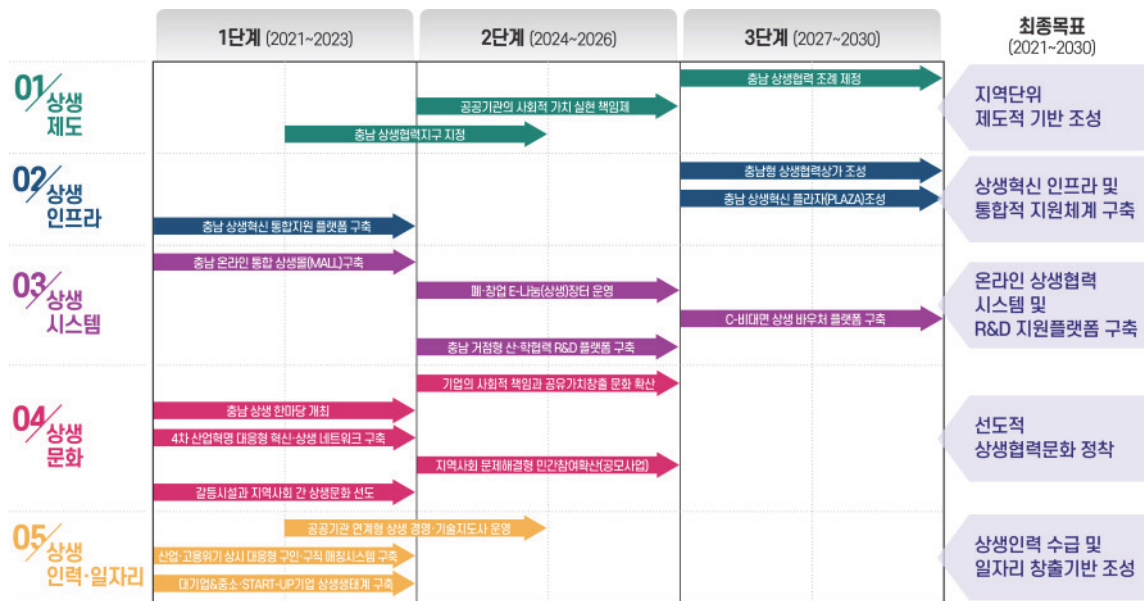
### ■ 충남 경제상생협력 실행로드맵 구성요인

#### • 5대 부문별 최종목표

- 상생제도 : 지역단위 제도적 기반 조성
- 상생인프라 : 상생혁신 인프라 및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상생시스템 : 온라인 상생협력 시스템 및 R&D지원플랫폼 구축
- 상생문화 : 선도적 상생협력문화 정착
- 상생인력·일자리 : 상생인력 수급 및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

#### • 설문조사결과(중요도 및 기여도 평균값 순위)에 따른 추진단계별 구분

- 1단계(단기) : 2021~2023년
- 2단계(중기) : 2024~2026년
- 3단계(장기) : 2027~2030년



\* 재원확보 여부에 따라 추진일정은 변동 가능

[그림 5-26] 충남 상생협력 핵심과제 실행 로드맵



[표 5-17] 충남도 상생협력 핵심과제 우선순위

부 문	핵심과제	중요도	기여도	순위*	추진시기	비 고**
상생제도	충남 상생협력지구 조성	3.147	2.950	18	장기	3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책임제 도입	3.601	3.319	10	중기	2
	충남 상생협력 조례 제정 및 추진체계 구축	3.403	3.143	14	장기	1.5
상생인프라	충남형 상생협력상가 조성	3.214	3.021	17	장기	3
	충남 상생혁신 플라자 조성	3.273	3.080	16	장기	3
	충남 상생혁신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3.693	3.412	6	단기	1
상생시스템	C비대면 컨설팅 서비스 공급시스템 구축	3.424	3.235	13	장기	3
	페·창업 e-나눔장터 운영	3.563	3.298	12	중기	2
	충남 거점형 산·학협력 R&D 플랫폼 구축	3.626	3.424	8	중기	2
상생문화	충남 온라인 쇼핑 통합 플랫폼 구축	3.803	3.475	3	단기	1
	4차 산업혁명 대응형 산학연관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3.782	3.470	4	단기	1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 창출모델 확산	3.676	3.374	7	중기	2
상생인력일자리	충남 상생 한마당 개최	3.353	3.097	15	장기	1.5
	민간 자율형 상생협력 공모사업	3.613	3.395	9	중기	2
	주민길등 유발시설에 대한 지역사회 상생모델 구축	3.651	3.462	5	단기	1
상생인력일자리	대기업&중소·Start-up기업 상생생태계 구축	3.861	3.555	1	단기	1
	공공기관 연계형 상생 경영·기술지도사 운영	3.559	3.324	11	중기	1.5
	산업 및 고용위기 상시대응형 구인·구직 매칭시스템 구축	3.878	3.462	2	단기	1

\* 순위기준 : 중요도와 기여도 평균값.

\*\* 다만,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일부 핵심과제의 경우, 추진시기를 앞당겨 조정.

## 6. 투자계획

### ■ 부문·재원·연도별 실행예산 추정

#### • 투자계획 총괄

- ‘더불어 상생하고 함께 공존하는 더 행복한 충남경제’ 구현을 위해 ’21~’30년간 총 110,000백만원 소요 추정
- 단, 사업규모 및 국비 등의 예산확보 수준에 따라 투자계획은 유동적임

#### • 부문별 투자계획

- 상생제도 : 비예산 사업
- 상생인프라 : 40,500백만원(36.8%)
- 상생시스템 : 7,000백만원(6.4%)
- 상생문화 : 56,700백만원(51.5%)
- 상생인력·일자리 : 5,800백만원(5.3%)

#### • 재원별 투자계획

- 국비 : 60,000백만원(54.5%)
- 지방비 : 46,000백만원(41.8%)
- 민자 및 기타 : 4,000백만원(3.6%)

#### • 연도(단계)별 투자계획

- 1단계(’21~’23) : 59,150백만원(53.8%)
- 2단계(’24~’26) : 9,850백만원(9.0%)
- 3단계(’27~’30) : 41,000백만원(37.3%)

[부문별 총 사업비]

(단위 : 백만원, %)

합 계	상생제도	상생인프라	상생시스템	상생문화	상생인력 및 일자리
110,000	-	40,500	7,000	56,700	5,800
(100.0)	(0.0)	(36.8)	(6.4)	(51.5)	(5.3)

[자원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합 계	국비	지방비	민자 및 기타
110,000	60,000	46,000	4,000
(100.0)	(54.5)	(41.8)	(3.6)

[연도(단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합 계	1단계('21~'23)	2단계('24~'26)	3단계('27~'30)
58,000	59,150	9,850	41,000
(100.0)	(53.8)	(9.0)	(37.3)

[그림 5-27] 부문·자원·연도별 투자계획

## 참고문헌

- 김광석 외(2020), 미래시나리오 2021, 길벗.
- 경기연구원(2015), 경기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와 정책과제.
- 관계부처합동(2020),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산업연구원(2017), 제4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수립방향연구.
- 산업자원부(2008), 제1차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추진기본계획.
- 산업통상자원부(2014),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 신동호(2020), 충남 경제상생협력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 충남연구원 현안과제.
- 중소기업연구원(200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중소기업연구원(20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대기업 내부역량 개방공유 확산방안 마련.
- 지식경제부(2011), 제2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 한국법제연구원(2018), 상생협력법상 대·중소기업간 협력강화 방안연구.
- 한국중소기업학회(2006),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발전모델.
- 한국은행(2020), 국제경제리뷰, 제2020-21호.
- 행정안전부(2018), 사회적 가치구현 지자체 경진대회 우수사례집.

## 부 록

### 설문조사지 전문가 대상

No. 

--	--	--	--

## 【충청남도 경제상생협력 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충청남도 경제상생협력 실태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정책방향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됩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귀하가 답변한 설문내용 및 개인 신상은 「통계법」 제 33조, 34조에 의해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됩니다.

귀하의 답변이 충청남도 내 경제상생협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 11  
(재)충남연구원

### 동반성장 또는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

1. 귀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동반성장 또는 상생협력 대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2. 귀하는 향후 대·중소기업·소상공인·공공기관 상호간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반대      ② 반대      ③ 보통      ④ 찬성      ⑤ 매우 찬성

3. 귀하는 충남도의 동반성장 또는 상생협력 추진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      ② 필요      ③ 보통      ④ 불필요      ⑤ 매우 불필요

4. 귀하는 동반성장 또는 상생협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주체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기업      ② 정부(충남도)      ③ 출연출자 공공기관      ④ 경제단체      ⑤ 중소기업

5. 동반성장 또는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호간 파트너십 유지                      ② 관련 법·제도의 강화
- ③ 정부(충남도)의 적극적인 정책지원        ④ 시장중심의 자율적인 상생협력(동반성장) 문화 확산

6. 귀하가 생각하는 필요한 상생협력 분야는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 ① 기술분야      ② 연구개발분야      ③ 창업분야      ④ 판로분야      ⑤ 생산분야  
⑥ 인력분야      ⑦ 해외진출분야      ⑧ 마케팅분야

7.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또는 상생협력을 위한 대기업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R&D, 생산성 향상, 인력양성 등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 지원
- ② 국내·외 판로개척, 판매 및 구매 지원을 통한 협력사 성장기회 제공
- ③ 보증 및 대출 지원 등을 통한 협력사 경영안정 기여
- ④ 상생협력 문화 확산 및 공정거래 질서 준수

8. 대기업과의 동반성장 또는 상생협력을 위해 중소기업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R&D투자 확대, 설비 투자 등을 통한 중소기업 자체 경쟁력 강화
- ② 내수 중심, 하도급 거래에서 탈피하여 해외 시장 진출 확대
- ③ 거래조건 개선 등 중소기업 상호 간 공정거래 개선
- ④ 대기업 의존에서 탈피하여 중소기업 간 상호 교류 확대

9.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생협력 문화의 저변 확대
- ② 공공구매 및 입찰·계약 시 지역업체 우대
- ③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이행수준 확대
- ④ 상생협력을 위한 거버넌스체계(협의체계) 구축
- ⑤ 다양한 상생협력 사업의 발굴 및 적극 시행

\*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의 내용을 꼭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 책 방 향	주 요 내 용
충남 상생협력지구 지정	해당 지구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지역 지정
2. 충남형 상생협력상가 조성	빈 점포, 전통시장(장옥), 유희 공공시설에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한 상생협력상가 조성
3. 충남 상생혁신 플라자(Plaza) 조성	시민, 대학생, 퇴직자, 예비 창업자 등을 위한 소상공 창업 인큐베이팅 거점시설 조성
4.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책임제 도입	충남도(시군), 도 출연·출자 기관의 공공구매 및 입찰계약 시 사회적 책임조달 강화, 지역과의 상생방안 마련 및 시행 의무화 등
5. 산업(고용)위기 대응형 구인-구직 매칭시스템 구축	산업전환기 및 고용위기에 직면한 업종 대상 상시 교육훈련조사 및 관련인력 양성으로 부족한 인력의 적시 공급체계 구축
6. 비대면 컨설팅 서비스 공급시스템 구축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
7. 4차 산업혁명 대응형 산학연관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도내 주력산업의 전환기 및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학연관 혁신 네트워크 구축
8. 폐·창업 e-나눔장터 운영	폐업자의 처리물품과 창업자의 필요물품을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9. 충남 상생 한마당 개최	도내 상생협력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매년 관련 경제주체 모두가 참여하는 '상생의 장(場)' 개최
10. 충남 온라인 쇼핑 통합 플랫폼 구축	농특산물은 물론 청년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제품 등을 거래하는 온라인 장터 구축
11. 민간 자율형 상생협력 공모사업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민이 자율적으로 기획하는 상생협력계획에 지원하는 프로그램
12. 충남 상생혁신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수요자 맞춤형 지원사업 정보제공 및 해당기관 중개 외 충남도 상생협력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창구 구축
13. 주민갈등 유발시설에 대한 지역사회 상생모델 구축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상생협력 협의체 구성, 상생협력 자금조성, 지역민과 공존할 수 있는 상생사업 발굴
14. 대기업 & 중소·Start-up기업 상생생태계 구축	도내 대기업의 등록 특허개방·양도,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스타트업 대상 창업·보육공간 제공, 대기업-충남도 공동 펀드 조성 등
15. 공공기관 연계형 상생 경영·기술지도사 운영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대전·충남·세종지회와 연계하여 상생협력에 필요한 현장 클리닉 성격의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16. 충남 거점형 산·학협력 R&D 플랫폼 구축	대학 내 실험실·연구인력·장비 등을 활용하여 상·중위기술 중소기업의 R&D수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지역단위 플랫폼 운영
17.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 창출모델 확산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공생,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상생모델 발굴·확산
18. 충남도 차원의 조례 제정 및 추진체계 구축	최근 발의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기본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법 등을 아우르는 조례제정과 사업 추진체계 정비

10. 향후 동반성장 또는 상생협력 정책방향의 중요도 및 기여도를 평가하여 주십시오.

- ① 귀하께서는 상생협력을 위해 아래의 정책방향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정책방향별로 각각 체크(√)해 주십시오. ② 향후 이러한 정책방향들이 실현된다면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각각 체크(√)해 주십시오.

정 책 방 향	① 중요도					② 지역사회 기여도				
	전혀 중요치 않다	중요치 않다	보통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1. 충남 상생협력지구 지정										
2. 충남형 상생협력상가 조성										
3. 충남 상생혁신 플라자(Plaza) 조성										
4.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책임제 도입										
5. 산업(고용)위기 대응형 구인-구직 매칭시스템 구축										
6. 비대면 컨설팅 서비스 공급시스템 구축										
7. 4차 산업혁명 대응형 산학연관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8. 폐·창업 e-나눔장터 운영										
9. 충남 상생 한마당 개최										
10. 충남 온라인 쇼핑 통합 플랫폼 구축										
11. 민간 자율형 상생협력 공모사업										
12. 충남 상생혁신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13. 주민갈등 유발시설에 대한 지역사회 상생모델 구축										
14. 대기업 & 중소·Start-up기업 상생생태계 구축										
15. 공공기관 연계형 상생 경영·기술지도사 운영										
16. 충남 거점형 산·학협력 R&D 플랫폼 구축										
17.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 창출모델 확산										
18. 충남 상생협력 조례 제정 및 추진체계 구축										

	답변자 정보	
--	--------	--

11. 통계분석을 위한 자료이니 꼭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성 <input type="checkbox"/> 여성	소재지	(                      )시/군
연령	<input type="checkbox"/> 30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40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50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60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60세 이상		
재직기관	<input type="checkbox"/> 행정기관 <input type="checkbox"/> 연구기관 <input type="checkbox"/> 유관기관 <input type="checkbox"/> 단 체 <input type="checkbox"/> 기 타(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No. 

--	--	--	--

**【충청남도 경제상생협력 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충청남도 경제상생협력 실태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귀하가 답변한 설문내용 및 개인 신상은 「통계법」 제 33조, 34조에 의해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됩니다.

귀하의 답변이 충청남도 내 경제상생협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 11

(재)충남연구원

**상생협력 인지도 및 참여경험****1. 귀하는 충남도내 지역사회의 상생 및 협력사업(활동)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 ① 모르겠음      ②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는 못함      ③ 알고 있음      ④ 잘 알고 있음

**2. 귀하는 상생협력사업(활동)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없음(3번으로)      ② 한번정도 있음      ③ 조금 있음(2~3회)      ④ 주기적, 정기적으로 참여함

**2-1. (2번의 ②, ③, ④에 답한 경우) 귀하께서 참여하신 상생협력 활동의 주체는 어디였습니까?**

- ① 기업      ② 공공기관      ③ 관련 기업 모임      ④ 기타(                      )

**2-2. (2번의 ②, ③, ④에 답한 경우) 참여하신 프로그램은 귀하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되었음      ② 다소 도움이 되었음      ③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음      ④ 오히려 피해를 입었음

3. (2번의 ①에 답한 경우)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부족  
② 소수(기관, 업체 등)에게만 혜택 편중  
③ 참여에 따르는 간접 우려  
④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음  
⑤ 기 타

##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

4. 귀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동반성장 또는 상생협력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5. 귀하는 향후 대·중소기업·소상공인·공공기관 상호간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반대                      ② 반대                      ③ 보통                      ④ 찬성                      ⑤ 매우 찬성

6. 귀하는 충남도의 동반성장 또는 상생협력 추진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      ② 필요      ③ 보통      ④ 불필요      ⑤ 매우 불필요

7. 귀하는 동반성장 또는 상생협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주체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기업                      ② 정부(충남도)                      ③ 출연출자 공공기관                      ④ 경제단체                      ⑤ 중소기업

## 답변자 정보

8. 통계분석을 위한 자료이니 꼭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성 <input type="checkbox"/> 여성	소재지	(                      )시/군
연령	<input type="checkbox"/> 30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40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50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60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60세 이상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여연구진 및 연구자문

주 관 기 관	충청남도	
연구수행기관	충남연구원	
연 구 책 임	신동호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내부연구진	김종화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강수현	충남연구원 연구원
	송민정	충남연구원 연구원
행 정 지 원	이상국	충청남도 경제상생협력팀장
	서기숙	충청남도 경제상생협력팀 주무관
	권영인	충청남도 경제상생협력팀 주무관

